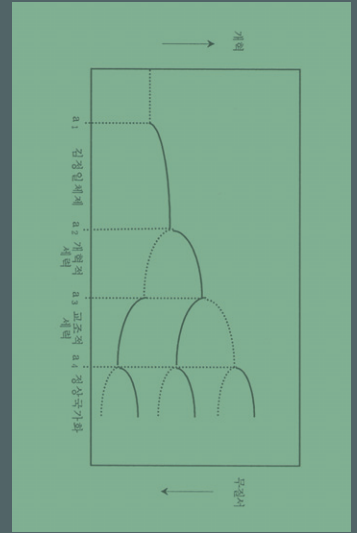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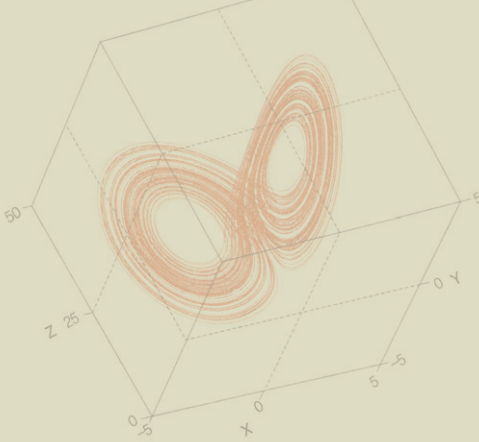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석 · 김창욱 · 양문수 · 이석기 · 김은영

www.kinu.or.kr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산업대학교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7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02-2272-1767)

인 쇄 처 양동문화사

가 격 9,000원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 이석, 김창욱, 양문수, 이석기, 김은영 [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9-16-03)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530-3 93340 : ₩9,000

북한 경제[北韓經濟]

계획 경제[計劃經濟]

322.11-KDC4

338.95193-DDC21

CIP2009004210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통일연구원
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한국개발연구원
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서울산업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국 신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팀장)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조 정 아 연구위원 박 영 자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석 부연구위원 김 창 욱 수석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양 문 수 부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석 기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 은 영 주임연구위원
	서울산업대학교	민 병 원 교수 조 동 준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 치 욱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목차

C o n t e n t s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석, 김창욱, 양문수, 이석기, 김은영

제 1장 머리말 / 1

제 2장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와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필요성

01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가. 비공식화 가설의 한계 9 나. 계획경제 가설의 한계 11 다.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 인식론적 한계 13
02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 극복을 위한 복잡계적 방법론	가. 경제 시스템 변화의 일반 인식론 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 15 나. 경제 시스템 변화의 현실 사례로서의 북한 시장화와 복잡계적 접근방법 17 다. 북한 시장화 분석을 위한 복잡계적 접근의 기술적 다양성과 적합성 19
03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가. 연구의 목적 함수들-시스템 변화의 정량 방정식 도출을 목표로 28 나. 본 연구의 방법-시스템 변화의 기본 요인 도출과 구조화 30
04 〈보론〉 경제시스템 변화의 일반론 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과 북한 연구에의 시사점	가. 등장배경 33 나. 분석대상과 시사점 36 다. 분석방법 39

제 3장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 틀의 재정립

01 복잡계 이론의 재해석	가. 세계관으로서의 복잡계 이론 47 나. 복잡계 이론의 두 축: 자기조직화와 진화 48
----------------	---

02 경제시스템 이행의 복잡계적 이해	가. 경제시스템의 특성	52
	나. 경제시스템의 구조	54
	다. 경제시스템 지속의 조건	56
	라.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58
03 북한경제 이행의 복잡계적 분석들	가. 복잡계 관점의 시사점	61
	나. 북한 시장화 분석의 시점(視點)	64

제 4 장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01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영원리	가. 제도로서의 경제 시스템	75
	나. 경제시스템의 운영: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가능 정합성	81
	다. 경제시스템의 위기: 주체의 경제와 가능 정합성의 붕괴	84
	가. 주체의 경제에서의 가능 정합성 붕괴 - 1980년대 곡물무역	87
02 북한의 시장화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나. 1990년대 초기의 일탈행위와 제한적 시장화	90
	다.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쇼크와 기존 시스템의 행위 정합성 붕괴	92
	라. 새로운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1: 개별 경제주체의 시장행위와 원시 시장화 (Primitive Marketisation)	94
	마. 새로운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2: 원시 시장화와 계획경제의 변화	96
	바. 소결: 시스템의 자기조직화로써의 북한의 시장화	99

03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진화 - 시장의 제도화와 시스템의 변모	가. 자기조직화로 등장한 시장규칙의 제도화	99
	나.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운영원리: 시장에 근거한 계획경제	103
	다. 시장을 전제로 한 경제정책과 시장 자체의 제도화	105
	라. 소결: 경제시스템의 진화로서의 시장화	108
04 돌발적 진화와 점진적 진화 -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또 다른 시장의 자기조직화(?)		109

제 5장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01 전제적 논의: 시장화에 대한 일반론	가. 통상적인 경우	118
	나. 복잡계의 관점	120
02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 창발과 자기조직화	가. 시장 참여: 행위자의 행태	121
	나. 강화 피드백	125
	다. 새로운 시스템의 행위작가능적 정합성	127
	라. 시장의 제도화 미진전과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불능	128
03 북한에서의 시장의 발전: 진화와 적응	가. 새로운 제도적 환경: 7·1 조치	129
	나. 시장 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 행위자의 행태	130
	다. 시장 발전에 대한 강화조절 피드백	132
	라. 새로운 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	139
	마. 시장 제도화의 후퇴와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혼란	142

제 6장 **북한 기업의 변화와 행위자 분석**

01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원형: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		149
02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행태 변화와 시장의 발생과 확산	가. 계획화 체계의 해체와 시장관계의 발생	151
		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158
		다. 소결: 기업에 의한 시장관계의 자기조직화와 확산	164
03	국가에 의한 선별로서의 7·1 조치	가. 7·1 조치와 기업관리체계	169
		나. 7·1 조치 이후: 새로운 일탈행위와 자기조직화	173
04	평가와 전망		177

제 7장 **맺음말 / 185**

참고문헌 / 19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7

〈표 II-1〉 시장 부존재의 균제상태 예시	20
〈표 II-2〉 부분적 시장제도화의 균제상태 예시	22
〈표 II-3〉 시장화에 따른 시스템 변화의 균제상태 예시	24
〈표 IV-1〉 1975~1980년 북한의 전체 무역과 곡물무역 비교	88
〈표 IV-2〉 북한의 곡물무역 현황, 1981~1989년	89
〈표 V-1〉 농민시장(암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판매) 행위의 제유형	124
〈표 V-2〉 1990년대 북한주민들의 공식임금과 비공식수입: 탈북자들의 경험	125

〈그림 II-1〉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함수체계	27
〈그림 II-2〉 시장화를 통한 시스템 변화요인 도출 방법 및 프로세스	31
〈그림 III-1〉 경제시스템의 3층위와 이들의 상호작용	55
〈그림 III-2〉 경제시스템의 진화과정	61
〈그림 IV-1〉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	80
〈그림 IV-2〉 북한의 공업생산: 1946~1996년	83
〈그림 IV-3〉 북한의 곡물생산: 1946~1996년	83
〈그림 V-1〉 영자네 옷가게 생산 및 유통과정	136

제1장

머리말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제1장

머리말

만일 국제사회가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transition)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건재하는 한 북한으로서는 세계경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규범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민주적 질서와 다양한 사회계층간의 이해를 조절하는 시민사회의 건설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경제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변모시킨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북한의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사회는 한시라도 빨리 북한경제가 순조롭게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규범에 순응함으로써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나서기를 기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스스로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후생증진을 통해 현대의 세계경제가 이룩한 수많은 경제적 과실들을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간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주제가 바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바람과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본격화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야말로 현재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행을 예고하는 전조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가는 것과 정비례하여 이를 둘러싼 외부세계의 논란 역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계획경제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며, 따라서 북한경제 역시 언젠가는 시장경제로 순조롭게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의 시각에 서면 당연히 외부세계는 북한의 시장화를 돕는 적극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북한주민들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당국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그에 대한 매력을 더욱 크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너무 순진한(naive)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북한당국 스스로가 시장을 착취(exploit)하여 이러한 계획경제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서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외부세계의 지원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를 목표로 들어오는 외부세계의 지원을 북한당국이 능숙하게 착취함으로써 현재 위기에 빠진 북한의 계획경제가 오히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기반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가 진행될수록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이해 역시 더욱 정밀해지고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동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 또한 그 간격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의 정체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할까? 아니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았는데도 왜 그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일까? 과연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매우 모험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참신하기도 한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이제까지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새로운 일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북한경제 또는 북한의 시장화라는 단어나 복잡계라는 단어 가운데 어느 한가지에는 익숙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들 단

어 가운데 한가지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두 단어 모두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 두 가지 용어를 하나로 연결시켰을 때 그것이 갖는 이미지나 의미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글을 쓰는 필자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타의 연구진 역시 연구의 초기에는 두 용어를 하나로 연결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마 본 연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문이 쇄도할 것이다. 도대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복잡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일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기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시도하지 않는다. 특정의 사회현상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히 몇몇 문장으로 설명되기에는 언제나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본 연구의 전체 결과물을 통해 왜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만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최초의 모험적 연구를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며, 따라서 이를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물 전체를 제시한 이후, 부분적으로나마 본 연구의 시도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본 연구의 세세한 부분적 결과물의 성패에 상관없이 본 연구 자체가 성공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아마도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지도 모르지만, 본 연구에 대해 자그마한 관심이라도 갖는 사람이라면 이 글의 서론과 결론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모든 부분을 또한 순서대로 꼼꼼히 읽어 내려가야 할 것이다. 물론 독자들에게 최대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글은 언제나 불경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 외부세계가 가지고 있는 혼란의 정도가 그만큼 크고, 따라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의 인내심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어 본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편의 상호 독립적인, 그렇지만 동시에 서로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개별 논문들과 이를 연결하는 머리말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다섯 편의 논문은 지금 쓰고 있는 머리말 이후 각각의 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우선 2장의 논문은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가 정확히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복잡계적 분석방법과 같은 조금은 생소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북한 시장화 연구의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환의 논리적 정당성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장이다.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의 구축을 기반으로 이후 제3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를 위해 기존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정련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복잡계적 분석방법이란 시스템 변화의 일반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그것의 방법론을 북한의 시장화와 같은 특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석도구와 기법들을 이에 적합하도록 기술적으로 정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정련된 분석도구와 기법들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 및 이에 따른 북한의 경제 시스템 변화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북한당국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괄하며, 이를 기초로 제5장에서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자 분석을 북한의 시장 자체에 적용하여 토론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를 기업의 행위자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모든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복잡계적 분석의 기술적 계량적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경제의 이행과 시장화 현상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제2장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와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필요성

(이석·김은영)



제2장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와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필요성

본 연구는 복잡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만일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각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그간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했는데, 이번 연구에서 시도하는 시장화에 대한 연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그것이 북한의 시장부문 규모 추정과 같은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둘째,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처럼 생소한 분석방법을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도입해야만 하는가? 이 장에서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복잡계적 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처럼 당연한 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만 비로소 본 연구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날 것이며, 이를 통해 본 연구와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의 차별성 또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1.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현재 외부세계의 북한경제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토론주제는 아마도 ‘시장’일 것이다. 북한경제가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매우 광범위한 ‘자생적 시장화’의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시장은 현재의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향후 그것의 의미 있는 변화와 관련해서 더욱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념적인 차원에서 북한경제의 의미 있는 변화란 결국 기존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transition)을 지칭하는데, 현재 북한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은 이러한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징후 또는 증거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시장에 대한 연구가 곧 그것의 이행 또는 경제적 체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외부세계의 체계적인 이해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의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¹⁾

가. 비공식화 가설의 한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우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경제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제로 모든 사회적 질서가 형성된 사회를 말한다.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란 국가가 여타의 경제주체들에게 행정적 명령을 통해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계획(plan)을 전제로 모든 사회적 질서가 구축된 사회이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1)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종래의 ‘계획’에서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2) 종래의 계획을 전제로 설정되었던 모든 사회적 질서가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와 같이 기존의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된 모든 사회적 질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일반 경제주체들의 일상생활에서만 시장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가정해 보자.

1)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서울: 집문당, 2007);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 적응력,” 『통일과 평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양운철, “분권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시장 현황과 전망,”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세종연구소, 2009); 장용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 구조: 북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49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여부 평가,” 『수은북한경제』 제5권 제2호 (통권 제17호) (한국수출입은행, 2008); 양문수, “조정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4대시장의 형성과 발달을 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 제10권 제1호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2006);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북한경제리뷰』 제7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4); 임현진, 정영철, “북한의 경제 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4);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1980년대 신의주, 청진, 해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6권 제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시장의 확대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이행과는 전혀 무관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 자체의 또 다른 발전 모습의 하나에 불과할까?

물론 이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해답은 ‘북한에서의 시장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주의경제 자체의 이행을 몰고 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사회주의적 질서가 계획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니만큼, 실제의 경제행위에서 이러한 계획이 무력화되고 시장으로 대체되어 나갈 경우, 언젠가 계획을 전제로 설정된 사회주의적 질서 역시 새로운 시장적 질서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보통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화 가설(Informalisation)²⁾로 불리는 이러한 접근은 그간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에 지배적 가설로 기능해 왔고, 그 결과 북한에서의 시장의 확대는 곧 북한경제 자체의 체제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이러한 접근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 안에서 과연 시장의 기능이 계속 확대된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과거 소비에트와 동유럽 경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안에서 성장하는 시장의 역할은 매우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계획부문으로부터의 자원을 유출시켜 계획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계획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오히려 계획을 강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 안에서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개념적으로는 반드시 계획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과거 소비에트와 같은 여러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비록 현재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 또는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다. 즉, 사회주의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계획부문의 활동보다 시장 또는 비계획부문의 활동이 자신들의 효용 및 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시장의 생산성이 계획부문의 생산성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원이 계획부문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Alexeev, M.,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in Transition," in Lippert O & Walker M (eds.), *The Underground Economy: Global Evidence of Its Size and Impact*, (Vancouver 1997); Rutgaizer V., "The Shadow Economy in the USSR," *Berkeley-Duke Occasional Papers on the Second Economy in the USSR* No. 34, (February 1992); Alexeev M and Tremil V., "The Growth of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and Its Impact on the System," in Campbell (ed.), *The Postcommunist Economic Trans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 자체를 변화시킬 만큼 끊임없이 계속 확대되어 중국에는 계획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기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쉽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난점이 존재하고, 따라서 비공식화 가설이 하나의 완결된 가설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난점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비공식화 가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과 관련된 또 다른 의문점은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경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가 변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비공식화 가설이 옳다면, 북한경제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가 변화하는 어떤 결정적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형성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의 시장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데, 이것이 70% 이상이 되면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가 결정적으로 변화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들에 답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시장을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비공식화 가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시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비공식화 가설이 북한경제 이행에 대한 하나의 완결된 가설체계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쉽지 않다.

이처럼 현재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지배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비공식화 가설은 그 자체가 자기 완결적이지도 않으며, 개념적으로 완성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직관적으로는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시장에 대한 실질적 분석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 계획경제 가설의 한계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북한의 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서의 가설과 정반대

되는 또 다른 개념 또는 가설이 적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통상 사회주의 계획경제 가설로 불리는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북한경제 자체의 이행과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본다.³⁾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 안에서 성장하는 시장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계획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은 현재의 북한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북한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사실상 계획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자생적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생적 시장화는 사회주의적 계획당국에게 1)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계획의 축소를 불려와 전체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었지만, 2)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마비된 사회주의적 계획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공급처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당국은 당시까지 자생적으로 발전하던 북한의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원을 통한 계획기능의 복원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의 시장은 이처럼 계획당국에 의해 제도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가설 또는 접근방법 역시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의 난점이 존재하다. 하나는 북한에 있어 시장의 발전을 과연 북한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당국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은 유명무실해 지고 있으며, 일반 경제주체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은 자생적으로 발전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사 북한당국이 원한다고 해도,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여 그곳의 자원을 계획부문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만일 북한당국의 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비록 북한당국이 시장을 제도화하여 계획부문을 강화하려 시도한다고 해도,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시장의 발전만을 더욱 부추겨 계획을 오히려

3)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 (서울: KDI, 2002.7) 연구에서 그는 2002년 ‘7·1조치’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이라는 북한경제의 기본적 취약 요소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 조치의 목적이 북한 계획경제시스템의 복구에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약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당국이 지속적으로 제도화된 시장을 더욱 억압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시장을 사회주의적 계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현재의 북한 상황으로 볼 때, 국가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는 일면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의문점은 ‘그렇다면 북한경제의 이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는 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향후 북한경제가 결국에는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경험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의 시장을 논의하는 이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북한의 시장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계획당국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면,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경제의 모습이 과거의 전일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경제의 이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개념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의문시된다.

다.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이처럼 현재 북한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는 근본적인 장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추동하고 있는 원동력이 북한의 경제이행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이지만,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북한시장에 대한 연구 자체가 개념적인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북한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여 그 사회현상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여타의 조건들이 변화할 때 대상이 되는 사

회현상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거꾸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이 이미 일정하다고 가정한 여타의 조건들(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의 노사관계제도 아래에서 또는 그것의 특정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정한 상태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거꾸로 현재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향후 노사관계제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거꾸로의 분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북한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반대로 현재와 같이 북한의 시장이 발전할 경우 이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북한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학적 접근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일정한 (경제)제도와 구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특정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제도와 구조가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하는지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특정의 경제현상이 이러한 제도 및 구조의 생성, 발전,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설명 틀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문제의식, 다시 말해 북한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체계에서 과연 이러한 설명 틀을 발견할 수 있을까?

2.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 극복을 위한 복잡계적 방법론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복잡계적 분석방법,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경제학 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이른바 진화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적 분석 틀 가운데 이른바 복잡계적 분석방법만이 유일하게 경제제도

의 생성과 발전, 소멸 등을 전면으로 다루어 그것과 일반 경제현상과의 연관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복잡계적 분석방법에 있어 기존의 경제학적 체계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그것의 방법론적 풍부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설명 틀이 바로 진화 경제학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장의 보론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단순히 경제학적 체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방대한 이론(방법)체계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복잡계적 분석방법 자체라기 보다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원용될 수 있는 그것의 경제학적 접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서에서 우리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진화 경제학적 분석방법과 등치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가. 경제 시스템 변화의 일반 인식론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

무엇보다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것이 제도와 구조의 생성을 직접 개념화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및 구조의 생성을 기존 제도 및 구조에서의 사회 현상을 토대로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복잡계에서는 새로운 제도 또는 구조의 생성을 창발(emergence)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창발은 기존의 제도 또는 구조 속에서 자라난 각 요인들이 기존의 제도 또는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복잡계적 분석방법에 따르면, 기존의 제도와 구조의 활동을 통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제도 및 구조에는 포섭되지 않는 매우 새로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보편화되면 행위자들은 기존의 제도 및 구조 밖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한 규칙을 통해 조직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원리가 충분히 발전되면, 당연히 그것은 기존의 제도나 구조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와 구조는 밑으로부터의 자기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규칙들을 기존의 제도와 구조의 영역으로 새롭게 끌어들이거나 또는 이를 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제도와 구조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기존의 제도와 구조가 밑으로부터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새로운 규칙들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스스로 변화해나간다면 이는 점진적인 제도화를 통한 연속적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반면, 만일 기존의 제도와 구조가 이러한 규칙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와 대립하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중국에는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규칙들이 기존의 제도와 구조 자체를 대체한다면 이는 불연속적이며 격렬한 진화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복잡계의 창발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자기조직화와 점진적·제도적 진화와 불연속적이며 격렬한 진화의 과정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구조 속에서 왜 기존의 규칙과는 전혀 다른 규칙들이 자기조직화라는 과정을 통해 등장하는가 하는 점인데, 복잡계와 진화 경제학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흥미로운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복잡계에서는 하나의 경제제도 또는 구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 적합성과 거시적 차원의 기능 적합성이 동시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시적 차원의 행위 적합성은 주어진 제도 아래에서 각 경제주체가 제도 또는 다른 주체들에 의해 기대되어지는 행위를 실행하는가의 여부를 개념화 하는 것이고, 거시적 차원의 기능 적합성이란 이들 개별 경제주체의 미시적 행위선택이 종합된 결과가 주어진 제도에서 거시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생산하여 내는가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일 시장경제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일단 개별 경제주체의 차원에서는 각각의 예산 제약식을 고려하여 동 제품의 수요를 줄이려는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가격이 안정되고, 이러한 가격 안정의 배후에 있는 시장경제 자체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개별 경제주체들은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고 기대된다. 다시 말해 이 경우의 행위 적합성은 수요를 줄이는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경제학의 기본 논리는 이러한 행위 적합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행위 적합성을 스스로 실현할 때 비로소 이것이 모두 모여 거시적 가격 안정이라는 기능적 적합성 또한 유지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시장경제제도가 지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개별 경제주체가 실제로 동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가의 여부는 이와 관련된 여타 경제주체의 행위에 대한 이들의 기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만일 이들이 여타의 개별 경제주체들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동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동 제품에 대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들은 실제로 동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의 총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되는 등 거시적 안정성 또한 유지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가격제도 하에서 미시적 차원의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차원의 기능 정합성이 모두 유지되어 기존 제도가 안정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개별 경제주체들이 동 제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른 경제주체들의 수요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들은 동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일 것이고, 그 결과 동 제품 가격은 오히려 전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동 제품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기존의 가격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이의 변화를 유인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기존의 가격제도에서 나타난 특정 제품의 가격상승이라는 현상이 이를 둘러싼 각 경제주체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모두 파괴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나. 경제 시스템 변화의 현실 사례로서의 북한 시장화와 복잡계적 접근방법

이러한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우리의 본질적인 관심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북한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유지한 채 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무한정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일정 수준 이상 시장경제행위를 수행할 경우 기존의 사회주의적 체도로부터 제재를 당해 그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시장행위를 수행하되 그 정도를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한의 시장은 전체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체제

내의 현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비록 북한에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와 관련된 미시적 행위 적합성과 거시적 기능 적합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개별 경제주체의 시장행위를 적절히 통제하여 그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계획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이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가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무한정 확대될 것으로 믿거나, 또는 설사 기존 사회주의적 제도로부터 제재를 당하더라도 스스로의 시장경제행위를 더욱 늘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앞에서와 정반대로 시장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통제는 무력화 될 것이고, 각각의 개별 경제주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밖에서 이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시장에 기초한 상호간의 질서를 형성해 나갈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시장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와 관련된 북한의 미시적 행위 적합성과 거시적 기능 적합성 모두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시장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자기조직화와 이의 제도화 또는 진화를 포함하는 이른바 새로운 구조의 창발로 인해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이행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앞서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비공식화 가설 역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복잡계적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시장을 분석하는 경우, 1)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질서 안에서의 경제현상으로 잔존하려는 경향과, 2) 반대로 기존의 사회주의 질서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창발로 나아가려는 경향 모두를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3)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북한체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분석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주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가능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기존의 북한시장에 대한 분석은 수많은

개념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다행이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이러한 혼란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북한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논의를 방법론적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북한 경제 연구에서는 매우 생소한 복잡계적 방법을 원용하여 북한의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 북한 시장화 분석을 위한 복잡계적 접근의 기술적 다양성과 적합성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있어 새로운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앞서와 같은 그것의 가설체계 또는 개념체계로서의 우월성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이 북한의 시장화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이행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현실적인 작업 방법론(working methods)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념들을 토대로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조작적 정의들(operational definitions)과 계량적 설명모형(quantitative explanatory models)들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와 모형들을 활용하면 현재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과연 새로운 시장경제의 형성 또는 창발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또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또한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이는 북한의 시장화를 북한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토론하기 위한 최적의 현실적 방법론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소 극단적인, 숫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1)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기술적 설명 사례 1-시장화

이제 북한과 같은 어떤 사회주의 경제가 노동자 2명과 계획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노동자 2명은 모두 계획자가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운영 중인 국영기업에 고용되어 매년 1인당 2원씩 총 4원을 생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산된 4원의 생산 가운데 절반은 계획자가 점유하여

기업의 운영과 노동자에 대한 (정치경제적) 통제에 사용되며, 나머지 2원은 각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1원씩 분배되어 소비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 경우 만일 노동자가 국영기업을 이탈하여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제행위를 수행한다면, 그는 매년 1원의 소득을 얻어 스스로 자체 소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물론 노동자는 현재 고용된 국영기업에서 일을 하나, 여기에서 이탈하여 시장 활동에 참여하나 경제적으로는 서로 무차별 할 것이다. 그러나 계획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만일 노동자 1명이 시장으로 이탈할 경우 국영기업의 생산은 연간 4원에서 2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분배 규칙을 적용한다면 계획자가 점유하는 부가가치는 종래의 2원에서 1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자는 노동자의 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가 점유한 2원의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심할 경우 시장의 활동 자체를 불법화 할 것이다. 노동자 역시 시장에서의 활동이 추가적인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계획자로부터의 제재만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시장에 참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계획자가 노동자를 전일적으로 포섭하여 통제하는 국영부문의 활동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획자의 노력과 통제로 각 개별 노동자가 계획부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행위 정합성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 정합성이 실현되어 개별 노동자와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능적 정합성 또한 유지되는 것이다.

<표 II-1> 시장 부존재의 균제상태 예시

A) 출발점(Status Quo)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2	4	0	0	0
계획자 수취	1	1	2	0	0	0
노동자 임금	1	1	2	0	0	0

주: 노동자 시장 참여시 1원 생산, 1원 소비 가능.

B) 균제상태(Steady State)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 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2	4	0	0	0
계획자 수취	1	1	2	0	0	0
노동자 임금	1	1	2	0	0	0

주: 노동자 시장 참여시 1원 생산, 1원 소비 가능.

그런데 만일 이제 천재지변과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계획자가 소유한 국영기업의 설비가 종래의 절반으로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국영기업의 생산이 종래의 4원에서 2원으로 하락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기치 못한 생산설비의 감소로 국영기업에 고용된 2명의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 사실상 일거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종래의 분배 규칙을 적용하면, 계획자는 국영기업에서 생산한 2원의 자원 가운데 1원을 점유하며, 나머지 1원은 각각의 노동자에게 0.5원씩 임금으로 분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우선 각 노동자는 기업을 이탈하여 시장에서 일을 할 경우 0.5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자가 모두 시장에 참가할 유인을 갖는다. 물론 계획자는 이를 통제하려 시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계획자가 보유한 자원은 종래의 2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진 노동자들을 통제하기란 상대적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자칫 이러한 통제에 실패할 경우에는 노동자 2명이 모두 국영기업을 이탈함으로써 계획자의 존립 근거가 되는 국영기업 자체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획자의 입장에서조차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기 보다는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된다. 예를 들어, 계획자는 현재 국영기업에서 사실상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 2에게 시장 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그 대가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1원 가운데 0.3원을 계획자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 2는 시장에 참여할 경우 국영기업에서 받던 0.5원 보다 0.2원의 추가 수익을 얻으므로 계획자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이제 국영기업에는 노동자 1만 존재하므로, 동 기업이 생산한

2원의 가치 가운데 1원은 여전히 계획자가 점유하지만, 나머지 1원은 노동자 1이 임금으로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 1은 비록 시장이 존재하지만 국영기업을 이탈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만일 그가 국영기업을 이탈하여 시장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0.3원의 손실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계획자의 입장에서든 이러한 상황은 이익이 된다. 우선 계획자는 국영기업에서 획득하는 1원에 더해, 시장에서 세금으로 가두어 들인 0.3원 등 총 1.3원의 경제적 자원을 지배하게 된다. 이는 시장을 불허할 경우 계획자의 소득인 1원을 능가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와 같이 시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 역시 사라진다. 노동자 2는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불만이 없으며, 노동자 1은 시장으로 이탈할 경제적 유인 자체가 사라지므로 계획자의 정책에 반기를 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또는 불법화되었던, 시장이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사회주의 경제의 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로 북한사회 내부에서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이 발생하고,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계획당국이 이를 승인하여 제도화 시킨 것이 앞서와 같은 숫자 예의 한 가지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제 계획자는 이 나라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 경제주체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이를 통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모두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개별 경제주체로 하여금 기존의 행위 정합성을 일부 수정하거나 이탈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새롭게 유지시키려 한다는 뜻이다.

<표 II-2> 부분적 시장제도화의 균제상태 예시

A) 출발점(Status Quo)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0	2	0	0	0
계획자 수취	1	0	1	0	0	0
노동자 임금	0.5	0.5	1	0	0	0

주: 노동자 시장 참여시 1원 생산, 1원 소비 가능.

B) 균제상태(Steady State)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0	2	0	1	1
계획자 수취	1	0	1	0	0.3	0.3
노동자 임금	1	0	1	0	0.7	0.7

주: 노동자 시장 참여시 1원 생산, 그 중 0.3원은 세금으로 납부, 0.7원을 소비.

(2)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기술적 설명 사례 2-시장화와 이행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에서 새로운 시장적 질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그 반대의 사례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일단 앞서의 경제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시장의 생산성이 과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노동자 1명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종래의 1원에서 2원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2는 이제까지 국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1을 설득하여 시장에 참가시킬 강력한 유인을 갖는다. 만일 그가 노동자 1을 고용하는 형태로 시장에 참가시킨다면, 이들 두 명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모두 4원이 되고, 여기에서 계획자에게 납부하는 세금 1.2원(전체 소득의 30%)을 공제하더라도 2.8원이 이들 수중에 남게 되므로, 이를 적절히 분배하는 경우 노동자 1과 2가 모두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노동자 1이 시장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계획자의 존립 근거인 국영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이 경제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 1과 노동자 2의 시장적 관계만이 남게 된다. 만일 이들의 관계가 고용-피고용 계약관계라면, 이제 이 경제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계획자는 기존의 체제이행을 의미하는 이러한 변화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획자는 이를 방지하고자 진력할 것이다. 노동자 1과 2의 시장 참가유인을 없애기 위해 시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비중을 대폭 높이거나, 아예 과거와 같이 시장의 활동 자체를 불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이후 북한의 계획당국은

이처럼 시장의 확산을 억제하는 퇴행적 제도역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이제 이 경제에서는 시장의 생산성 증대라는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여 기존의 계획부문에서 일해야 한다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유인 정합성 자체가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개별 경제주체들 모두는 이제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용-피고용 관계와 같은 새로운 규칙들을 자기조직화 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조직화가 현실화 될 경우 이것 자체가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획자는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규칙을 일부 받아들여 제도화 하는 대신, 이를 억압하고 또한 이와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표 II-3> 시장화에 따른 시스템 변화의 규제상태 예시

A) 출발점(Status Quo)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0	2	0	2	2
계획자 수취	1	0	1	0	0.6	0.6
노동자 임금	1	0	1	0	1.4	1.4

주: 시장의 노동자 1인 생산성 2월으로 증대, 그 중 0.6원은 세금 납부, 1.4원은 소비 가능.

B) 규제상태 1 (Steady State 1): 계획당국의 시장통제 강화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2	0	2	0	2	2
계획자 수취	1	0	1	0	1	1
노동자 임금	1	0	1	0	1	1

주: 시장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세금을 기존의 30%에서 50%로 상승.

C) 균제상태 2 (Steady State 2): 계획당국의 항복 또는 포기- 이행의 시작

	국영기업			시장		
	노동자 1	노동자 2	계	노동자1	노동자 2	계
총생산	0	0	0	2	2	4
계획자 수취	0	0	0	0.8	0.8	1.6
노동자 임금	0	0	0	1.2	1.2	2.4

주: 시장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세금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올리는 대신 국영기업을 폐쇄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자유화.

그런데 이처럼 시장을 통제하려는 계획당국의 시도가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앞서의 상황에서는 노동자 1과 2가 모두 시장에 참여할 강력한 유인을 갖으며, 따라서 만일 계획자가 이들의 시장 참여를 봉쇄하려 할 경우, 이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계획자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진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계획자의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결코 거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며, 만일 앞서 언급한 시장의 생산성 증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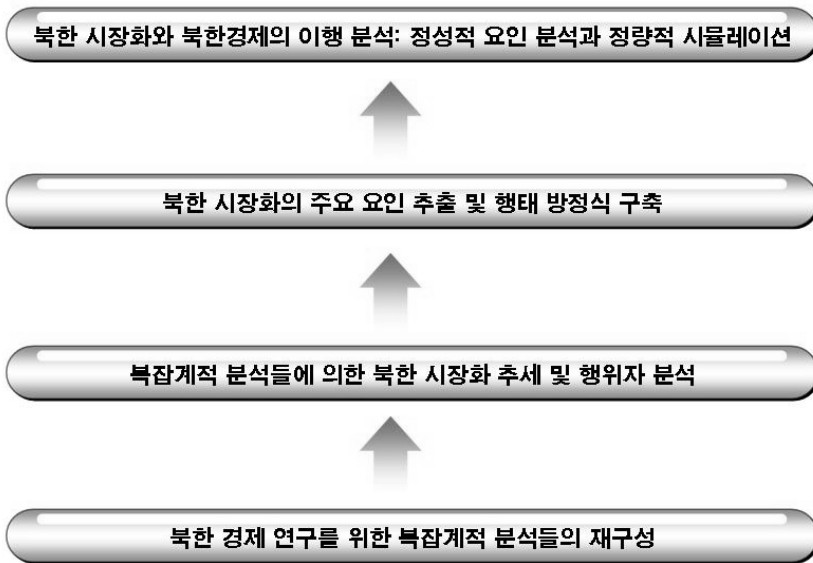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가 새롭게 시장경제로의 창발로 나아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일 것이다. 첫째는 시장에서의 상대적 생산성 증대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시장참여 유인이 무한히 높아져 결국 계획자가 이들의 요구에 타협하는 형태로 굴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시장 참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영기업의 폐쇄를 받아들이는 대신, 계획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징세자(Tax Collector)로서 자리 매김함으로써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의 사회주의 정부 또는 계획자는 새로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 또는 징세자로 평화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계획자가 시장에서의 생산성 증대를 잘못 예측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의 상대적 생산성은 매우 높아서 국영기업의 노동자 1 역시 시장에 참여하려 하는데, 계획자는 시장의 상대적 생산성을 잘못 판단

하여 노동자 1이 여전히 국영기업에서 일할 유인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계획자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종래와 같이 시장에 유연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1마저 갑작스럽게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계획자의 존립 근거가 되는 국영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장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봉쇄하려는 계획사이에 전면적·물리적 대결이 벌어져 계획자가 패배하는 경우이다. 과거 현실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가 첫 번째에, 그리고 (구)소비에트의 경우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타 갑작스럽고도 물리적인 이행과정을 경험한 동유럽의 국가들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앞서의 상황에서와 같이 이미 시장에서의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규칙들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계획자의 ‘점진적 제도화를 통한 체제이행(점진적 진화)’으로 나아가는 길과 어떤 이유에서건 계획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시스템이 강제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체제의 붕괴(불연속적이며 격렬한 진화)의 길 두 가지의 경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복잡계적 접근의 기술적 다양성과 적합성

위의 숫자 예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복잡계적 방법을 원용할 경우, 북한의 시장화를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그것도 정량적 모델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다. 실제로 위의 숫자 예에서 우리는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관계에 대해 1) 계획부문(국영기업)의 생산성, 2) 시장의 생산성, 3) 계획 및 시장에서의 분배 상황, 4) 계획자의 자원 보유 상황 등 다양한 정량적 변수들을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체제이행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II-1>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함수체계



물론 현실의 경우에는 위의 숫자 예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북한의 시장화 및 체제이행에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통해 북한의 체제 이행 자체를 설명하는 정량적 규칙이나 모델을 구성하는 일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낼 경우 이들의 관계를 일종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여, 이러한 방정식의 해(solution)를 찾거나, 또는 그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시장화와 체제 이행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논의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숫자 예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한 가지의 예시일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기존 시장화 연구가 갖고 있는 개념적이고 인식론적인 한계를 모두 초월하는 자기 완결적이며 완전한 가설체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분석도구를 제공해주는 최적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존의 북한연구에서는 매우 생소한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굳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3.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무엇 때문에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명해졌지만, 만일 우리가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도입한다면,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응당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북한경제의 이행을 초래하는가를 정량적인 모형으로 분석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외부세계가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두는 기본적인 이유이며,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분석 자체가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적용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이에 따라 앞서와 같은 최종적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방대한 사전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

가. 연구의 목적 함수들-시스템 변화의 정량 방정식 도출을 목표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도달하려고하는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의 형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재정련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글의 보론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본래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북한연구를 위해 고안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일반적인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모두를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메가 이론으로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포섭하는 대규모의 방법론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방법론 체계를 직접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도입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연구에 알맞도록 동 방법론 체계의 일부 또는 특정 요소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향후 본격적인 북한의 시장화 연구를 위해 기존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재구성하는 일을 수행한다.

둘째, 우리는 이와 같이 재구성된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직접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북한 시장화 현상을 복잡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는, 그것이 비공식화 가설에 기초한 것이든 아니면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에 기초한 것이든,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된 시장화 요인을 명시적으로 추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물론 이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이행 사이의 개념적인 연관성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경우 이러한 개념적인 모호성은 사라지고, 따라서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한 시장화 요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추출하는 일이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추출 작업이 없이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계량 모형을 통한 북한경제의 시장화 및 이행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작업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처럼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된 시장화 요인이 추출되는 경우, 우리는 이들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들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일종의 행태 방정식 형태로 도출한다. 이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통해 북한경제의 이행을 설명하기 위한 정량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는 등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앞서 언급했지만, 위의 모든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북한경제의 이행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적인 모형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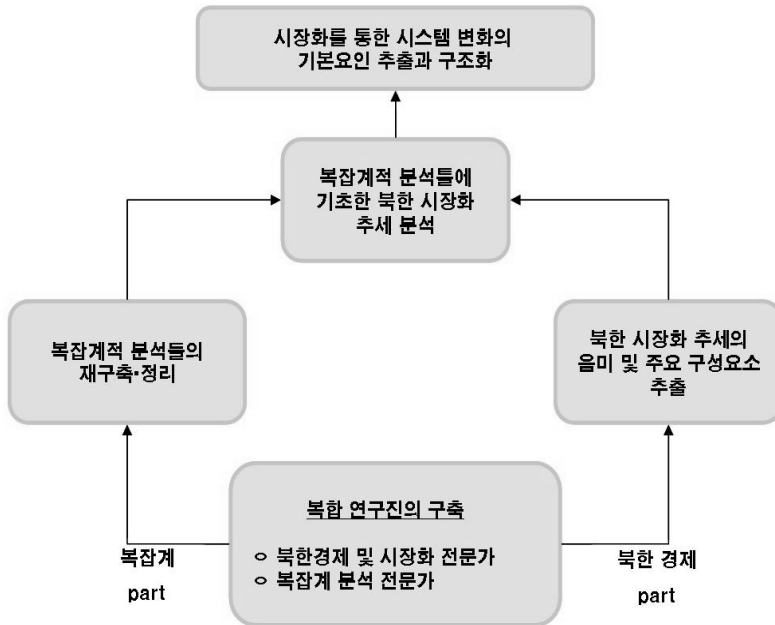
그런데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매우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북한의 시장화에 적용한 사례도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시장화 연구 자체도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 우리는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의 연구 목적 가운데 처음 두 가지의 목적만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 나머지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연구의 후속 연구 또는 본연구의 연장 작업에서 다루도록 한다. 만일 본연구가 2개년의 작업으로 추진된다면, 앞의 두 가지 목적은 본연구의 1차 연도 작업결과인 이 글에서 다루고, 나머지 두 목적은 본연구의 2차 연도 작업결과에서 다룬다는 뜻이다.

나. 본 연구의 방법-시스템 변화의 기본 요인 도출과 구조화

한편,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본연구의 일차연도 작업방식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본연구의 일차연도 작업은 크게 1) 북한의 시장화 현상분석을 위한 복잡계적 방법론과 개념 틀의 정련과 2) 이를 통한 북한의 시장화 추세 재구성에 두어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차연도의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네 편의 상호 연관된, 그렇지만 별도의 주제를 갖는, 논문들을 작성한다. 첫 번째는 복잡계적 방법론의 일반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북한경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재)정련하는 논문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련된 복잡계적 방법론을 직접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추세 전반을 개관하는 논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된 각각의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논문인데, 이 가운데 세 번째는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계획부문의 변화를 기업과 기업 참여자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논문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논문은 북한의 시장 자체의 구조와 이에 참여하는 각각의 행위자들의 형태와 동기, 그리고 참여방식 등을 분석하는 논문이다.

〈그림 II-2〉 시장화를 통한 시스템 변화요인 도출 방법 및 프로세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본질적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복잡계적인 방법과 동 방법이 적용되는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가 이제까지 서로 배타적이라고 할 만큼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복잡계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매우 실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그 속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망라하는 다양한 학문영역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특정의 경제현상을 복잡계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대다수 경제학자들에게 복잡계적인 방법은 여전히 생소하며 다루기 힘든 방법론으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경제 연구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경제연구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북한경제연구에 소요되는 데이터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생산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경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는

국내외를 모두 합쳐도 몇 십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한정적인 북한경제 연구자 풀로 인해 이들 가운데 복잡계적 방법론에 익숙한 연구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복잡계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처한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금은 이색적이지만 현실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우리는 앞서 언급한 네 편의 논문을 일단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주제에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논문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타 논문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논의하는 첫 번째의 논문을 담당하는 연구자는 복잡계적 분석방법 자체에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를 선정하되, 그가 북한경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둘째, 각 논문의 담당자들은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여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는다. 특히 왜 북한경제연구에서 복잡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동 방법을 통해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형성한다.

셋째, 각각의 논문을 담당하는 연구자는 우선 각자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각 논문에 수록되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과 요인들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출하여 정리한다. 이 경우 각 연구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토론은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계획부문의 행위자 변화를 분석하는 논문의 경우, 일단 복잡계적 방법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존의 연구방법을 통해 그와 관련된 주요 요인과 추세, 변화 등을 정리한다.

넷째, 이렇게 각 논문의 주요 내용이 각각의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추출되면, 이를 토대로 각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다. 이러한 토론의 주제는 당연히 ‘복잡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할 때 기 추출된 각 논문의 요인과 추세, 변화 등을 어떻게 (재)배치되고 (재)해석할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춘다. 만일 이러한 토론의 결과 기 추출된 각 논문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반복한다.

다섯째, 네 번째의 과정을 토대로 각 연구자는 자신이 맡은 논문을 완성하되, 회람(Circulate)을 통해 연구자들로부터 코멘트를 받고, 어긋나는 부분을 조정한다. 어긋나는 부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각 논문의 담당자가 수행하되,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한 집체적 조정을 실시한다.

다음의 장들에서 소개되는 본 연구의 구체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독창적 연구의 산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인식과 방법론에 익숙한 개별 연구자들의 집체적 토론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후의 장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그 결과물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보론> 경제시스템 변화의 일반론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 과 북한 연구에의 시사점

가. 등장배경

복잡계적 접근방법은 17세기 뉴턴식의 인과론적 결정주의 세계관,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초, 전체를 바라보는 시스템 이론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해왔다. 뉴턴의 인과론적 결정론은 모든 행위에는 원인이 있으며 자연현상의 원인을 추적하면 만물의 이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기적이거나 완벽한 우연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의 행동 또한 인과작용의 결과이므로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⁴⁾ 18세기 들어서면서 뉴턴 역학은 유럽으로 확산되어 발전하였고, 라플라스(P. S. Laplace)는 사회현상을 포괄하는 모든 자연현상은 수학으로 기술되는 인과론적 원리에 의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4) 윤영수 외, 『복잡계 개론』(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77.

플라스는 ‘확률에 대한 철학적 소론’에서 우주의 현 상태를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우주의 가장 거대한 물체들은 물론 아주 작은 원자들의 운동까지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 시기에는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었다. 16~17세기의 기계론⁵⁾은 18세기에 이르자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심화되어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화되었다. 데카르트(R. Descartes)가 인체를 이루고 있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영혼이라고 한 반면, 유물론자인 라메트리(J. O. d. La Mettrie)는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두뇌와 신경계의 변화에 의한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여 신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세상의 모든 변화가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화학의 발전, 19세기 세포론, 미생물학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의학과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과학 분야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도 열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19세기 초, 열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열소이론이 등장하였다. 열은 질량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소에 의한 것으로, 열소의 양에 의해 온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열 현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열이 분자들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라고 밝힘으로써 열소를 도입하지 않고도 열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분자의 수가 너무 많고, 이들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계산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통계역학의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시기의 통계 역학은 다양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결과, 거시적인 특징이 발현된다는 창발(emergence)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열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통해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열이 흘러가게 만드는 순환과정은 얻을 수 없다”는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 정도를 의미한다.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닫힌 계(closed system)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5) 이 시기 대표적인 학자인 데카르트는 인체를 기계로 이해하고, 이 기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요소들로 나누어 그 기능을 분석해야 한다는 환원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모든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이 법칙에 따라 우주를 하나의 닫힌 계로 보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여 결국 열평형 상태에 이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생물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며 발전해 가는 복잡성을 흔히 볼 수 있다. 20세기 초에 들어 베르탈란피(L. V. Bertalanffy)는 외부와 에너지 및 물질을 주고받는 열린 계(open system)를 도입하여 이를 설명하려 하였고, 이 사고방식은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베르탈란피는 “자기조직화하는 동력학 시스템의 원리”에서 생체계를 에너지에서는 열려 있으나, 정보와 제어 측면에서는 닫혀 있는 시스템이라고 인식하였다.

이후 시스템 이론은 1950~1960년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1970년대 파국이론(Catastrophe theory), 1980년대 혼돈이론(Chaos theory), 1990년대 복잡계 이론(Complex theory)으로 이어졌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미국 수학자 위너(N. Wiener)가 “사이버네틱스-동물과 기계에서의 제어와 통신”에서 제기한 과학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계계·생체계·사회조직에서의 제어와 통신 또는 정보전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이며,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경제학에서는 국민경제나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과정과 정보교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고, 특히 소련·동유럽 등 계획경제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파국이론은 불연속적인 현상, 즉 단절적 변화를 안정상태를 향한 급격한 이동으로 보고,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파국은 상태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파라미터가 있어도 상태가 돌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며, 파국이론에서는 돌연 변화를 통해 안정된 상태가 깨어지게 되면 다른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를 설명해 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었으나, 이런 변화가 늘 안정된 평형상태를 향해 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등장한 혼돈이론에서는 초기의 미시적인 작은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폭되어 거시적인 변화로 발전하는 현상인 혼돈에 주목하면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비선형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혼돈이론에서는 변화가 안정된 평형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발산하거나 기이한 끌개(strange attractor)를 형성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혼돈이론의 등장 이후 자연과 사회의 다이내믹스 연구 분야에서는 평형상태를 벗어나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the chaos)에서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변화의 과정을 자기조직화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이후 임계현상에 대한 이론이 결합되어 스스로 임계점을 찾아가며 창발적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복잡계 이론이 발전하였다.⁶⁾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 복잡성에 주목한 학자들인 겔만(M. Gell-Mann), 애로(K. Joseph Arrow), 앤더슨(P. Warren Anderson) 등이 중심이 되어 1984년 산타페 연구소(Santafe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계의 체계적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동 연구소의 아서(W. Brian Arthur)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가정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한정합리성⁷⁾, 체제의 경로의존성⁸⁾, 수확체증의 법칙⁹⁾, 복수의 시장균형¹⁰⁾을 받아들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을 분석하였다. 근래에 들어 외환시장, 주식 시장 등 분석에 관한 정량화 모형 개발 등에 복잡계 방법이 적용되면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나. 분석대상과 시사점

복잡계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복잡하다는 말의 의미는 갈피를 잡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뜻으로 영어의 ‘complicated’에 가깝다. 그러나 여기서 복잡하다는 의미는 영어의 ‘complex’

- 6)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팽팽해서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임계점 근처의 어느 지점에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나타나는 거시적인 현상을 임계현상이라고 한다.
- 7)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사이몬(Hebert A. Simon)은 현실적으로 인간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8) 현재의 제도 및 시장이 각 나라의 역사와 과거의 전통 등 역사적인 경로에 따라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 9) 기존의 수확 체감의 법칙과는 반대로, 먼저 수확을 획득한 행위자가 우위를 점해 향후 더 많은 수확을 가져간다는 법칙이다. 브라이언 아서는 자연독점형 산업이 아닌 하이테크 산업에서 나타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을 설명했다.
- 10) 현실적으로 사회적 특성, 역사적 경위, 초기 조건 등 경제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개의 균형점이 존재하며, 이들 중에서 하나의 균형점이 시장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로서,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¹¹⁾ 많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거시적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복잡계가 아니다. 따라서 복잡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계론적 과학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복잡하면서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복잡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계론적 세계관, 요소환원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시각이다. 복잡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종합해보면,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엉겨있는 집단 속에서 각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부분의 총합’ 이상의 성질이나 패턴을 보이는 현상이 복잡계이다. 따라서 복잡계에서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¹²⁾와 같이 미세한 초기조건의 변화가 증폭되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창발, 자기조직화,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 진화와 적응 등의 개념을 도입한다.

창발은 시스템 내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질서로서, 전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세하게 조직된 현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나타난 현상이다. 복잡계적 연구방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왜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복잡계에서는 미시 차원에서 구성 요소들이 서로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요소들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지를 보는 행위적 정합성과 거시 차원에서 요소들이 만들어낸 성과가 계속 재생산되며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기능적 정합성이 중요하다.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이 깨지면서 부정합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만들려는 구성 요소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된다.

복잡계는 열린 시스템이므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드나들며 개별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계층의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창발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기조직화(self organization)이다. 자

11) 윤영수 외,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19.

12) 기상학자 로렌츠의 기상예측모형에서 모형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초기 조건에서의 작은 차이가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 현상을 나비의 날갯짓에 비유해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뉴욕에 큰 폭풍을 가져온다고 알려졌다.

기조직화는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둔 기억과 외부로부터의 정보 입력을 기초로 하여 요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나 구조를 변형시켜 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프리고진(I. Prigogine)은 분산구조이론(dissipative structure theory)에서 자기조직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평형 상태, 포지티브 피드백의 존재, 개방계에 있는 외부와의 사이에 분산적인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규칙과 질서는 강화피드백을 통해 강화되거나 조절피드백을 통해 억제되는 피드백을 통해 선별 메커니즘을 거친다. 선별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된 질서는 또 다시 진화(evolution)와 적응(adaptation)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한다. 진화는 생명체가 출현한 이래 돌연변이를 통해 유전자의 일부가 변형되고 표현형도 일부 변하는데, 이러한 우연한 표현형의 변화 중 환경에 적합한 것이 생존하여 변화가 계속 누적되는 과정이다. 즉, 진화는 시스템 내에서 계속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확산되어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진화는 완벽한 질서가 있는 상태도, 무질서의 상태도 아닌 질서와 무질서가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프리고진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프리고진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자기조직화 과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자기조직화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점은 시스템 내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지도 않고, 또 질서에 수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적응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생체구조를 나타내는 형질이 자연선택을 통해 살아남아 개체군이나 종 전체에 정착되는 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시장관계가 왜,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어떤 진화경로를 밟아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연구로서 복잡계 연구방법의 핵심 개념인 구성요소들 간 상호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창발, 자기조직화,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 진화와 적응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와 북한 계획구조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본 연구는 복잡계 중에서도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복잡적응계는 구성요소들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자신을 재조직하며 적응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적인 존재나,

그 집단에 구성요소가 되는 다양한 사회, 경제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계획경제구조 안에서 행위자는 자연과학의 요소와는 달리 한정 합리성을 가진 지적인 존재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신념체계(belief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해 줄 것이다.

기존 북한의 시장에 관한 연구에서 시장을 일종의 구조, 또는 장소로 보아 왔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시장적 행태에 초점을 맞춰 북한 주민의 시장적 일탈적 행위가 북한 계획경제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자기조직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의 진화와 적응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복잡계적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 분석방법

복잡계적 시각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복잡한 그대로 전체를 본다는 전일주의(wholism)적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현상을 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을 요소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의 모습을 보려는 것이 기존의 연구 방법이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부분의 총합이 전체가 된다는 선형성을 전체로 하고 있으나,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클 수 있으며, 부분의 총합과는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데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상을 나누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하지는 것이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전일주의 시각은 현상을 분석하는데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은유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수학 및 통계역학,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발전에 힘입어 유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복잡계 분석에서도 역시 창발, 자기조직화, 선별 메커니즘, 포지티브 피드백, 진화와 적응 등 주요개념을 이용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성적 분석 방법과 행위자기반모형, 네트워크 모형, 합리적 선택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비선형 시계열 모형 등 모형화를 통한 정량적 분석이 있다. 시스템 내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형화를 이용한 방법으로, 모형은 복잡도를 낮추면서도 복잡계의 기본 원리인 창발현상을 재현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행위자기반모형은 사회·경제계의 거시적인 구조와 양식의 발생을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에서 상향식으로 찾아가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네트워크 모형은 네트워크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창발현상으로 이해하고, 네트워크의 구조, 메커니즘, 네트워크의 진화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합리적 선택모형은 행위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을 예측함으로써 거시적으로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를 보는 모형이다. 게임이론과 같은 모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행위자기반모형, 네트워크 모형, 합리적 선택 모형은 체제 내 행위자들의 미시적인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인 반면, 시스템 변수에 따른 거시적인 변화를 보는 모형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비선형시계열 모형 등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기본적으로 특정 변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 변화가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전체 시스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의 피드백 고리를 찾아내어 그 역할을 이해하려는 모형이다. 시스템에 관계된 여러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함수로 나타낸 것이 비선형시계열모형이다.

복잡계 이론은 다이내믹스, 그 중에서 단절적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여 시스템의 변화라는 동적인 과정을 파악해 보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복잡계 다이내믹스는 해석적 모형 또는 계산적 모형으로 모형화하여 거시적 패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과거에 일어났던 창발현상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창발현상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복잡계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차원에서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의 정합성 문제와 일탈적 행위로서의 시장 행태의 활성화, 새로운 자기조직화 원리로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 강화 피드백과 조절 피드백을 통한 사회적 선별메카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의 확대 현상에 주

목하여 이를 진화와 적응의 관점에서 파악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북한 당국에 의한 선별 메카니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 향후 북한 경제시스템의 변화속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의 기업관리 체계의 변화 속에서 실적에 따른 보상, 기업의 이윤추구 행태 등 행위자의 시장적 행태 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호작용이 기존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피드백은 어떤 양상으로 이 변화를 증폭시키는지를 볼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국가의 선별 메카니즘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 이전과 이후 각각 어떻게 작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합성 여부, 이에 따른 행위자들의 진화와 적응의 문제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윤영수 외.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서울: 집문당, 2007.
-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 평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2. 논문

-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패,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북한경제리뷰』. 제7권 제2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
- _____. “조정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4대시장의 형성과 발달을 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 제10권 제1호. 서울: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2006.
- 양운철. “분권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시장 현황과 전망.”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9.
- 임현진·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1호.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4.
- 장용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구조: 북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49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4.
-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정책포럼』. 제160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198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6권 제2호.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여부 평가.” 『수은북한경제』. 제5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08년 여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8.

Alexeev, M.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in Transition” in Lippert O & Walker M, eds. *The Underground Economy: Global Evidence of Its Size and Impact*. Vancouver: Fraser Institute, 1997.

Alexeev M and Trembl V. “The Growth of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and Its Impact on the System” in Campbell, ed. *The Postcommunist Economic Trans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Rutgaizer V. “The Shadow Economy in the USSR.” *Berkeley-Duke Occasional Papers on the Second Economy in the USSR*. No. 34 (February 1992).

제 3 장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
틀의 재정립

(김창욱)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제3장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본 장의 목적은 복잡계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시스템의 진화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이행과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복잡계 이론은 자연과 사회를 망라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질서가 형성되고 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제시스템의 진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가 의식을 가진 인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발전해 온 복잡계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일정정도 수정 보완하여 경제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시스템의 특수성이란 그 구성요소인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의해 규정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규칙과 의식적인 판단을 따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형성한 ‘제도’와 ‘신념체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규정된다. 따라서 경제시스템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분석틀의 핵심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복잡계 관점에서 이들 요소의 진화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경제의 형성과 진화과정 역시 시장경제의 요소가 제도화되고 기존의 신념체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신념체제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복잡계의 자기조직화와 진화의 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분석할 수 있는 복잡계적 분석틀을 재정립한다. 이는 제도와 신념체계의 진화과정을 복잡계 이론에 기반하여 새롭게 정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시장화만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이행 문제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석틀의 개발을 통해서 비로소 북한의 시장화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분석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

1. 복잡계 이론의 재해석

가. 세계관으로서의 복잡계 이론

대부분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면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한 기상 변화나 난류 현상, 갑작스런 금융위기 등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현상이 복잡계 이론이 다루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프랙털(fractals), 카오스(chaos),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등이 복잡계 이론을 대표하는 개념들로 이해되어 왔고, 이들 개념이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의 복잡계 이론이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론’이라는 관념은 복잡계 이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계 이론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특수한 이론이 아니다. 모든 사물과 세계의 모든 측면이 다 복잡계 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한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잡계 이론이다.

달리 말하면 복잡계 이론은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를 보는 관점과 시각이다. 우주를 보더라도 기계적이고 균형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우주를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체계로 보는 것은 기계적·균형론적으로 우주를 보는 것이요, 빅뱅(big bang)에서 시작해서 저절로 물질이 만들어지고, 항성과 행성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스스로 진화해가는 체계로 보는 것은 복잡계적으로 우주를 보는 것이다. 근대 학문은 고전 역학에 기반을 두어 발전하여 왔다. 이는 기계적·균형론적 관점이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또한 사회 현실의 불안정성과 변화 속도가 증대하면서 복잡계 관점이 기존의 기계적·균형론적 세계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확산되어 왔다.

복잡계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세계를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스스

로 변화해가는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언뜻 보면 그 질서가 이미 주어져 있고 저절로 변화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하여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세상의 질서는 스스로 만들어졌고 스스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물리 세계조차도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우주의 진화과정 속에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물질이 형성되면서 물리 법칙도 만들어지고 질서도 구축되어 온 것임을 최근의 물리이론은 밝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질서와 지속적인 변화가 내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지는가? 복잡계 관점에 따르면 그것을 낳는 것은 바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이다.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원자라는 시스템적 질서가 만들어지고, 원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물질이라는 시스템적 질서가 만들어진다.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이 일정한 조건에서 누적적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서로의 행태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이다.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던 입자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원자핵과 전자로 만나 서로의 행태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약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또 그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복잡계이다. 그리고 세상을 그러한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복잡계 관점이다. 결국 복잡계 이론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질서의 형성과 그 질서의 변화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복잡계 이론의 두 축: 자기조직화와 진화

복잡계 이론에 대한 위의 이해로부터 복잡계의 두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는 스스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간다는 것이다.

첫째, 스스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자기조직

화(self-organization)와 창발(emergence)이다. 자기조직화란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창발이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요소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기조직화가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창발은 결과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시스템의 구조와 질서는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한다는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진화(evolution)와 적응(adaptation)이다. 진화는 시스템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존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의 상태로 이전해가는 것을 가리킨다. 적응은 시스템이 주변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진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물계의 진화를 떠올린다. 그러나 진화를 하나의 질서의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의 상태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진화하는 것은 생물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 사회도 진화하고 물리세계도 진화한다. 적응이라는 개념도 시스템의 ‘정합성’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이해한다면 물리세계와 인간사회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진화와 적응 두 개념은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할 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¹⁴⁾

이상과 같이 이해한다면 복잡계 이론을 구성하는 두 축은 바로 자기조직화와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의 개념을 보다 엄밀히 규정하여 경제시스템의 ‘넓은 의미’의 진화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넓은 의미의 진화와 구별하여 ‘좁은 의미’의 진화를 새롭게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의 진화 개념은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과정 전체를 가리킨다. 이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정인 자기

13) 시스템의 정합성 개념에 대해서는 뒤의 제2절 제3항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14) 사실 복잡계 이론에 진화와 적응 개념이 결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원래는 ‘자기조직화 하는 체계’로서만 복잡계를 이해하였다. 진화론이 복잡계 이론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 이는 진화 개념이 생물학적인 틀을 벗어나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기 시작하였고, 또 복잡계 진영에서도 시스템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스스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복잡계(complex system)’라는 개념 대신에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직화 과정과, 그 질서가 고착화되었다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 한편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은 넓은 의미의 진화 과정 중 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즉 새로운 질서가 선별 과정을 통해 고착화되고 그것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을 자기조직화 과정과 구별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넓은 의미의 시스템의 진화는 자기조직화 과정과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다윈에 발전된 원래의 진화 개념은 변이(variation)와 선별(selection)을 결합한 것이었다. 이는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의 진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진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계기인 변이는 우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논의를 통해 새로움의 등장인 변이는 단순히 우연에 의해 설명할 수 없으며, 이것을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이는 무작위적인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내포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넓은 의미의 진화 과정은 ‘자기조직화 과정과 선별 과정의 결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선별 과정은 원래 ‘자연선별’(natural selection)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환경에 의해 적합도가 높은 것이 사후적으로 선별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행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 질서와 행태가 선별되기 보다는 사회 내부의 선별 메커니즘을 통해 선택되는 ‘사회적 선별’이 지배적인 선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선별이 지배적인 선별 방식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환경이 수행하는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선별 과정에서는 환경이 독립적으로 끊임 없이 변화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별하는 핵심 계기였다. 그러나 사회적 선별 과정에서는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는 중요한 계기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시스템의 내적인 ‘정합성’이 중요한 계기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선별 과정만으로는 시스템의 진화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도록 만든다. 정합성이 시스템 내적으로 약화되고 깨지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내적인 정합성이 달성된 후 다시 그것이 약화되고 깨어짐으로써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을 구조적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과정이 진화의 개념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좁은 의미의 진화 개념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규정하여 사용한다. 즉 선별 과정을 통해서 정합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정합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사실 시스템이 어떤 특정 질서를 선택하여 고착화시킨다는 것은 내적으로 시스템의 침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 질서가 고착화되면서부터 시스템의 이면에서는 정합성이 약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합성이 약화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이것이 새로운 자기조직화 과정을 낳는 기반이 된다.

한편 복잡계 이론에서는 자기조직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시스템 내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둘째는 구성요소의 행태들 사이에 강화피드백(positive feedback)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가 어렵고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시스템의 안정화 메커니즘에 의해 금방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잡계 이론에서는 ‘균형에서 떨어진 상태(far from equilibrium)’ 혹은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에서 자기조직화가 쉽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시도, 일탈 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조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특정한 행태가 다른 구성요소의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고 그것이 다시 원래의 행태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피드백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드백 관계를 ‘강화피드백’이라고 한다. 이를 가리키는 다른 용어로는 누적적 상승작용, 상호 촉매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강화피드백이 작용할 때 자기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의 넓은 의미의 진화는 자기조직화 과정과 좁은 의미의 진화과정의 교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이는 불안정성과 강화피드백이라는 두 가지 계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새로운 질서가 고착화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은 진화과정

을 통해서 일어난다. 새로운 질서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 선별과정이라면 그것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의 내부적 침식과정이다. 이는 정합성의 제고와 감소를 초래한다.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새로운 자기조직화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2. 경제시스템 이행의 복잡계적 이해

가. 경제시스템의 특성

경제시스템의 이행을 복잡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복잡계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복잡계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시스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복잡계 이론은 주로 자연계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간사회에 적용할 때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¹⁵⁾ 자연계와 다른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복잡계 관점을 관철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이행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잡계 관점에서 경제시스템과 자연시스템의 본질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서의 형성과 그것의 진화 과정에서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질서가 형성되고 그것이 구조화된다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행동이 시스템 차원에서 질서를 이루고 시스템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조정(coordination)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내적으로 스스로 이루어진다.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의 문제가 우연적인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자연선별(natural selection)로 해결된다. 자연계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기조직화가 저절로 일어난다. 이는 우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자연계의 구성요소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내적인 결맞음을 형성하고 누적적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자기조직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시(macro)적인 질

15) 그동안 복잡계 이론에 기반을 두어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충분한 개념 틀과 이론으로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오류를 범해왔다.

서(order)가 나타난다. 이 거시적 질서는 자연선별에 의해 고착화되고 구조화된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다. 우연적인 시스템이 유지되고 보존됨으로써 단순 규칙(simple rule)에 기반을 둔 거시적 질서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단순 규칙에 기반을 두어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기반을 두어 행동이 일어난다는 점이 다르다. 자연계에서는 단순한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에 체화되어 있는 반면 인간사회에서는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와 분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며 그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구성요소의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 자연계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에서는 행동의 조정이 주로 특정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의 형성과 구성요소 사이에서의 선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인간사회에서는 행동 규칙의 새로운 조합과 행동 규칙에 대한 선별을 통해서 행동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인간사회에서 이러한 행동 규칙을 규정하는 것은 제도(institutions)와 신념체계(belief system)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제도와 신념체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에 의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변화한다. 행동 규칙이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와 분리되어 별도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사회적 행동 규칙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를 정하는 것은 규칙을 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질서를 고착화, 구조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계에서는 자연선별에 의해 새로운 규칙을 체화하고 있는 개체가 선별됨으로써 그 규칙이 확산되고 고착화된다. 반면 인간 사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규칙이 고착화된다. 새로운 규칙의 제도화는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제도선별과정은 자연선별과는 다르다. 경쟁, 협의, 투쟁, 법제화, 강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신념체계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경제시스템에는 ‘상호 연계된 사고모형과 지식집합’이 존재한다(Foster, 2004). 즉 지식이 실재와 독립하여 공동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것이 사회의 신념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체계가 개인의 행태를 규정한다. 그런데 상호 연계

된 사고모형과 지식집합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 규칙이 정해지고 그들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 공동의 이미지 형성이 강화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강화되는 가운데 현실적 가능성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신념체계와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공동의 지식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만큼 경직화가 쉽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 규칙을 강요하다가 시스템의 붕괴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신념체계와 현실과의 괴리를 끊임없이 좁혀 나가는 것이 시스템의 지속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제도와 신념체계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제도가 신념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제약한다. 한편 신념체계는 제도의 사회적 선별과정을 규정한다. 신념체계와 제도는 서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의 근본 동력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고, 이는 세계가 어떠하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belief)을 형성한다. 지배적인 신념을 핵심으로 한 신념체계(belief system)가 제도의 변화를 낳고 이는 다시 인식의 변화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North, 2005)

나. 경제시스템의 구조

기존의 복잡계 이론은 시스템을 2개의 층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것은 구성요소 혹은 행위자(agent)의 수준인 마이크로(micro) 층위와 시스템의 수준인 매크로(macro) 층위이다. 일반적으로 복잡계는 마이크로 층위의 행태가 매크로 층위에서 질서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마이크로-매크로 2개 층위 체계에서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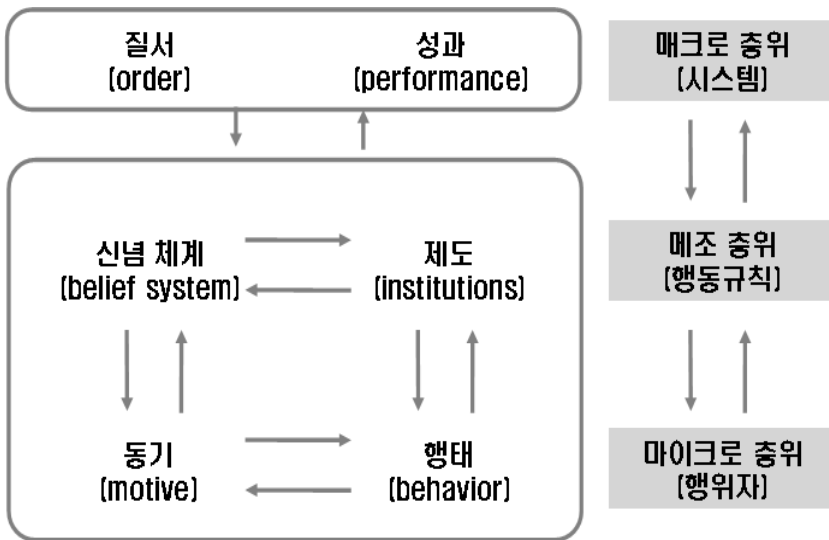
16) 공동 지식에 기반을 둔다는 인간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잡계를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계 복잡계는 에너지가 부여되는 시스템으로 물리 화학 시스템을 가리키고, 제2계 복잡계는 지식이 부여되고 에너지는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생명 시스템을 가리키고, 제3계 복잡계는 지식을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다. 제4계 복잡계는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제3계에서는 지식이 실재와 피드백(feed back) 및 피드포워드(feed forward)의 관계에 있지만 제4계에서는 지식이 실재와 독립하여 공동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경제시스템을 포함하여 고도화된 인간사회는 제4계 복잡계라고 할 수 있다. Foster, J., "From Simplistic to Complex Systems in Economics," *School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No. 335, (October 2004).

층위 체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 규칙을 체화하고 있는 존재로 파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스스로 행동 규칙 및 행태를 변화시킨다. 스스로 규칙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메조(meso) 층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사회에서는 규칙이 행위자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와 신념체계가 위치한 메조 층위를 도입함으로써만 규칙의 형성 및 변화를 수행하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경제시스템은 3개 층위로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Ⅲ-1> 참조). 마이크로(micro)-메조(meso)-매크로(macro)가 그것이다.¹⁷⁾

<그림 Ⅲ-1> 경제시스템의 3층위와 이들의 상호작용



마이크로 층위는 개별 행위자의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행태(behavior)이다. 행위자의 행태와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기초이다. 이 행위자들의 행태의 이면에는 동기(motive)가 작용한다. 어떤 동기가 작용하느냐에 따라 행태가 달라진다.

17) Dopfer, K., J. Foster, and J. Potts, "Micro-meso-macro,"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 14, No. 3 (July 2004).

하지만 행태가 다시 새로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행태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과 인식의 변화를 낳기 때문이다.

메조 층위는 행동 규칙의 수준이다. 인간사회에서는 행동 규칙이 행위자와 분리되어 메조 층위를 형성한다. 메조 층위에는 제도와 신념체계가 위치한다. 제도와 신념체계는 서로 제약하기도 하고 서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하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한편 제도는 개별 행위자의 행태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마이크로 층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제도가 행태를 규정하지만 개별 행위자의 행태에 의해 제도가 변화한다. 신념체계는 개별 행위자의 동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마이크로 층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신념체계가 동기를 규정하지만 개별적인 동기가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매크로 층위는 시스템 전체의 수준을 가리킨다. 시스템 차원의 질서와 성과가 이 층위에서 나타난다. 질서는 개별 행위자의 행태가 서로 충돌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고 성과는 시스템의 성장이나 富의 창출과 같은 가치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를 가리킨다. 질서와 성과는 행위자의 행태가 잘 조정될 때 산출될 수 있으며 행태의 조정은 행동 규칙의 조합을 잘 배열함으로써 가능하다. 결국 마이크로 층위와 메조 층위가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매크로 층위에서 질서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매크로 층위에서의 질서와 성과는 메조 층위와 마이크로 층위의 상호작용 양식에 영향을 준다. 질서와 성과가 잘 달성된다면 기존의 상호작용 양식은 강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다. 경제시스템 지속의 조건

경제시스템이 질서와 성과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질서가 깨지거나 성과를 낼 수 없을 때 그 경제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고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질서와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경제시스템이 내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합성이 떨어질 때 경제시스템의 질서는 깨지고 성과는 악화된다.¹⁸⁾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행위

적 정합성이고, 둘째는 기능적 정합성이다. 전자가 시스템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성과 산출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적 정합성은 개별 행위자의 행동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에게 기대되는 바대로 행동하도록 조정되는가의 여부이다. 행동의 조정 여부는 달리 말하면, 주어진 제도와 신념체계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혹은 다른 주체들에 의해 기대되는 행동을 유발하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실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개별 행위자들이 서로에 대한 기대대로 행동함으로써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정되는 것이 행위적 정합성이다.

기능적 정합성은 주어진 제도와 신념체계 하에서 유도된 각 경제주체의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 즉 각 경제주체의 행동의 효과가 시스템의 재생산과 성과 창출에 순기능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행위적 정합성이 행동의 유인(incentive)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능적 정합성은 행동의 효과(effect)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의 효과는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집계되어 매크로 변수로 나타난다. 총생산량, 총고용량, 물가수준 등은 개별 행동이 집계된 결과이다. 이들은 시스템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지속과 재생산의 조건이다.

펠리칸(P. Pelikan)은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에 대해 나름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¹⁹⁾ 그는 제도의 지속 조건(the conditions of substantiality of institutions)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관련 주체에 의한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 by human agents concerned)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와 관련된다. 둘째는 자연에 의한 객관적 평가(objective evaluation by nature)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와 관련된다. 또한 그는 제도 선별 과정에서도 두 가지 피드백(the double feedbacks in the selection of human institutions)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정치적·내

18) 생태계에서는 적응, 즉 환경에 대한 적합성이 시스템 지속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도 환경 적합성이 중요하기는 하나 보다 중요한 측면은 시스템의 내적인 정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 Pelikan, P., "Choice, Chance, and Necessity in the Evolution of Forms of Economies," in Canter, U. and Metcalfe, J. S.(eds.), *Change,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Springer-Verlag, 2002.

적 피드백(political·internal feedback)으로서 제도의 수용 여부(approval or disapproval of institutions)에 기반을 둔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외적 피드백(economic·external feedback)으로서 실질적 성과(real-term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것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주관적 평가와 정치적·내적 피드백은 행위적 정합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객관적 평가와 경제적·외적 피드백은 기능적 정합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제도 지속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제도 선별의 기준이라고 파악하였다.

경제시스템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을 유지하는가의 여부는 제도와 신념체계에 의해 좌우된다. 제도와 신념체계가 개별 행위자의 행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통해 이를 봉합하고 새로운 정합성을 달성해야 한다. 제도와 신념체계가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변화하지 못할 때 경제시스템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사회의 질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된다. 물론 현실의 조화는 완벽하지 않다. 갈등이 뒤섞여 있기 마련이다. 또한 강압적인 조화도 있을 것이고 자발적인 조화도 있을 것이다. 조화는 일종의 균형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균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힘은 강압과 이데올로기 조작과 규범과 끊임없는 합의 등 다양하다. 그리고 균형은 불균형과 공존한다.

제도와 신념체계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정상상태이다. 이들 행동은 대개의 경우 확산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변이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조건이 달라지면 새로운 행동이 모방, 혹은 수용을 통해 확산되고 그것이 정착되면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치적인 과정 역시 새로운 입장이나 그룹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력관계가 변화하면 특정 행동의 모방이나 수용의 조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경제시스템 진화의 출발점은 행위자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면 새로운 시도는 어떤 경우에 활발해지는가? 환경의 변화와 기존 시스템에서의 기회의 한계, 새로운 기회의 형성, 기존 시스템 내에서 소의 계층의 형성, 불만의 증대, 상태의 악화 등이 새로운 시도를 유발한다. 이의 표출 형태는 경제적 방식이든, 정치적 방식이든, 문화적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탈법적인 경제행위, 정치적인 요구, 비판적 문화 행위 등이 그것이다.

기존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이 점차 깨지게 된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난다.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이 깨지는 것은 마이크로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회나 불만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위적 정합성이 깨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기대하는 행동과 나의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기능적 정합성이 깨진다는 것은 각자의 행동이 기능적으로 시스템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이다. 행위적 정합성이 사전적인 것이라면 기능적 정합성은 사후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행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확산되고 증폭되는가? 상위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와 패턴을 만들어 내는가? 새로운 질서로의 자기조직화는 강화피드백과 조절피드백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²⁰⁾ 우선은 새로운 경제적 행태가 기존 체제 내에 지속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는 기존 체제의 유연성 혹은 장악력과 관련된다. 유연성이 높을수록, 장악력이 약할수록 새로운 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관계를 낳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시도를 확산, 증폭시키는 강화피드백 관계가 형성된다면 새로운 질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조절피드백이 작동하여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이러한 새로운 행태가 번지는 것을 막게 된다. 그러면 시스템 전체는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20) 강화피드백은 어떤 변화가 다른 요인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 변화가 다시 원래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먹임 되는 루프를 가리킨다. 이에 대칭되는 것이 조절피드백으로 어떤 변화에 대해 그 변화를 억제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되먹임 루프가 작동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만약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다면 새로운 시도는 억압될 것이고 불만과 소외감, 현실과 기대의 괴리는 더 심화된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표출된다면 이러한 일탈적 힘들이 서로 강화피드백을 형성하면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새로운 시도들이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질서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로 이어져야 비로소 구조화·고착화 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질서를 낳는 행동 규칙이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서 제도와 신념체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신념체계의 재편은 새로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동안 억제되어 있다가 돌변적,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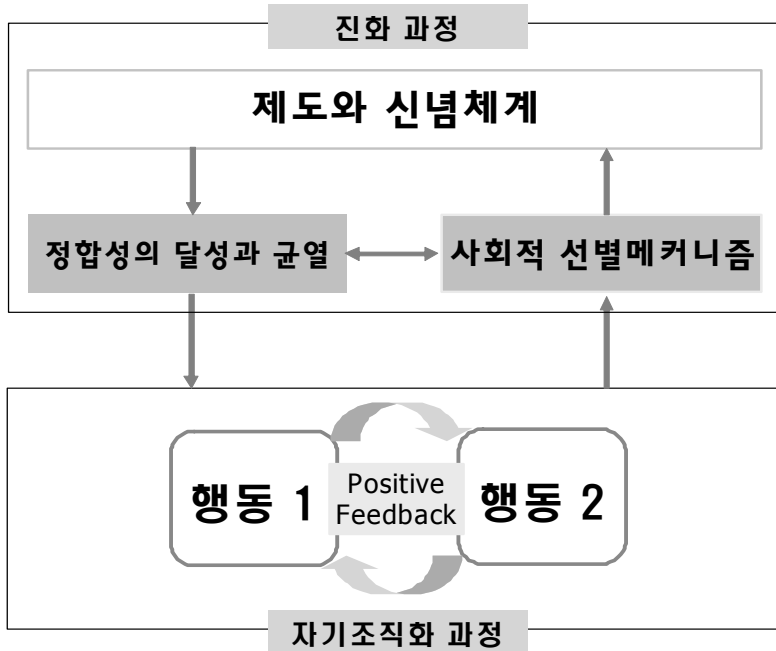
한편 제도와 신념체계의 재편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주어진 제도와 신념체계 하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기존의 관계가 확대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다시 정합성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 제도와 신념체계의 재편을 이루고 일시적인 정합성을 달성한 후 다시 새로운 관계의 진전으로 정합성에 균열이 발생하는 과정이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을 구성한다.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합성의 균열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것이 새로운 시도의 활성화를 낳아 자기조직화를 유도한다. 결국 자기조직화 과정과 진화 과정의 교대에 의해 경제시스템의 넓은 의미에서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III-2>와 같다. 주어진 경제제도가 정합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새로운 행동 혹은 일탈적 행동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강화 피드백을 통해 확산 증폭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된 새로운 행태들에 대해 사회적 선별과정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여 제도와 신념체계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정합성이 일시적으로 달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합성의 균열이 초래된다. 정합성의 균열은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기초로 작용한다. 사회적 선별과정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 여부를 잘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 요소에 대해 선별과 도태를 유도한다면 제도적 진화는 점진적인

양상을 띤다. 반면 사회적 선별과정이 정합성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도적 진화는 시스템의 위기를 겪으면서 진행되는 돌변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림 Ⅲ-2> 경제시스템의 진화과정



3. 북한경제 이행의 복잡계적 분석틀

가. 복잡계 관점의 시사점

(1) 기존 관점의 문제점

북한경제에 대한 기존 관점은 대부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다. 계획과 시장을 양립시켜놓고 이들의 결합과 상호작용, 경쟁 및 대립을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마이크로 차원에서 행위자의 행태를 간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제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뿐 제도 변화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새로운 행태의 등장과 확산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현상 기술에 그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이론 틀에 입각한 분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고 그것과 비교하는 논의가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현상의 기술과 현상의 유형화만으로는 북한경제의 변화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인 경제시스템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북한의 시장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분석은 북한 당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북한 당국 어떤 전략과 정책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 취할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치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변화가 위로부터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이행이 정부 당국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경제시스템 진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시장화 과정이다.

복잡계 관점은 아래로부터의 창발과 시스템 내적 논리에 의한 진화를 보는 관점이다. 복잡계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에 기반을 둔 행위자들의 행태 및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가 시스템 변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메조-매크로의 다층 구조로 경제시스템을 보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변화의 확산과 증폭을 강화피드백의 작용에 의한 내생적인 자기조직화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행태 중심 관점의 필요성

북한 경제 연구의 초점은 시장 관계가 왜,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진화 경로를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복잡계 관점은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로부터 시스템의 진화과정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복잡계를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체계라고 했는데, 이는 구성요소인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 해서이다. 창발과 자기조직화의 핵심은 행위자의 행태를 분석의 기초에 놓는다는 점이다.

제도 자체만 보면 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행위자에 의해 제도가 수용되고 변형되는 과정으로 봐야 제도의 변화가 설명된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과 서로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면서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에서 반응적 행동(operational behavior)과 본원적 행동(generic behavior)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행동은 주어진 제도 환경과 신념체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에 의해 형성된 동기와 능력과 심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행동이 제도를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그 틀 내에서 일어난다면 반응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주어진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본원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디그와 잭슨(R. Deeg & G. Jackson)은 경제주체의 행동에 일정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로부터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²¹⁾

“경제주체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안정화되어있는 시기에도 현 제도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것의 한계를 시험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행한다.”

“현 제도가 더 이상 경제주체가 스스로 규정한 관심을 만족시키는 못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애쓸 것이다”

“제도화된 규칙과 상황적 요구 사이의 갭이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잠재 능력과 가능한 행동집합을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뿐 아니라 학습과 제도적 모험(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을 행한다.”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분석할 때에도 이를 행위자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위자 차원의 분석은 그 행태를 분석의 초점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제도로서의 시장을 분석의 중심에 놓아 왔는데, 행위자의

21) Deeg, R. and G. Jackson, “Towards a More Dynamic Theory of Capitalist Variety,” *Socio-Economic Review*, Vol. 5 No. 1 (January 2007), pp. 159~160.

행태로서의 시장적 행태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시장적 행태는 기존 제도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탈적 행위이다. 이러한 일탈적 행위로서의 시장적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나. 북한 시장화 분석의 시점(視點)

(1) 시장적 행태의 확산 분석

북한의 경제시스템에서 자기조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활성상태가 되어야 한다. 활성상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에너지의 유출입이 있어야 하고 내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태여야 한다. 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내적인 정합성의 균열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대외·대내의 불안정성 증가는 시스템 진화과정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대외적인 상호작용을 막고 내부 부정합 요소를 강제로 억압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정성의 증대를 늦출 수 있지만 이는 시간문제이다. 적절한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요인을 흡수하고 침식 요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안정성이 잠재된 상태에서 누적된다. 이들 요인을 제때에 적절히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80년대 이후 증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 요소의 시도로 나타났다. 이의 자기조직화 과정은 강화피드백의 작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텃밭 허용과 암시장의 형성이 이러한 강화피드백을 형성하였다. 이는 배급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텃밭과 암시장이 배급체계의 취약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강화피드백을 형성한 것이다.

물자 부족과 배급제의 붕괴, 농민시장의 존재 등은 일탈적 행태를 유발하는 배경이 되었다. 개인적 생산 활동과 이의 암시장에서의 거래 행위가 배급제 붕괴와 시장 확대를 더욱 촉진하면서 강화피드백을 형성한 것이다. 기존 제도의 틈새에서 시장 행태가 확산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강화피드백의 분석에서 핵심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농민들 사이의 거래행위, 농민과 도시민 사이의 거래행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강화되었는가가 중요하다. 나아가 이것이 기존 배급제와 계획경제 체계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텐데 그것이 당국에 의해 묵인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되어야 한다.

한편 부정과 부패의 등장은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조절 피드백을 작동시켰다. 이러한 강화피드백과 조절피드백의 결합이 시장경제의 자기조직화를 낳은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기존의 시스템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다. 기존의 신념체계 및 제도적 시스템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나 일어나는지,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인지 등이 문제로 된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재생산 및 지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순기능을 하는 것인지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여부와 적절한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시장적 요소가 일부 제도화된다. 자기조직화된 시장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고착화 되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제도화 이후 다시 새로운 행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제도화 이후 변화된 제도적 환경 하에서 경제 주체는 어떠한 새로운 행태를 만들어 내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행위자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상호작용 하면서 행태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다. 행위자 차원에서 스스로의 행태를 어떻게 적응시켜 갔는가를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장적 행태를 강화시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시장적 행태를 결합시키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시장적 행태를 줄이는 방향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어진 제도 조합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시장질서의 변화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된 제도 환경 하에서 행위자의 행태 변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화 이후 행위자들의 행태 변화를 보고, 그 변화되고 확산 증폭된 행태가 다시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제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행태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시장화의 확산이 조절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위적 정합성은 행동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동, 국가가 각 경제주체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서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분적인 일탈 행동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 상반되는 행동이 일상화되고 광범위해진다면 전체적인 행동의 조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갈등과 불안정이 생길 것이다. 시장적 행동의 확산이 이러한 수준까지 이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기능적 정합성은 사회의 재생산과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저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시장적 행태의 확대는 재생산과 지속 성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당시의 조건 속에서 기능적으로 순기능을 했는지, 역기능을 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행태 혹은 새로운 시도가 적절히 통제되고 제도 내에 흡수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의 범위를 한참 뛰어 넘었기 때문에 행태와 제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²²⁾

기업 행동양식의 변화를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기업 내 행태에서의 시장적 행태(실적에 따른 보상, 기업의 이윤 추구 행태)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것의 확산과 진화과정을 보는 것이 과제이다.

관료적 통제의 약화와 내부자 통제의 강화라는 배경 하에서 어떻게 새로운 행태가 등장하고 확산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관리자의 권한 강화 상황이 어떠한 새로운 행태를 초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행태가 어떠한 다른 경제 주체의 행태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강화피드백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증폭 확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것이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충돌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 정합성 차원에서 용인 가능한 것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7·1 조치 이후 기업 관리체계와 기업 행동양식 역시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화 이후 기업 행위자의 행태 변화와 그것의 확산 및 억제 메커니즘, 그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 환경

22)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이 이 두 가지 정합성 여부를 적절히 점검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행태를 선별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는 제도화 과정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에서는 어떠한 행태가 나타났으며 그것의 영향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후 정부의 억제조치를 불러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2) 시장의 제도화 과정 분석

북한경제에서 시장적 질서의 제도화 과정은 좁은 의미의 진화 과정에 해당한다. 즉 새로운 질서가 구조화, 고착화됨으로써 시스템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합성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진화 과정에서 핵심은 지속적으로 정합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지속과 재생산에 위협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해소하면서 자신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즉 적응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정합성 유지를 위한 선별메커니즘을 잘 갖추고 있느냐가 진화 과정에서 핵심 문제가 된다. 위협이 되는 요소를 끊임없이 걸러내고 해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시스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 때 진화 과정의 점진과 급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선별메커니즘의 적절한 작동 여부이다. 새로운 시도를 충분히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조절메커니즘의 존재 여부도 중요하다. 즉 핵심은 적절한 사회적 선별메커니즘의 작동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순기능적인 것은 받아들이면서 기능적으로 해로운 것은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 억압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허용해서도 안 된다. 소련은 새로운 시도를 억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너무 허용해버린 것이 문제였다. 결정적인 문제는 권한의 이양이나 포기였다. 갑작스런 권한 이양은 새로운 시도를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고 조장하되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감시 속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두 나라의 이행과정의 차이이다. 물론 너무 새로운 시도를 억압하다가 돌변적인 형태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정치혁명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

사회적 선별메커니즘의 적절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회 시스템 지속의 핵심은 결국 적절한 사회적 선별메커니즘을 갖추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선별할 것인가, 시장이 선별하도록 할 것인가, 지방에

선별 권한을 줄 것인가, 협의를 통해 선별하도록 할 것인가, 대중의 힘에 의지할 것인가 등등이 그 후보이다. 즉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조화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선별 메커니즘의 적절성의 기준은 선별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의 기능적 요구, 적응을 위한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요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선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과 시장이 항상 적절한 것이 아니고, 집중과 국가 역시 항상 적절한 것도 아니다. 협의와 시민 역시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경우 이 선별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집중된 상태에서 국가에 의해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별이 실제로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시스템의 정합성 회복과 유지라는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시스템의 행위적 및 기능적 정합성의 균열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가에 의한 선별메커니즘이 적절히 허용하고 통제하면서 진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새로운 시도가 억압되어서 불만이 쌓이고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가? 너무 풀어 놓아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새로운 시도들이 번져 나가고 있는가? 새로운 시도가 사람들의 신념체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국가는 기존의 제도와 신념체계가 심각하게 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도를 통제하면서 기존 체제와 조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고 대답을 얻을 수 있을 때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 대해 올바르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는 기존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행위적 및 기능적 정합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의 위기로 진전될 수 있다.

결국 북한에서 1980년대 이후 등장하여 확산된 시장화의 흐름이 과연 제도화되어 경제시스템의 진화 방향을 이끄는 요소로 자리 잡을지는 두 가지 정합성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행위적 정합성인데, 이는 신념체계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신념이 변하고

이를 당국이 승인 내지 용인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양식으로 정착하고 제도로 공식화하면 제도 요소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사람들의 동기 및 실제 행동과 사회의 신념체계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욕구와 시도에 대해 승인 내지 용인이 안 이루어진다면 불안정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둘째는 기능적 정합성인데, 이는 구성원의 생활 유지와 경제의 재생산 여부에 달려 있다. 새로운 시장적 행태들이 경제 전체의 재생산에 기능적으로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능적으로 적절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요소로 정착한 후에도 기능적으로 적절할지는 미지수다. 하나의 제도로 공식화되었을 때 기존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시스템의 기능적 정합성을 깨뜨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 요소가 기존 제도 및 신념체계와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적당히 조절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제 급변이 나타날지 모른다. 사전적으로는 적절한 선별 여부를 알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 잠재되어 있던 요인이 활성화되면서 강화피드백을 형성하여 돌변적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는 것이다.

결국 제도화 과정 분석은 시장적 행태의 제도화 과정과 그의 억제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를 낳은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은 기존의 제도 시스템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에서 침식이 발생한 내용과 그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행위적 정합성의 침식은 더 이상 기존 제도가 의도하고 요구하는 행동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 정합성의 침식은 기존 제도 하에서 유도되는 행동들의 조합으로는 경제의 재생산과 지속이 어려워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부정합 상황은 불안정을 초래하고 일탈적 행태를 유발하며, 이의 확산은 제도적 변화와 새로운 제도 요소의 도입을 초래한다. 제도적 변화는 사회적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새로운 행태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공식화함으로써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형성했다기 보다는 자기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행태와 상호작용의 규칙을 사후적으로 국가가 승인한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제도적 변화 이후에 의도한 것 이상의 행태와 재생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행태가 나타나자 그러한 행태를 억제하는 조치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조장하던 것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억제를 통해서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을 갖춘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는 국가에 의한 제도의 선별 메커니즘이 두 가지 정합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평가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

결국 정합성 여부에 대한 올바른 반영과 판단이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적절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기초로 선별 메커니즘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제도 변화가 점진적 방식을 따를 것인지, 급진적 방식을 따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Dopfer, K. and J. Potts.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Evolution*, Routledge, 2008.

North, D.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2. 논문

Deeg, R. and G. Jackson. "Towards a More Dynamic Theory of Capitalist Variety." *Socio-Economic Review*. Vol. 5, No. 1 (January 2007).

Dopfer, K., J. Foster, and J. Potts. "Micro-meso-macro."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 14, No. 3 (July 2004).

Foster, J. "From Simplistic to Complex Systems in Economics." *School of Economics-The University of Queensland*. No. 335 (October 2004).

Pelikan, P. "Choice, Chance, and Necessity in the Evolution of Forms of Economies." in Canter, U. and Metcalfe, J. S., eds. *Change,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Verlag, 2002.

제 4 장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이 석)



제4장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이 장은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 재정립한 복잡계적 분석방법들을 원용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계획경제 시스템의 변이와 시장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복잡계적 시각이 기본적으로 행위자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장에서는 이러한 행위자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먼저 북한 경제 전반의 변화 자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개관한다. 이 장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우리는 다음 두 장에서 구체적인 북한경제의 시장 행위자 및 계획부문 행위자의 역할 변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본격적인 북한경제의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의 경제시스템을 복잡계적 시각에서 새롭게 스케치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거 북한경제의 제도적 측면과 이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 및 미시적 행위 정합성의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 시장화의 현상을 시스템 외부의 (새로운 사회적 규칙에 대한) 자기조직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 현상이 왜, 어떤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 북한의 경제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이러한 영향에 대해 북한당국은 개별 경제주체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경제시스템의 공식적인 변화를 이전의 자기조직화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스템의 외부에서 자라난 다양한 사회적 (시장)규칙들을 기존의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또한 이를 전제로 시스템의 운영원리 자체가 변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의 시장화로 과거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이제 시장을 전제로 하여 구축되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음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향후 북한경제의 이행 역시 앞서와 동일한 복잡계적 시각, 다시 말해 ‘기존 시스템의 (정합성) 혼란, 시스템 외부에서의 (새로운 규칙의) 자기조직화, 시스템 자체의 진화’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 가능한지를 토론할 것이다.

1.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영원리

1990년대의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북한에 존재했던 경제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시의 북한 경제시스템을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이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시스템은 이러한 전형적인 계획경제와도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를 서술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 및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은 바로 당시까지 존재했던 북한 경제시스템의 혼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시스템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후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의 과정과 연결시켜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시스템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가 어떤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 제도로서의 경제 시스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계획이 생산 활동을 통제한다.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중앙 계획자가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경제행위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하급자 또는 생산자에게 명령하고 또한 감독함으로써 전체 경제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체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계획이 모든 생산 활동을 포괄하기란 쉽지 않다. 농업과 같이

(생산)계획을 작성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제 분야가 존재하는데다, 여타의 산업에서도 구체적이고 세세한 경제활동을 모두 국가가 일괄적으로 계획하기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대부분의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생산 활동을 통제하지만,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나 또는 그 밖의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세세한 생산 활동과 관련해서는 시장과 같은 계획 이외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실제로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 농업생산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춘 농업협동조합이나 개인농가에 의해 영위되었다. 국가가 비록 이들에게 특정 수량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의 생산 활동에 직접 개입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²³⁾ 이에 따라 대다수의 농업생산자는 일정 수량의 농산물을 국가에 납부하고 난 이후 나머지 여분의 농산물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하였고, 그 결과 농산물을 위주로 한 시장 활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또한 여타의 산업생산과 관련해서도 직접 생산자들끼리의 계획 이외의 거래와 협상이 빈번하였다. 계획이 산업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계획으로 규정되지 못한 여타의 제반 물자의 교류는 직접 생산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협상이나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계획부문 내부에서조차 일종의 초보적인 기업 간 물자교류 시장이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소비에트와 일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이러한 기업 간 물자교류 시장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계획화 제도는 이러한 계획 이외의 모든 생산 활동을 일체 부정하는 이른바 ‘완전 계획화 체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의 모든 생산 활동을 계획기구가 직접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체 계획화 제도가 구축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제제도의 특징을 북한은 이른바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분화 체계’라고 부른다.²⁴⁾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계획자로부터 일선 생산자에 이르도록 수직

23) 실제로 동유럽의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동농장이 아니라 개인농가가 주축이 되어 농업생산을 담당하였으며, 소비에트와 같이 협동농장을 위주로 한 농업체계에서도 개개의 협동농장은 스스로의 생산과 관련한 제반 생산시설을 모두 소유한 채 생산에 관한 한 여타의 산업부분과 달리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24) 이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북한의 ‘경제학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며, 그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론』(북한: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를 보라.

적인 명령의 형태로 작성·실행·보고되도록 계획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의 일원화이며, 이러한 일원화 체계가 경제활동의 거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모든 구체적·세부적 활동 내역에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축하는 것이 계획의 세부화라는 것이다.²⁵⁾ 실제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이른바 주체농법을 통해 농업생산의 직접 계획화(direct planning) 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북한 나름의 기업관리체계를 통해서도 중앙 계획자가 직접 생산자에게 모든 소요 물자를 현장에까지 공급해주는 체제 역시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중앙 계획자가 일선 협동농장의 농업생산 목표를 직접 하달하고, 이의 생산 활동 역시 계획하기 위해 동 농장의 모든 경제적 행위 일체를 통제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북한의 중앙 계획자는 여타의 산업생산에 소요되는 일체의 물자를 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산업생산과 관련된 생산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거래나 협상 역시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완전 계획화 체계에서는 시장과 같은 계획 이외의 모든 경제활동은 사실상 불법화됨으로써 경제 내에서 설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25) 물론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드는 느낌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구심이다. 계획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에트나 동유럽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북한이 이들 국가에서도 실패한 완전계획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의문시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우선 북한당국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계획의 세부화'의 핵심은 이른바 '계획의 세부 균형화'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기업이나 省(ministry) 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같은 계획단위가 수행하는 계획은 두 가지의 계획지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각각의 계획단위 내부에서 자기완결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어짐에 따라 여타의 상급 계획단위에 그 계획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적 (계획)지표이며, 다른 하나는 상급 계획단위가 계획을 작성하여 밑으로 하달해야만 하는 외부적 (계획)지표이다. 예를 들어,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국영농장이 농장 내 일부 토지를 곡물생산에 이용하여 그 생산량 전부를 해당 농민들의 식량 소비에 충당하고 있다면, 이 국영농장의 곡물생산이나 식량소비의 내부적 계획지표가 될 것이다. 반면, 이 농장이 생산하여 국가에 납품해야 하는 축산물이나 이에 소비되는 각종 자재 등은 상부 계획단위의 명령을 토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계획지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계획의 세부 균형화란 이처럼 내부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계획지표의 수요와 공급을 각 계획단위 스스로가 균형을 맞추어 자체 작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상부 계획단위는 내부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외부적 계획지표에 대한 계획만을 작성하여 하달함으로써 실제적인 계획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말하는 계획의 세부화란 중앙 계획자가 모든 세부적인 경제활동을 직접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모든 세부적인 경제활동을 일선 생산자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계획하기는 하지만, 그 계획의 대부분은 생산자를 포함한 하급 계획단위에서 스스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차적 하급단위 스스로가 계획하는 내부 계획지표의 경우 그 계획과정과 방법을 중앙 계획자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강제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계획화 체계에서는 하급 단위가 계획하는 내부적 계획지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중앙이 담당해야 하는 전체 계획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 역시 감소하게 된다. 북한이 과거 소비에트와 같은 여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계획화 능력을 보유했으면서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혁진, "생산계획 체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실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3 No. 2, 9 최용남, "인민경제 계획화에서 경제균형의 분류," 경제연구 1998 No. 3 및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론』, (북한: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를 참고하라.

북한에서 시장은 1950년대까지 농민시장으로 일부 존치되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이러한 농민시장 역시 사실상 경제 내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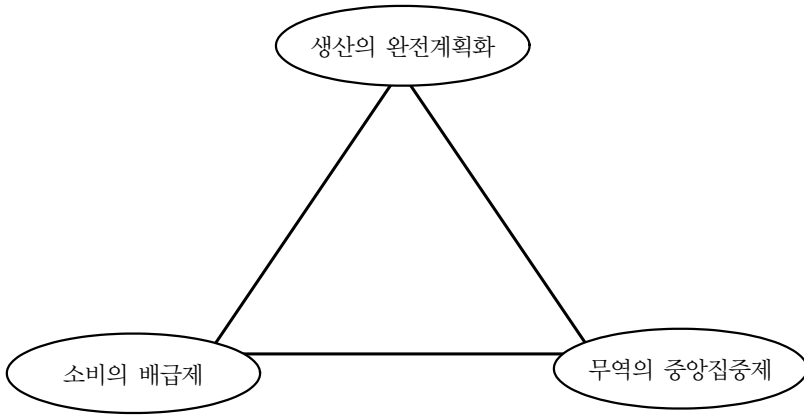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생산 측면에서의 완전 계획화 체계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소비 측면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배급제이다. 경제주체들의 기본적 소비품목인 식량을 국가가 직접 배급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생활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의 배급제는 1945년 해방 직후의 식량난을 배경으로 사회주의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부분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50년대 후반에는 전 경제주체로 확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북한의 배급제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의 부분적 경제제도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하나는 국가의 독점적 식량거래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배급제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협동농장이 주체가 되는 농민 배급제도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57년 식량거래에 대한 내각명령을 통해 당시까지 허용되던 곡물에 대한 일체의 개인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곡물거래를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이로 인해 곡물을 생산할 수 없는 도시민들의 식량소비는 이후 철저히 국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도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식량공급은 이미 1946년부터 국가가 정한 일정한 배급기준에 의해서만 공급되어 왔다.²⁶⁾ 1954년의 개인식량 거래 금지 조치를 토대로 북한의 전 도시민이 국가의 배급제 안으로 완전히 포섭되었다는 뜻이다. 한편, 북한당국은 1959년 발표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관리규정을 통해 협동농장이 생산하는 모든 잉여곡물의 처분권을 사실상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에게 일임하였다.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국가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모든 잉여 곡물의 처분권이 사실상 국가에 귀속된 셈이다. 더욱이 협동농장 조합원의 식량소비에 필요한 곡물의 양 역시 실제로는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농민들 또한 배급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26) 이에 대해서는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호, “임시인민위원회의 식량대책에 대한 결정서,” 1946.02.27 및 내 각결정 제 102호,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할 데 대하여,” 1957.11.03을 보라.

이렇게 형성된 북한의 배급제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농민들은 매해 가을 추수가 끝난 직후 협동농장에서 결산분배를 받는다. 결산분배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물을 분배 받는데, 이 가운데 향후 1년 동안 스스로가 소비할 식량용 곡물은 현물로 분배 받으며, 나머지는 모두 화폐소득의 형태로 분배 받는다. 각 농민이 1년 동안 식용으로 소비할 곡물의 양은 국가가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식량배급 기준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어느 농민이 전해에 비해 더욱 많은 곡물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현물로 받아 소비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동일하며, 단지 그의 화폐소득이 전해에 비해 늘어날 뿐이다. 협동농장은 농민들에게 식용으로 분배하고 남은 곡물 가운데 다음 해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용 곡물이나 사료용 곡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곡물을 국가에 매각하거나 기부한다. 도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식량배급은 바로 이렇게 조달된 곡물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협동농장으로부터 수집한 곡물에 해외로부터 수입한 곡물을 더해 도시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에 나서는데, 도시민들은 1년치 식량을 미리 받는 농민들과는 달리 보통 한 달에 두 번 식량배급을 나누어 받는다. 도시민들이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속한 직장이나 기관에서 발부하는 배급표를 수령해야 한다. 물론 각 직장이나 기관이 이러한 배급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가 식량배급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식량배급과 관련된 감독의 최종적 책임은 통상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게 된다. 배급표를 받은 각 도시민들은 이를 가지고 자기가 속한 식량 배급소에 찾아가 매월 두 번씩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림 IV-1>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



이러한 배급제도는 앞서 언급한 생산에서의 완전 계획화 체계와 더불어 북한에서 시장과 같은 비계획적 경제활동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제약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과 같이 생산은 물론 소비활동까지 모두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또한 배급되는 경우 개별 경제주체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불가능성은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국가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이는 계획 이외의 일체의 경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경우에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비활동 그 자체가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기근과 같은 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의 생산 활동 자체가 일시에 마비될 위험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한 가지 완충장치로서 그간 북한경제에서는 일체의 대외거래 역시 중앙 계획자가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²⁷⁾ 자칫 국내경제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생산과 소비의 실패 가능성이 매우 잘 통제되고 계획되는 대외거래 활동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시도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 등으로 국내의 식량생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가정하자.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북한의 배급제가

27) 북한의 무역제도에 관해서는 고일동, “북한 무역의 분권화 과정과 제도적 실태 및 평가,” 고일동·이석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08-05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붕괴되고, 이로 인해 북한의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북한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또한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중앙 계획자밖에 없다. 중앙 계획자만이 식량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일체의 경제행위를 계획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식량의 대외거래 권한 역시 중앙 계획자에게 일임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식량생산 감소라는 충격에 대응하여 전체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와의 식량거래 결정 권한 또한 중앙 계획자가 행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대외거래 권한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북한의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대외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 정부가 이를 모두 집계하여 배타적으로 해외와의 거래를 수행한 후, 그 과실을 다시 국내의 경제주체에 계획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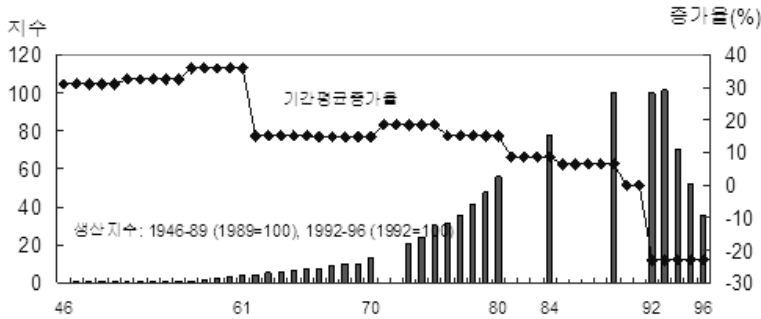
나. 경제시스템의 운영: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

이와 같은 경제 시스템에서는 사실 미시적 행위 정합성이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개별 경제주체가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없으며, 또한 이탈할 유인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 북한에서와 같이 계획 이외의 일체의 경제행위가 모두 금지된 경제 시스템에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독자적 경제행위를 수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방법이 없다. 이를 수행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징벌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별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독자적 경제행위를 수행할 유인도 갖지 못한다. 국가가 배급제로 자신들의 기본적 소비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바로 이러한 배급제를 통해 설사 스스로의 독자적인 경제행위로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로 연결시켜 자신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자의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모든 개별 경제주체가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 의해서만 경제행위를 영위하며, 이에 따라 중앙 계획자의 명령 또한 매우 효과적으로 개별 경제주체에게 전달되는 특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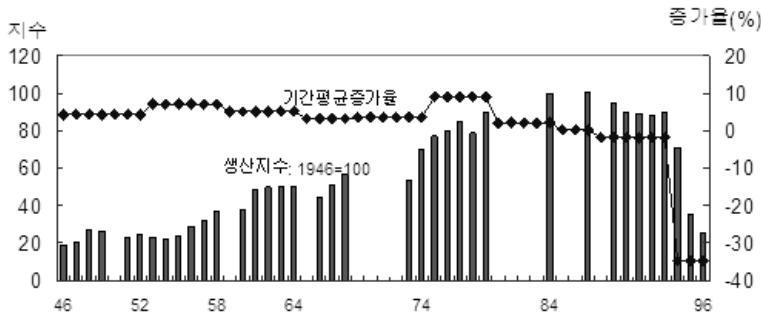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미시적 유인 정합성과는 달리 거시적 기능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그 사정이 매우 다르다. 우선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증대 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일체의 생산 활동이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므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산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생산성 증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는 전혀 반대로 생산성 증대가 일어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소비활동과 같은 후생 수준이 이미 중앙 계획자에 의한 배급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산성 증대에 의한 내포적 경제발전은 개념적으로 발생하기 매우 힘들며, 경제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단순히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노동과 물자를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과 같은 소국경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생산과정에 투입할 여분의 노동력이나 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여분의 노동력이나 자원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경제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장기간 정체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림 IV-2>에서 보듯이 북한의 모든 산출량 변수는 1940년대 이후 1960년대 또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정체되어 그 규모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4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이 추가적인 노동력과 자원의 투입과 같은 외연적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여분의 자원이 모두 소진되는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2> 북한의 공업생산: 1946~1996년



자료: 1. 1946~1989: 북한발표를 정리한 통일원(1996)
 2. 1992~1996: DPRK/UNDP(1998)

<그림 IV-3> 북한의 곡물생산: 1946~1996년



자료: 1. 1946~1989: 북한발표를 정리한 통일원(1996)
 2. 1990~1996: DPRK(2002-b)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체의 진화에 따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일 현대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 요건이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경제 내부에 여분의 노동력과 자원을 끊임없이 경제에 추가적으로 투입해야만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추가적 자원 투입은 무한정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그것의 발전에 따라 일정 순간이 지나면 자체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경제시스템의 위기: 주체의 경제와 기능 정합성의 붕괴

그러면 이러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은 현실적으로 어느 순간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앞서서와 같은 경제제도를 구축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롭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이 이른바 ‘주체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간단히 말해 주체의 경제란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일체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공간 안에서 자기완결적인 성격을 갖는 경제구조를 뜻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우리경제를 생각해 보자. 만일 우리경제의 어떤 기업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 기업은 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철판과 도장재, 그리고 볼트와 너트 등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까? 아마 이들 중 상당부분은 국내의 여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조달하겠지만, 나머지 상당부분은 가격이나 품질 등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수입하여 조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 또한 상당부분은 국내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겠지만, 나머지 상당부분은 해외로 수출할 것이다. 자동차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연관이 국민경제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의 수요와 공급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체의 경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만일 우리경제가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이라면 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철판과 도장재, 그리고 볼트와 너트 등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고 또 생산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 역시 국내의 소비자에게만 공급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주체의 경제를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경제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경제를 상정하는 경우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현대 경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투입물자라고 볼 수 있는 석유와 코크스 탄과 같은 기초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며, 현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밀기계류와 같은 기술집적 제품

또한 생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면 북한이 아무리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을 만들려 시도해도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주체의 경제가 자급자족적 경제는 아니며 일정한 대외거래를 전제로 하고, 심지어는 이를 권장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대외거래가 주체의 경제가 강조하는 자기완결적 국민경제공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복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북한은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이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그런데 일단 석유가 수입되면, 이를 토대로 공장을 돌려 국내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철강을 트랙터 생산에 사용하며, 또 이렇게 생산된 트랙터를 농업부문에 투입하여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식량을 다시 철강산업에 투입하여 소비하는 한편, 이 중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여 석유를 수입하는데 사용하면, 비록 대외거래가 존재하지만, 이는 북한이 말하는 주체의 경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주체의 경제를 강조해 온 이유는 상대적으로 매우 분명하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사실상 일종의 전쟁상태를 유지하여 왔고, 또한 1960년대의 중소분쟁과 같이 사회주의권 내부에서의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스로가 그렇게 원하는 정치적 자주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의 경제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난점이 있다. 주체의 경제 자체가 자기완결적인 국민경제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는 상대적으로 해외의 변수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거의 전적으로 국내의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북한 경제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의 제품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 주체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기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미이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개발해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소비에트와 같은 구(舊)사회주의권과의 교역에서 정치적 교섭을 통해 원조를 확보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실이다. 즉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존재하는 여분의 노동력과 자원을 추가적으로 계속 경제에 투입해야 하고, 그 결과 국내에 존재하는 여분의 노동력과 자원은 더욱 더 소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이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진행될수록 북한이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원의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내의 자원이 소진될수록, 그리고 국내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북한경제가 요구하는 해외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그만큼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통해 북한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유지하는 일은 경제 시스템이 진행될수록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의 질문으로 되돌아가보자.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은 현실적으로 어느 순간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북한의 대외거래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가 바로 해외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대외거래이며, 이러한 대외거래가 주체의 경제라는 북한의 전체 경제구조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기본 변수이기 때문이다.

2. 북한의 시장화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

우리는 이제까지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복잡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이러한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시장화라는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거시적 기능정합성의 붕괴가 일종의 연쇄작용으로 미시적 행위 정합성의 붕괴 역시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적으로는 북한의 전체 경제 시스템이 일시에 마비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990년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복잡계에서 말하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정합성과 유인정합성의 붕괴 → 기존 시스템의 작동 정지·혼란 → 개별 행위자들에게 의한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경로를 그대로 밟아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러한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1990년대 이후의 실제 과정을 통해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가. 주체의 경제에서의 기능 정합성 붕괴 - 1980년대 곡물무역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는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언제나 북한이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무역적자의 문제가 시스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붕괴시키는 촉매제(trigger)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식량과 관련한 대외거래의 경우 북한은 언제나 의식적으로 무역흑자 또는 적어도 수지균형을 달성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대외거래에서는 북한이 언제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지만, 식량거래에서만은 일정한 수지균형이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간 북한당국이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치적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에 대외거래를 담당하는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이를 훼손하는 것을 극히 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만일 북한이 식량과 관련한 대외거래에서 적자를 기록한다면, 이는 기존 북한의 경제시스템에 상당한 이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표 IV-1>을 살펴보자. 이 표는 1975~1980년간 북한의 곡물무역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북한은 곡물무역에서 달러 기준으로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북한 전체의 무역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곡물무역의 흑자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간 중 북한이 물량기준으로는 오히려 해외에서 곡물을 순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무역 데이터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북한이 물량기준으로 해외에 곡물을 순수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그간 달러기준으로는 곡물을 순수출하면서도 물량기준으로는 이를 순수입해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처럼 흥미로운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분명하다. 즉 북한이 해당 기간 중 국제적 곡물가격의 상대적

차이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75~1980년의 기간 동안 북한은 해외에서 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다 국제가격이 높은 쌀의 수출을 연계시키고, 그 밖의 곡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보다 국제가격이 높은 옥수수의 수출을 함께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식량거래에 관한 한 물량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하지만, 달러기준으로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결코 우연히 발생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대외거래를 담당하는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매우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표 IV-1> 1975~1980년 북한의 전체 무역과 곡물무역 비교

	수량 (1000 MT)	금액 (백만 달러)
I. 곡물무역		
수출	2763	686
(쌀)	-1563	-538
(옥수수)	-1200	-148
수입	3021	506
(쌀)	-40	-14
(밀)	-2510	-433
(기타)	-471	-59
무역수지	-258	181
II. 무역 전체		
수출	-	6479
수입	-	7503
무역수지	-	-1024

자료: 이석, “1980년대 북한의 식량 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식량위기의 기원”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2004), p. 63.

〈표 IV-2〉 북한의 곡물무역 현황, 1981~1989년

		1981	1983	1986	1987	1988	1989
물량 (MT)	수입(A)	720,000	350,000	353,000	698,000	1,081,335	466,389
	수출(B)	263,700	120,000	200,000	260,000	243,000	90,000
	(B) - (A)	-456,300	-230,000	-153,000	-438,000	-838,335	-376,389
금액 (1000 달러)	수입(A)	158,000	68,000	52,600	90,500	140,420	76,350
	수출(B)	118,700	35,000	44,000	61,100	51,000	18,000
	(B) - (A)	-39,300	-33,000	-8,600	-29,400	-89,420	-58,350

자료: FAO 통계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북한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간 식량의 대외거래에서만큼은 표면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전반적 대외거래가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지속되었다. 둘째,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만일 식량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의 기존 경제 시스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북한 경제시스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의 붕괴가 바로 이러한 식량거래에서의 적자로부터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표 IV-2>에서 보듯이 북한의 식량거래는 1980년을 기점으로 항상적인 무역적자로 돌아서며, 이는 물량기준으로뿐만 아니라 금액기준으로도 역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표 IV-1>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이 물량기준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곡물은 쌀과 옥수수과 같이 북한의 주요 식량 배급 품목이다. 그렇다면 198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금액기준으로도 적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당연히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한 내부의 배급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쌀과 옥수수가 생산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기존의 배급제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압박에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1980년을 기점으로 기존 북한의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은 이러한 배급제의 압박으로 인해 기존의 경제시스템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들을 시작하며, 이러한 완화조치를 계기로 1990년대 북한경제에서는 새로운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 1990년대 초기의 일탈행위와 제한적 시장화

북한당국이 기존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식량거래가 적자로 돌아서고, 배급제 역시 일정한 압박에 직면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자구적 식량 확보 노력을 일정 정도 용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80년을 기점으로 그간 식량배급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토지개간과 영농활동 일부를 허용하는 한편,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농민시장을 1일장으로 복원시켜 평양 등 주요 대도시에 그 설립을 허가하는 새로운 실용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경공업 분야에서 이른바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농민시장 역시 그 규모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어 북한의 거의 모든 군에서 3~4개의 시장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농민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류와 일부 곡물류가 급속히 유통되었고, 그 결과 북한주민들의 식량소비에 있어 시장이라는 요소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1987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배급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한다. 197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을 이 해를 기점으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대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산업부문 노동자들에게까지 소규모의 텃밭 보유를 허용하는 한편, 각 국영기업체들을 통해서는 종업들에게 공식적인 영농시간을 배정해 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1982년 이후 식량과 관련한 주민들의 자구노력을 인정하는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이를 근거로 기존 배급제의 보호 범위를 공식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러한 정책은 곧바로 부작용을 불러왔다.²⁸⁾ 각 경제주체들이 개인

28)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을 보라.

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변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이제까지 경작이 금지되었던 옥수수 등 주요 배급 곡물을 생산·소비·유통시킨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위는 배급량의 감소에 대한 당연한 경제적 반응이었으나, 기존의 경제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공식적인 배급제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주민들의 이러한 불·비법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조치들을 강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7년에는 농민시장을 종래의 1일장에서 7~10일장으로 환원시키고 거래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김일성 명의로 ‘인민생활향상 3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적인 토지경작을 금지하였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비사회주의 타파 그룹빠’ 등을 조직해 농민시장과 불법적인 토지경작을 물리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은 계속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공식적인 배급제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1991년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소위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92년에는 군인과 중노동자를 제외한 주민들의 식량배급이 다시 10%씩 감량 되었고, 1993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식량 확보가 추진되는 등 비상상황이 초래된 것이다.²⁹⁾ 이러한 배급제의 기능 약화는 당연히 북한주민들의 불·비법적인 자구적 식량 확보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민시장은 ‘유동장’이라는 형태로 암시장화 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부터는 남포 등 대도시에서조차 주요 배급품목인 동시에 거래금지 품목인 쌀이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³⁰⁾ 한편, 이처럼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 불능상태가 지속되면서, 1993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은 다시금 유희적인 정책으로 선회한다. 암시장화 하던 농민시장을 다시 1일장으로 환원시켜 합법적인 거래공간을 만들어 주는 대신, 장세를 부과하고 공업제품 등 금지된 거래품목을 규제하는 등의 체제내화 노력이 시작되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29) 일본의 라디오프레스가 발행하는 월간지 『北朝鮮 政策動向』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자세한 사건일지를 기록하였다. 『北朝鮮 政策動向』, No. 12 (일본: 라디오프레스, 1993).

30)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사회경제적 역할,” 『통일연구논총』, Vol. 6 No. 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불법적 토지경작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정책이 실시된 것이다.³¹⁾

이처럼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초기 시장화 현상은 매우 분명한 과정을 거쳤다. 우선 당시부터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당국은 이에 주민들의 자구적 식량 확보 노력을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당국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주민들의 자구 노력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이자,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장행위에 몰두하였다. 복잡계적 시각에서 말하는 이른바 강화 피드백 현상이 북한의 초기 시장화 현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강화 피드백 현상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은 ‘규제’ 일변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식량상황의 악화라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추가적 기능 정합성 약화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장행위라는 강화 피드백 현상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 것이다.

다.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쇼크와 기존 시스템의 행위 정합성 붕괴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은 1994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의 거시적 기능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미시적 행위 정합성마저 완전히 붕괴함으로써 시장화가 기존 시스템의 외부에서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4년은 두 가지의 외부적 경제쇼크가 북한경제에 한꺼번에 밀어닥친 해였다. 하나는 ‘러시아 쇼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중국 쇼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우선 러시아는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 대외거래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중요한 거래 파트너로서 석유나 기계류와 같은 북한경제의 기초적 투입 물자를 거의 전량 제공하고 있었다.³²⁾ 그러나

31) 『북한실상 종합 자료집』(서울: 내외통신사 1995), pp. 71~72;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pp. 9~10.

32) 대외무역은 북한의 경제현실 가운데 외부 관찰자들이 가장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무역은 거울통계로 불리는 거래 상대국의 통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1990년 이전 북한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Thesis, (Northern University USA 1992)를 이용한다.

1989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對러시아 무역은 이후 과거의 거의 1/10 수준으로 급락한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석유소비와 같은 전략적 물자의 투입량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급락한다. 실제로 1990년 하루 7만 배럴을 상회하던 북한의 석유 소비량은 이후 연평균 13% 이상씩 감소하여 1996년에는 하루 3만 배럴 이하로 급락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이 1994년을 기점으로 국내의 농업 및 산업 생산량의 하락을 연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업생산은 1994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비료생산량은 전 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그 결과 곡물생산량 역시 20% 이상 감소하는 악순환이 초래된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1994년 식량의 해외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국 쇼크’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1980년을 기점으로 대외적인 식량 순수입국으로 전략하는데, 북한의 식량 수입 규모는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연간 100~150만 MT로 급증하게 된다. 당시 북한의 국내 곡물생산이 대략 400~500만 MT 정도로 가정하면, 해외에서의 식량수입규모가 북한 국내 생산량의 1/4을 상회할 정도로 대규모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곡물수입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문제는 1994년을 기점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고 북·중간의 정치적 갈등현상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대북 옥수수 수출이 전년의 90만 MT 수준에서 20만 MT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곡물 전체 곡물 수입량 또한 전년도의 140만 MT에서 40만 MT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점이다.³³⁾

이러한 두 가지 쇼크는 기존의 북한 경제 시스템을 근거로부터 뒤흔들게 된다. 우선 당시부터 북한의 배급제가 사실상 작동을 멈춤으로써 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근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1994년을 기점으로 함경도를 위시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기근 현상은 이후 평안도 등

33) Kim, Lee & Sumner, “Assessing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6, No. 3 (April 1998), pp. 519~535에서 이용한 미국 농업성의 북한 곡물무역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서북지역과 심지어는 황해도 등의 서남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된다. 또한 북한의 계획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실업 현상이 만연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산업생산량은 이전의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러한 산업 생산량의 급락은 석유와 같은 기초적 투입물자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대다수 기업들이 사실상 활동을 멈추었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시 노동자들이 사실상 실업상태로 전락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배급제가 붕괴하여 기초적인 소비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부문의 가동중단으로 소득의 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대다수의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기존의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부여되었던 미시적 행위 정합성이 사실상 붕괴하게 된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처럼 계획부문의 명령에 따라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들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요구하던 계획에 따른 경제행위가 아닌 다른 경제행위에 나서기 시작하고 이러한 경제행위는 결국 주민들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시장화 이외에는 별달리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한국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량을 중심으로 한 북한주민들의 소비행위 60~70%가 체제 밖의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⁴⁾ 이는 모든 주민들의 경제행위는 국가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기존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이 1994년을 기점으로 붕괴하며 이를 시장화라는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논리가 대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라. 새로운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1: 개별 경제주체의 시장행위와 원시 시장화(Primitive Marketisation)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본격화된 시장화 현상은 단순한 기존 경제시스템에서의 일탈행위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탈행위가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로 확산되어 이들 사이의 새로운 자생

34) 통일부, “최근 북한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분석,” 보도자료, 1998.12.

적 사회적 규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규칙을 기반으로 기존 경제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단계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994년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행위 정합성과 기능 정합성이 모두 와해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외부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들이 형성되는 자기조직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지구적 식량 확보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배급제가 전면적으로 붕괴된 이제 모든 개별 경제주체들은 텃밭과 폐기밭 등 합법, 비합법, 불법의 모든 토지를 사적으로 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 작물 역시 이제까지는 사적으로 재배가 금지되었던 옥수수 등의 배급곡물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사적인 토지개간 행위는 비단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산업부문 종사자들에게까지 확산되었으며 북한의 계획당국 역시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사적인 경작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시가구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통해 곡물을 구입하려는 시도가 일반화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 시장은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확보 차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단 시장이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 확보 채널로 등장하자, 이들의 여타 경제행위 역시 완전히 변모하게 된다. 시장에서의 곡물거래가격은 이제까지의 공식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이에 따라 계획부문의 소득만 가지고는 시장에서의 곡물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소위 장사라는 (추가적) 경제행위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이러한 시장소득이 불가능한 개별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자산이나 화폐소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이를 토대로 식량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제반 경제행위가 이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당연히 기존 계획부문의 급속한 침식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개별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제공하는 소득의 기회가 계획부문에 속한 기존 직장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이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 이탈하여 시장행위에 참여할 커다란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1994년 이후의 급격한 경제위기로 기존 계획부문의 생산기관 대부분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놓임에 따라 북한의 계획당국으로서도 이러한 계획부문의 침식을 방지할만한 명분과 수단을 상실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1994년 이후 북한당국은 (농민)시장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였으며, 식당이나 좌판과 같이 시장에서의 식량유통이나 여타 상업행위 등 일체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시장과 관련한 제반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새로운 제도는 아직 공식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속히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경제 전체는 일종의 원시적 시장행위(primitive market activities)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는 각자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홍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러한 홍정 또는 사적인 계약을 뒷받침(enforce)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각종 비·불법적 거래와 약탈적 거래 행위 역시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미 작동을 멈춘 계획부문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장 자산을 임의로 절취하여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인근 중국 등과의 밀무역에 나서고, 이를 통해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이나 여타의 산업부문 기업체들 역시 공식가격을 크게 웃도는 시장가격을 겨냥해 곡물 등 스스로의 생산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역시 빈번해진 것이다.

마. 새로운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2: 원시 시장화와 계획경제의 변화

당연히 이러한 원시적 시장화의 전개는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으나, 이를 통제해야 할 북한의 중앙 계획자는 1994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사실상 이에 대처할만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원시적 시장화의 자기조직화 논리 속으로 포섭되는 경향 또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배급 시스템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북한의 계획당국은 더 이상 국가

에 의한 충분한 식량배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식량배급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³⁵⁾ 과거 국가, 특히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인식되던 식량배급의 책임을 지방정부, 심지어는 기업에까지 분담시킨 것이다. 그 결과 이제까지 모든 주민이 지역이나 소속 등에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균등한 식량배급을 받는다는 기존의 원칙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즉 식량의 가용성에 차이가 나는 개별 지역이나 기업에 소속된 경제주체들은 이제 언제든 차등적인 식량배급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응당 지방정부나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이며 자구적인 식량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나 계획부문의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이제 좋은 싫든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원시적 시장화의 영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배급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지방-기업 간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식량의 생산과 분배, 유통에 관한 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과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행사하던 외국무역의 권한을 지방정부, 심지어는 개별 기업에까지 허용하였다. 그 결과 1950년대 이후 한 번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대외거래에서의 중앙집중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하나는 대외거래를 통해 사실상 경제의 분권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이제 대외거래 자체가 중앙의 계획이 상업적인 경제동기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기업 등 여타의 모든 계획기구 역시 이제 일정 정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대외거래의 분권화를 통해 북한의 계획기구 역시 원시적 시장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한편 이러한 계획기구 자체의 실질적 시장화는 계획기구의 관리에 있어서의 변화 역시 몰고 왔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1990년대 중반 농업부문에서는 식량생산 증대를 목표로 새로운 협동농장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협동농장 관리제도의 두 축을 이루던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가 폐지

35) 『중앙일보』, 1995년 5월 28일.

되고, 이를 대체하는 新분조관리제가 실시된 것이다.³⁶⁾ 新분조관리제의 핵심은 농장원들이 국가의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생산한 식량에 대해서는 자율적 처분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952년 ‘모든 식량(곡물)은 국가만이 거래할 수 있다’는 내각명령을 통해 확립된 국가적 곡물통제권이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또한 1997년부터는 기존의 주체농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쌀과 옥수수 위주의 농업생산을 감자나 보리, 콩 등 기타 작물에 대한 생산으로 다변화시키고, 각 협동농장의 작물선택권 역시 협동농장 스스로에게 일부 이양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그 후에도 이어져 1990년대 후반 나진선봉 지역 협동농장의 경우 작물선택권과 종자선택권을 스스로 가지고, 내부에서 선출된 위원장을 통해 농장을 자율 경영해 나가는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³⁷⁾

마지막으로 북한의 계획당국은 이 기간 중 밑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생적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에 부응하여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모색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주체의 경제를 일정부분 완화하여 북한경제 자체를 세계경제로 편입시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6년 북한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그간의 자립경제원칙에서 벗어나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³⁸⁾ 또한 1997년 북한 농업위원회 역시 ‘북한은 농업생산성 증대와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농산물 가격 구조의 전반적 재조정이나 소규모 농업시장 도입 및 자유화와 같은 시장화 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³⁹⁾ 이러한 북한당국의 태도는 이후 나진선봉지구에서의 경제적 실험으로 나타났다. 1997년 나진선봉 지역에 한해 식량의 국정가격이 폐지되고, 곡물의 국가배급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노동자들의

36) 『조선신보』, 1997년 7월 30일;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37) WFP/FAO,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9).

38) 『北朝鮮 政策動向』, No. 6(일본: 라디오프레스 1996), pp. 56~57.

39) 황동연,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경제』, Vol. 41 (現代經濟研究院, 1998), p. 86.

월 급여액 또한 3,000~4,000원으로 30~40배 인상된 것이다.

바. 소결: 시스템의 자기조직화로서의 북한의 시장화

요컨대 1990년대 경제위기로 본격화된 북한의 시장화는 ‘기존 시스템의 행위 정합성 및 기능 정합성 붕괴 → 개별 경제주체의 자구적 노력을 통한 시장행위 일반화 → 시장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시적 시장화 → 원시적 시장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한 기존 경제 시스템의 작동방식 변화 → 시장화를 전제로 한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의 모색’이라는 과정으로 숨 가쁘게 진전되어왔다. 만일 복잡계적 분석방법에서 말하는 자기조직화의 현상이 기존 시스템의 외부에서 개별 경제주체들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1994년 이후 북한에서 본격화된 (원시적) 시장화는 정확히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현상이다.

3.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진화 - 시장의 제도화와 시스템의 변모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북한 시장화의 자기조직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또 다른 형태로 변모한다. 북한의 중앙 계획자가 이미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전제로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발생한 북한 시장화의 자기조직화 현상과 이로 인한 자생적 시장화의 규칙들이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는 이제 자기조직화를 넘어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북한의 제반 경제제도 역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가. 자기조직화로 등장한 시장규칙의 제도화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1998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호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FAO에 따르면, 이 해 북한의 곡물생산은 전년의 270만 MT 수준에서 320만 MT로 20%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당국 역시 종래 중단되었던 공식적 식량배급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등 기존 경제시스템의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북한 당국의 경제 시스템 재정비 사업이 바로 이 해 개정된 북한의 신헌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98년 전체 주민이 참가하는 총선거를 통해 새롭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렇게 선출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의 첫 번째 과업으로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는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⁴⁰⁾ 더욱이 이러한 헌법의 개정은 주로 경제부분의 대폭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라는 기존 시스템 외부의 자기조직화 현상에 대응하여 국가 스스로가 이제 경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신헌법은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기존 시스템 외부의 자기조직화 현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먼저 그것은 1990년대 중반의 자생적 시장화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규칙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후 추인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 헌법은 식량과 관련된 텃밭의 경작을 협동농장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신헌법에서는 이러한 협동농장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전 주민이 텃밭경작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과거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대외무역의 주체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서 분할,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대외무역 권한 역시 제도화 하였다. 한편 협동농장이 소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종래의 농기구에서 농기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협동농장 통제권 약화를 수용한 것도 신헌법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또한 신헌법은 1990년대 중반 진행되었던 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전제로 기존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헌법에는 과거 헌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경제 용어들이 삽입되었는데, 그것은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용어들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60년대 이후 북한은 매우 통제적인 완전 계획화

40) 장명봉 편, 『김정일 체제하의 최근 북한 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및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에는 북한의 헌법과 최근 제·개정된 각종 법률이 망라되어 있다.

체제와 배급제 경제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기존 시스템 아래에서는 원가나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개념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들이었다. 모든 경제행위가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 의해 실행되며, 이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이나 소비 역시 모두 중앙 계획자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원가나 가격, 수익성과 같은 개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개념들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통한 자율적 경제행위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는 다시 북한경제에서의 일정한 시장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1998년 신헌법에 이러한 경제 용어들을 새로이 삽입했다는 사실은 향후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과거와 같은 통제적인 완전 계획화나 배급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정 부분 시장적 요소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시장화라는 시스템 외부의 자기조직화 현상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과 의지가 표현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북한의 신헌법은 그간 북한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헌법은 북한경제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모든 소유권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에만 귀속되고 모든 경제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경로에 따른다는 등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기본 내용들에 있어서는 과거와 완전히 동일하였다. 이는 비록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북한당국이 일정 정도의 시장화를 용인하고 제도화하는 등 기존 시스템의 진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진화가 기존 시스템의 전면적 폐기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당국의 이중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1998년 신헌법의 방점은 자생적 시장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칙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그 토대 위에서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두어졌다. 실제로 1998년 12월 북한당국은 UNDP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의 경제재건과 농업 복구를 위한 원탁회의’에서 향후 경제정책을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끌고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언급하였다.⁴¹⁾ 이 회의에서 북한당국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 각국에 경제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장경제제도

를 학습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경작지 일부에 대해 실질적 사유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보고한 것이다.⁴²⁾ 이는 비록 북한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북한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의 현상이 이제 공적 부문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제도적 진화의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도적 진화는 1998년 이후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북한에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일련의 경제법률로서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1998년 12월 북한에서는 농업법이 제정되었다. 농업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형해화된 사회주의적 농업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농업부문에 일어난 일련의 정책적 변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2002년 6월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996년 실험적으로 도입된 신분조관리제에 대한 제도화의 길을 열었다.

한편, 1999년 4월에는 인민경제계획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1998년 헌법의 정신을 구체적인 경제법의 형태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법제정과 거의 동시에 시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의 원칙 또는 그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한 법제정 또한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7년 제정된 ‘가격법’을 이 해 8월 새로이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가격법’은 공식 가격의 제정권한을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중앙 및 지방의 기관, 기업소, 단체 등으로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시도된 경제관리체계에서의 중앙-지방-기업의 관계변화를 수용하고, 각 지역 및 기업차원에서의 분권화된 경제관리 능력 제고를 제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41)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1998.

42) “北朝鮮 政策動向,” No. 12 (일본: 라디오프레스, 1998), p. 34.

나.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운영원리: 시장에 근거한 계획경제

이처럼 1998년과 2000년대 초반 사이 기존의 시장화를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북한당국은 2001년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이제는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전제로 하여 운영한다는 새로운 경제관리원칙들을 구축한다. 즉 2001년 북한당국은 기존 경제시스템의 제도적 변화를 종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경제관리모형’ 또는 ‘경제관리이론’으로 제시하려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시도가 이른바 ‘2001년 김정일의 경제메모(또는 지시)’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이 해 10월 김정일은 당과 내각에 경제정책과 관련된 일종의 비밀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이 조심스럽게 추진해온 여러 실험적 경제정책들을 집대성하여 한층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계획 및 경제의 분권화에 대한 시도가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군수산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을 제외한 여타의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지표의 설정과 실행 역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과 지방, 그리고 일선 기업들 각자가 스스로의 고유 영역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동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질서에서는 가격의 제정권한 역시 최하 지방공장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분권화된 경제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관리 역시 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이들 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이 다시 당과 국가에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경제관료 중심의 경제운용이 강조되었다. 이는 기존의 당 우위 경제운영 방식을 전면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경제의 분권화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이를 위한 자율성 확보 또한 보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익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양적인 생산량 중심의 경영에서 질적인 생산물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기업에까지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적용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경영의 전 분야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창설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종래 계획당국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수행되던 기업 간 물자공급을 각 기업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여분으로 보유, 시장에서 교환함으로써 보다 효율화시키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각 기업은 시장거래 물자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는 물론 생산 확대의 인센티브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의 분권화와 자율화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국가를 통한 무상지원이 주를 이루던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등 분배제도에 있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시도되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거의 무상으로 지원되던 식량, 의료, 교육 등 제반 사회적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의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 또한 단순히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의 측면에서 균등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각자의 근로형태와 질에 따라 차등 결정하는 등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상의 경제운영원칙들은 1998년과 2000년대 초반 사이 북한당국이 시장을 전제로 기존의 시스템을 새롭게 (재)제도화한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창설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평균주의의 극복이었다. 이들 내용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시장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북한당국의 시각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간 북한당국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주장하는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를 근거로 사회주의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있어 시장의 필요성을 부인해 왔다. 따라서 2001년 김정일의 경제관련 지시내용 가운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창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북한당국 역시 사회주의 경제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도 시장이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평균주의의 극복이란 일반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던 사회적인 서비스의 가격이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적절히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2001년 김정일의 경제관련 지시내용은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러한 관심은 이들 지시내용이 2002년 현실로 구체화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다. 시장을 전제로 한 경제정책과 시장 자체의 제도화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시장화라는 시스템 외부의 자기조직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또한 이에 근거해 북한의 경제시스템 자체를 진화시키려는 북한당국의 노력은 2002년 7월 이른바 ‘7·1 조치’라는 본격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발표하였다. 북한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7·1 조치’는 1945년 북한의 토지개혁에 비견할만한 ‘혁명적’ 조치였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경제는 과거와 근원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⁴³⁾

발표된 ‘7·1 조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⁴⁴⁾ 하나는 기존의 식량을 비롯한 공식가격체계를 당시의 시장가격체계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공식가격체계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역시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임금과 물가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식 환율 역시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7·1 조치’ 이전 1킬로그램당 8전에 불과했던 공식 쌀 가격은 무려 550배가 오른 44원으로 상승하였고, 월평균 110원에 불과하던 일반 노동자의 임금 또한 18배가 된 2000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수준의 상승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적 가격체계의 변화였다. 예를 들어, ‘7·1 조치’ 이전의 공식 가격 체계에서는 세숫비누 한 개의 가격이 쌀 1킬로그램의 가격 보다 더욱 비쌌다. 그러나 ‘7·1 조치’ 이후 세숫비누의 가격은 종래의 2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쳐 오히려 쌀과의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임

43)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 6. 26).

44)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금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중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평균 20~25배인데 반해 일반노동자의 임금인상률 18배에 불과 하는 등 근로형태별 임금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⁴⁵⁾

그런데 이러한 ‘7·1 조치’의 공식적인 발표내용과는 별도로 이 조치의 실질적 내용이 북한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는 보고 역시 등장했다. 이 조치를 계기로 북한당국이 ‘변 수입’ 지표 등 새로운 수익성 개념을 각 기업에 하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수익성 개념을 토대로 전체 경제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꾸려 나가기 위해 2001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 내 모든 기업의 부채를 동결하고 손익상태를 영(零)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⁴⁶⁾ 실제로 북한 무역성의 고위관리는 2002년 9월 동경에서 개최된 북한의 경제정책 설명회에서 ‘7·1 조치’의 주요 내용이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가격 및 임금을 대폭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보고를 뒷받침했다.⁴⁷⁾ ‘7·1 조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든 이 조치가 ‘2001년 김정일의 경제지시’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은 틀림없었다. 이를 계기로 그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던 식량 등 사회적 서비스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재조정하여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극복하며, 기업활동의 근간을 기존의 양적 생산에서 수익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7·1 조치’의 내용은 북한경제에 즉각적인 혼란을 불러왔다. 아직 북한에서 시장은 완전히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를 전제로 한 계획부문에서의 변화만을 발표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곡물의 공식가격만을 시장가격으로 급속히 상승시키자, 곡물의 시장가격이 안정되기는 커녕 다시 시장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된 것이다. 배급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장이 아직 완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공식적인 식량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시장가격의 더욱 급속한 상승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7·1 조치’ 이후의

45) 강일천,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 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 6. 26》.

46) 양문수,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 59.

47) 김용술, “북한경제정책 설명,” 『KDI 북한경제리뷰』(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공식가격체제와 시장가격체제의 괴리수준은 그 이전 보다 오히려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7·1 조치’ 이후 조정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그 실질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전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다시 대다수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 안의 계획부문에서 이탈해 체제 밖의 시장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후반 기존 시스템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모두 붕괴됨으로써 대다수 경제주체들이 시스템 외부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에 더욱 매몰되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원인은 아직 북한에서 시장이 완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2003년 초반 기존의 시스템 외부에서 존재하던 시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를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 해 3월 조선중앙통신은 종래의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변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각 시도에 기존의 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인정하고 그 거래품목을 확대하는 대신 지방의 행정기관이 장세를 징수하고 전반적인 시장거래를 감독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⁴⁸⁾ 또한 이 해 5월 들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적인 기업(private enterprise)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수를 자유로이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 역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북한의 시장은 하나의 공식적 제도로서 대다수 경제주체들의 일상행위 대부분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기구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 지역에 합법적인 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곡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재화가 이들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⁴⁹⁾ 그러나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계층별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종래 배급제의 보호를 받던 많은 한계 계층들의 소비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

48) “北朝鮮 政策動向,” (일본: 라디오프레스, 2003), p. 37.

49)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동향,” 『통일경제분석 2005-02』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

다.⁵⁰⁾ 과거 북한의 경제시스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행위와 이에 따른 소득과 소비, 그리고 후생수준의 격차라는 본격적인 시장경제적 현상이 이제는 북한의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라. 소결: 경제시스템의 진화로서의 시장화

요컨대 1998년을 기점으로 2003년까지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진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진화는 1) 1990년대 중후반 기존 시스템의 외부에서 진행되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을 북한당국이 일정부분 승인하고, 2) 이로 인해 발생한 자생적 사회규칙들을 국가의 공식제도로 포섭하는 것은 물론, 3) 이를 근거로 기존 계획부문의 제도나 운영원리 역시 시장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잡계적 분석시각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거시적·미시적 정합성의 붕괴 → 일탈행위의 증가 → 이에 따른 자기조직화와 새로운 사회규칙들의 형성 → 동 사회규칙들의 제도화 → 기존 시스템의 진화’라는 형태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었던 자생적 시장화 현상은 이제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북한 시스템의 진화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진화된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시장을 전제로 하지만 계획부문의 존재와 그의 운영을 경제의 주축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일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계적 시각과 매우 잘 일치하며, 따라서 향후 북한의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50) WFP/FAO,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November 2004)를 보라.

4. 돌발적 진화와 점진적 진화 -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또 다른 시장의 자기조직화(?)

앞에서와 같은 논점과 관련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4~2005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이 그간 보여 왔던 시장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일부 수정하여 다시금 시장을 통제하고 착취함으로써 계획부문의 강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부활시키려는 것과 같은 시도 역시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고, 이로 인해 북한당국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소폭이지만 꾸준한 양(+)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4~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북한의 식량생산 역시 크게 증대하여 그간의 식량위기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경제사정의 상대적 호전을 배경으로 북한당국이 점진적인 시장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해외의 곡물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다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성과 연령을 규제하여 시장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소위 시장에서의 장사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50대 이상의 부녀자 계층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서는 이러한 시장행위 자체를 아예 금지하려는 노력까지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허용된 종합시장 제도를 철폐하고, 이를 다시 과거의 농민시장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른바 '150일 전투'와 같은 과거의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을 재도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시장참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당국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점이다. 물론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은 실패할 수도 또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북한의 경제시스템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

어진 진화과정이 모두 소멸하고, 과거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역진화의 과정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일 실패한다면, 북한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또 다른 진화의 과정에 돌입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복잡계적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성공과 실패는 당연히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시장화의 자기조직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과정이 2000년대 이후 들어선 현재의 북한경제 시스템의 거시적·미시적 정합성과 충돌한다면 이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경제시스템의 진화를 촉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당국이 원하는 현재 시스템의 안정 또는 과거 시스템으로의 복귀 역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 외부에서 진행되는 시장화의 자기조직화 현상이 현 시스템의 거시적·미시적 정합성을 붕괴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와 같이 이러한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자생적 규칙의 일부를 제도화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재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지금보다 더욱 시장경제에 접근하도록 진화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한경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이러한 자생적 규칙의 제도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복잡계적 시각에서 보면, 이 경우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시스템의 외부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규칙들과 충돌하고, 만일 이러한 충돌에서 현재의 시스템이 패배한다면, 북한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규칙들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이른바 돌발적 진화라고 불리는 북한경제의 이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 동유럽과 소비에트 등 舊사회주의 경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돌발적 진화의 형태로 시장경제로 진입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화의 현상이 어떤 형태로 경제시스템의 추가적 진화를 몰고 올지는 앞으로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高瀨淨. 『북한경제입문』. 이남현 譯, 대동: 청년사, 1988.
- 고승효. 『현대북한경제 입문』. 이태섭 譯, 대동: 청년사, 1993.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_____. 외. 『북한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김영운·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동향(통일정세분석 2005-02)』.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 북한경제 포럼. 『북한경제론』. 서울: 법문사, 1996.
- 신지호. 『북한의 개혁 개방-과거, 현황, 전망』. 서울: 한울, 2000.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 출판사, 2001.
- 오경찬.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서울: 대왕사, 1997.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태욱.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 문화사, 1990.
- 장명봉 편. 『김정일 체제하의 최근 북한 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 Chung, J-S. *The North Korea Economy*. CA: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Davies, R., Harrison M. and Wheatcroft S.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3~1945*.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Eberstadt, Nicholas and Banister Judith.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CA: Korea Research Book, 1992.
- Gregory, P. and Stuart R.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1980.
- Gregory, P. and Stuart R. *Russian and Soviet Economic Performance and*

Structure. UK: Addison-Wesley, 2001.

2. 논문

강일천.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

공선영·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

김석진. “북한 경제개혁의 초기조건.” 『현대북한연구』. 제5권 2호, 2002.

김성보.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7.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02.

_____.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김영운.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최근 경제관련 변화조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소 발표자료, 2003.9).

_____. “북한 암시장의 사회경제적 역할.” 『통일연구논총』. 제6집 1호, 1997.

김용술. “북한경제정책 설명.”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10호, 2002.

나탈리아 바자노바. 양준용 譯. “기रो에 선 북한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92.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6.26).

리민복. “북한주민들의 개인화와 체제 변화 가능성.” 『북한』. 통권 396호, 1996.

무루오카 데스오. “북한의 농산물 무역현황과 전망.” 『북한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박광작. “북한 신경제 관리체제의 평가와 전망.” 『비교경제연구』. Vol. 10. No. 1, 2003.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금융경제총서』. 제9호, 2004.

박순성.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현실.” 『동아연구』. 제35권, 1998.

- _____. “김정일 시대(1994~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Vol. 8. No. 1, 2004.
- _____.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 연구.” 『동아연구』 제34권, 1997.
- _____. “북한의 경제학 체계 개관.” 『동아연구』 제33권, 1997.
- _____. “국제비교와 관점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 “부분”개혁과 “시장도입형”개혁의 구분: 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Vol. 5. No. 2, 2002.
- 서동만. “50년대 북한의 곡물생산량 통계에 관한 연구.” 통일경제, 1996년 2월
-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제7권 2호, 2005.
- _____.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엘렌 브룬·자크 허시. 김해성 譯. “사회주의 북한.” 지평, 1988.
- 유영구. “주체의 정치경제학이론.” 『사회와 사상』. 1989.9.
- 이민복, “집단농장을 개인농화해야 북한 식량난 해결된다.” 『월간 조선』. 1995.7.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초과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
- _____. “198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
-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비교경제연구』. Vol. 11. No. 1, 2004.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척체제에 관한 연구(1956~1964)』.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우홍. “원산농업대학 강사가 본 가난의 공화국.” 『통일일보사』. 1990.
- 이채연. “맑스 정치경제학과 북한의 정치경제학.” 『사회경제평론』. 1993.12.
- 정일용. “북한의 경제학 방법론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이론.” 『국제정치논총』. 1990.8.
- 정형곤,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현대북한연구』. 5권 2호, 2002.

-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 2002.
- 조동호·장남수. “북한 식량난의 경제적 파급효과.” 『KDI 정책포럼』. 1999.9 통일부. “북한의 산업조직개편동향.” 『주간 북한동향』. 제474호. 2002.
- 황의각 外. 『북한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 히라타 류타로. “북한농업 실상과 농업통계의 제 문제.” (제4회 북한농업기반 국제세미나 보고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1998).
-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Thesis, Northern University USA, 1992.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1995.
-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24 June 2002.
- DPRK/ 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Geneva, UNDP, May 1998.
- Easterly, William and Fischer, Stanley. “The Soviet Economic Declin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9, No. 3 (September 1995).
- Eberstadt, Nicholas and Banister Judith. “Don’t Believe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sian Wall Street Journal*. (8 April 2004).
- _____. “North Korea’s Interlocked Economic Crisis.” *Asian Survey* (March 1998).
- _____. “North Korea’s an Economy Under Multiple Severe Stresses.” *Communist Economies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une 1997).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FAO/WFP 12* (November 1998).

- _____.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FAO/WFP 22* (December 1995).
- Harrison M. “Are Command Economies Unstable? Why did the Soviet Economy Collapse?” *University of Warwick Working Paper*. (November 1999).
- Kim, Lee and Sumner. “Assessing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6. No. 3, 1998
- Lee, Suk and Shim, Sun Young. “The DPRK Statistics on Population And Food, 1946~2000.” (No.1). *KINU Statistics Series 02/04* (unpublished internal pape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4.
-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Warwick, 2003.
- Nam, Sung Wook, “Prospects of gra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in North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1988.
- Noland, M. Robinson S. and Wang T. “Famine in Nort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1999
- _____. “Rigorous Speculation: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IE Working Paper* 99-1, 1999
- _____. “Famine in North Korea: Causes and C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9, No. 4, 2001
- Nove, A.. *The Soviet Economic System*. 1978.
- Ofer, Gur., “Soviet Economic Growth: 1928~1985.”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5. No.4, (December 1987).

3. 기타

-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 자료집. 1995.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제 5 장

북한 시장의 형성·
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양문수)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제5장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이 장은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발전과정을 시장 행위자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동 및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북한에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시장의 형성·발전의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북한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간단하게 미래상을 조망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까지 북한 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시장 행위자에 주목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물론 연구자의 자세 및 문제의식 탓도 있겠지만 자료·정보의 부족이라는 요인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이 장에서는 필자의 기존의 새터민 면담 결과 등을 활용하겠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북한의 시장, 나아가 북한의 경제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자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데 그 임무를 국한하기로 한다.

1. 전제적 논의: 시장화에 대한 일반론

가. 통상적인 경우

사회주의 경제개혁 및 체제이행에서 핵심적 요소는 시장화(marketisation)이다. 그런데 시장화란 다양한 차원의, 또한 여러 층위의 개념, 범주이다. 시장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⁵¹⁾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고 또 하나는 장소(공간)로서의 시장(marketplace)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일부 중복되면서 각각 상이한 영역을 포괄한다.

시장화는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51) 폴라니, 박현수 역, 『인간의 경제 I』 (서울: 풀빛, 1983), pp. 173~175; 山口重克編, 『市場經濟 歴史, 思想, 現在(增補版)』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7), pp. 21~26.

이 경우 시장화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장화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적 및 기능적으로는 지역 시장과 외부 시장, 전국적 시장, 세계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과 외부 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시장은 또한 거래대상에 따라 크게 보아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좀더 세분해서 보면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존재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원자재, 자금, 노동력 등과 같은 투입물을 국가계획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피공급, 할당)하고 생산물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상업기관에 인도(공급)한다.

따라서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지역 시장과 외부 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가지 시장이 발생, 확대되고 아울러 생산의 기본단위인 기업(또는 개인수공업자)이 원자재, 자금, 노동력의 조달과 생산물의 처리를 시장을 통해 수행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은 가격 기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우리가 시장요소라고 부르는 제도적 특징들의 연결체이다. 그 요소들이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재화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공급자, 수요자, 관습 또는 법 등이다. 그리고 근대사회에서는 상품과 화폐가 중요성을 가진다.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은 시장화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시장화를 촉진한다. 동시에 시장화도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⁵²⁾

52)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5), pp. 6~7.

나. 복잡계의 관점

복잡계의 관점과 분석틀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볼 때 시장화를 행위자의 행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공급자(판매자) 및 수요자(구매자)로 시장에 등장한다. 최초에는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은 단순 물물교환일 수 있으나 점차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으로 발전한다. 이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목적은 초기에는 과부족 물자의 교환 등 비화폐적 동기였으나 점차 이윤획득 등 화폐적 동기로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재 시장이 형성된다.

이 때 지리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공급자(판매자)와 수요자(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거래를 중개하는 상인이 등장한다. 이 상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상일 수도 있고, 고정된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는 점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으로서의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판매자)는 상품을 직접 생산했던 여타의 방법으로 취득했던 소생산자 등 상품의 원 소유자이거나, 원 소유자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은 상인이다.

상인은 지역 내 상업(근거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역 간 상업(원거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는 거래규모가 작고, 후자는 거래규모가 크다.

한편 시장의 발달은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즉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 나아가 판로의 확대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생산을 확대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상품 생산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분업이 발생하고 확대 현상도 나타난다. 즉 소상품 생산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전문적인 품목에 생산을 집중하게 된다. 아울러 생산자들 간의 연계도 이루어지면서 생산재 시장이 형성, 발전하게 된다. 시장의 발달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인층의 형성, 확대 및 분화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상과 소매상의 분화이다. 즉 초기에는 한 사람이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도매상과 소매상이 분리된다. 또한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전문상인과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인의 분화도 나타난다. 아울러 초기에는 상인이 창고 업무와 운수 업무를 겸하게 되나 점차 창고업과 운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이 나타나게 된다.

즉 상업에서 창고업과 운수업이 분리된다.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신용, 나아가 금융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신규로 시장에 판매자로 참여하는 사람이든, 기존에 상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든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초기에는 시장에서 판매자로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여기서 일부는 전문적인 금융업(사채 및 고리대금업)자로 전환한다. 이른바 금융시장의 출현이다.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등장하게 된다. 상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상인이 자본가로 전환하게 되고, 반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노동자도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출현인 것이다.

2.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 창발과 자기조직화

가. 시장 참여: 행위자의 행태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시장경제적 행태, 특히 불법적인 시장경제적 행태를 보이게 된 데는 몇 가지 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와해의 길로 들어섰다. 무엇보다도 식량을 비롯해 소비품에 대한 중앙공급체계(배급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식량배급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먼저 배급의 지연 현상이 나타났고 곧이어 배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1994~1995년부터는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를 북한 주민들은 ‘미공급기’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식량이 이 정도였으니 일반 소비품의 공급은 말할 것도 없다. 국영상점에 물품의 공급이 차질을 빚기 시작, 결국에는 상점들이 텅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식량문제 해결에 대해 지방,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식량문제만은 중앙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다. 1992~1993년경부터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미공급기인 1995~1996년경부터는

공장,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나 지방과 기업이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결국 식량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왔다. 즉 개인이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북한에는 합법적인 시장경제활동이 존재했었다. 북한당국은 이미 농민시장이라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합법적인 소비재 시장을 허용해 놓았다. 아울러 8·3 인민소비품운동과 같이,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이지만, 계획외 경제활동(계획외 생산, 유통)이라 해서 사실상의 시장경제활동을 제도화시킨 바 있다.

특히 농민시장의 존재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소규모 농민 시장이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대규모 암시장⁵³⁾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농민시장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1958년부터 농민들이 텃밭이라 불리는 소규모 사적 경작지 등지에서 개인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주민들 간에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에 농민시장이라 하여 10일에 한 번씩 장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농산물이라 해도 쌀·옥수수 등 식량은 제외된다. 따라서 농민시장에서는 쌀·옥수수 등의 식량과 공산품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민시장에서 거래품목에 대한 통제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생활용품, 고가의 내구소비재, 더욱이 일부 생산재까지 거래되게 되었다. 공간적으로도 국가가 허가한 농민시장 내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가나 주택가 부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장의 개설시기도 바뀌었는데 10일 단위로 열려야 할 시장이 매일 열리게 되었다. 또 이용객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도매상·거간꾼 등 전문적인 장사꾼까지 등장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반 주민들은 최초로 공급자(판매자)로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사(상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토대로 해서 수요자(구매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자신의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한 형태로 참여했다.

53) 북한 주민들은 이 암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행위자들은 초기에는 주부들이 다수를 점했다. 직장이 없고,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들이 장사(단순 상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초기에도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장경제활동에는 남성들의 참여도 있었다. 그리고 시장이 발달하고 전문화되면, 아울러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 남성들의 참여도 늘어난다. 물론 대부분의 남성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위기로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장경제활동을 위한 직장 이탈이 눈에 뜨게 늘어났다.

<표 V-1>은 시장참여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불법과 합법을 기준으로 행위자들의 시장적 행태를 살펴보자. 이 경우 편의상 상인의 존재는 무시한다. 개인이 시장에 물자를 직접 공급(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불법과 합법의 구분에 있어서 개인이 시장에 공급(판매)하는 물자를 취득하는 과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와, 그 물자를 농민시장(암시장)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이 텃밭 등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민시장(암시장)에 공급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그 외의 농축산물, 특히 식량과 공산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모두 다 불법이다. 그리고 농민시장에 물자를 공급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협동농장 생산 식량 등과 같이 그 물자를 취득하는 과정이 합법적인 경우도 있고, 공장 및 농장에서의 절취, 유용한 식량, 공산품, 그리고 기관, 개인에 의한 밀수품 등과 같이 그 물자를 취득하는 과정조차 불법인 경우도 있다(<표 V-1> 참조).

이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자. 가장 초보적인 시장 참여활동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류, 식기, 가구 등을 시장에 공급(판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은 합법이고 시장공급은 불법이다.

다음에는 개인 차원에서 생산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텃밭에서나 개인 부업으로 농축산물 등을 생산해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합법이다. 또한 개인이 폐기밭(소토지) 등과 같은 무허가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개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해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불법이다. 다음에는 공장, 농장 등 기업 차원에서

생산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공장, 농장에서 생산한 공산품(생필품)이나 식량을 기업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은 합법이고 시장공급은 불법이다. 또한 공장, 농장에 있는 공산품(생필품), 원자재, 식량 등을 개인 차원에서 절취, 유용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취, 유용은 생산과정, 즉 공장이나 농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유통과정, 즉 상업기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불법이다.

다음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유입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무역회사 등에 의한 공식 수입품을 기업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은 합법이고 시장공급은 불법이다. 또한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에 의한 밀수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불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물자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기관 차원에서 해당 물자를 절취, 유출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물자취득과정 및 시장공급은 모두 불법이다.

<표 V-1> 농민시장(암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판매) 행위의 제유형

구 분	공급 물품의 취득 과정	물품취득 과정의 합법 여부	농민시장 유통의 합법 여부
개인 보유 자산	개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의류, 식기, 가구 등 자산	합법	불법
개인 차원의 생산물	텃밭 생산 농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농축산물	합법	합법
	협동농장 부업생산 농축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식료품·생필품	합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경작지 생산 농산물	불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가축사육	불법	불법
기업 (농장 포함) 차원의 생산물	공식부문 생산 식량, 공산품	합법(기업 입장)	불법
	공식부문 절취·유출 식량, 생필품, 원자재	불법(개인 입장)	불법
중국 등 제3국 유입품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합법(기업 입장)	불법
	개인·기관에 의한 밀수품	불법	불법
국제사회의 지원물자	개인·기관에 의한 절취·유출 물자	불법	불법

자료: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5), p. 10의 <표 2>를 약간 수정.

나. 강화 피드백

<표 V-2> 1990년대 북한주민들의 공식임금과 비공식수입: 탈북자들의 경험

탈북자	직업	거주지역	가족수	한 달 공식임금	한 달 가족실질생계비(그중 공식임금의 비중)	부족생계비의 충당방법
A씨	정무원산하 무역회사과장	평양시	4	147원(본인) + 132원(부인)	1,000원(27.9%)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B씨	군(郡)자재공급소 지도원	평안남도	4	90원	2,000원(4.5%)	부모로부터의 유산, 장사
C씨(여)	신발공장 노동자	함경남도	3	60원(본인) + 100원(어머니)	6,000원(2.3%)	식품제조 및 판매, 일본의 친척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
D씨	벽돌공장 자재인수원	개성시	5	70원(본인) + 60원(동생)	5,000원(2.6%)	가족사육, 장사
E씨	군(軍)의 외화벌이사업소 지도원	평안북도	6	120원	10,000원(1.2%)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장사, 미국의 친척으로부터의 원조

자료: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표 V-2>는 시장의 형성 초기 단계에 공급자 및 수요자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의 여건 및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우선 식량, 생필품이 국가로부터 정상 공급될 때의 국정가격과 주민들이 암시장에서 이를 구입할 때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일정 수준의 현금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 수요자로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탈북자 B씨, C씨, E씨처럼 부모로부터의 유산, 외국의 친척으로부터의 원조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 세 사람은 장사 또는 식품 제조·판매 등 상행위를 통해 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해 획득한 수입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탈북자 B씨, C씨, E씨는, 그리고 D씨까지 포함해 이들은 시장에 대해 공급자

로 참여하는 한편 수요자로도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이 일단 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해 공식임금 이외의 비공식적인 현금수입을 획득하게 되면 그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시장에 수요자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식량을 비롯해 생필품을 시장에서 구입,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사의 위기도 모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에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뇌물증여 등의 방법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종의 학습효과이다. 동시에 처음에는 시장참여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주변에 장사(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들도 신규로 시장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의 참여자 확대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양적 확대를 초래한다. 또한 앞의 <표 V-1>에서 보았듯이 시장에 유입되는 물자도 다양해질 수 있다. 이는 여타의 조건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질적 발전 과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하게 개인의 차원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도 기업 차원 혹은 소속 구성원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유한 차량, 창고 등을 활용해 직접 상행위를 하거나 상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장 참여자도 시장참여 폭을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화 및 분화가 이루어진다.

한편 북한당국이 암시장에 대해 취한 태도는 단속과 묵인의 반복이었다. 사실 시장경제활동은 대부분 불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가가 아무리 묵인을 한다고 해도 시장경제활동이 거의 다 불법으로 묶여 있는 한 이는 시장화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의 시장경제활동은 기업과 가게 등 말단 경제주체들의 자력갱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업과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경제적 활동을 용인하되, 국가는 기업과 개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 자본, 원자재 등 일체의 자원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다. 전력난, 원자재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개별경제주체들의 시

장경제활동의 물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시장화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생산보다는 유통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북한에서 시장의 발달은 뚜렷한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에서의 시장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뒤진다.⁵⁴⁾ 이 또한 시장화의 진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새로운 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

시장의 형성, 발전은 기존의 신념 체계(belief system)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신념 체계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순종을 요구한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가 내리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국가를 위해 애국심을 발휘해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국가가 주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조차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신념 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이 수령,’ ‘어머니 당’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주민들은 기존의 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직장에서의 일보다는 부업이나 개인장사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었다. 공공물자의 횡령은 빈번히 발생했으며,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북한의 암시장은 공식 사회의 부패구조와 상호 연계되어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평등주의 사상이 사실상 무너졌다. 주민들은 자본주의적 생계방식을 터득하고 되었고, 주민들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했다.

한편 시장의 형성은 한편으로는 시스템 보완적이다. 즉 물자 부족을 완화할 수 있고,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 파괴적이다. 가장 큰 것은 계획경제의 침식이다. 특히 생산요소, 생산물, 생산설비 등에 대한 절취, 유용으로 계획경제의 물적 기반이 침식당하고 있다.

54)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의 (소비재) 시장 발달은 중국의 경험과 뚜렷이 구별된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조업의 물적 토대 붕괴이다. 물론 제조업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공급 격감 및 이로 인한 산업연관의 파괴(부족의 확대재생산)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등으로 인한 제조업의 물적 토대의 붕괴도 중요한 요인이다. 제조업의 물적 토대 붕괴는 공장설비의 절취·유용 및 노후화로 압축된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개인 및 공장의 차원에서 각종 기계 설비를 절취, 유용해 중국에 판매하고 식량을 수입한 것이다. 동시에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인력들이 대거 직장을 이탈, 기계설비를 유지·보수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계설비들이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한 기술인력들이 대거 공장을 이탈, 시장경제활동에 종사함에 따라 공장은 기술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도 무시 못 할 요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산업구조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차 산업이 일정 수준 발달되어 있는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전형적인 개도국형 산업구조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이는 제조업 기반 붕괴에 따라 공업(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동력 문제와 직결된다. 플러스 성장 기조는 유지될 수 있어도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요컨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곤의 늪,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더 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시장의 제도화 미진전과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불능

암시장의 창궐에 대해 북한당국이 취한 태도는 크게 보아 통제와 묵인의 반복이었다. 시장의 형성, 발달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시장에 대한 단속과 묵인을 반복할 따름이었다.

한편으로는 중국상인의 북한 내 출입 통제, 외화상점에 대한 축소·폐지 조치, 불법적인 사적 경작지에 대한 금지, 비사회주의(타파) 그룹싸 조직·운영 등 각종 통제 조치를 실시하곤 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묵인에

가까웠다. 북한당국은 암시장을, 국영상점을 통한 생필품 배급 기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따라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 암시장의 확산을 대체로 묵인해 왔던 것이다.

적어도 고난의 행군 종료까지 국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1998년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과 함께 북한은 흐트러진 체제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는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구조화가 뚜렷하게 진전되지 않았다. 선별 메커니즘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작동되지도 않았다.

3. 북한에서의 시장의 발전: 진화와 적응

가. 새로운 제도적 환경: 7·1 조치

1998년 김정일 시대의 공식 출범 이후 북한당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적 혼란, 특히 암시장의 창궐에 따른 경제 사회적 질서의 동요를 수습하고 체제 및 제도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는 1998년부터 커다란 정책적 기조로서 이른바 실리주의,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웠고, 2001년부터는 이른바 ‘신사고’를 내세웠다. 대외적으로는 1999년부터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고, 2000년에는 남북정상 회담을 개최했다.⁵⁵⁾

이러한 흐름 속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등장했다. 사실 7·1 조치는 제도적 정비의 집대성,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7·1 조치는 여러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공식 제도 내에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우선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먼저 상품화폐관계의 진전인데 조선신보(2002.11.22)가 표현했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체계의 확립”이다. 아울러 ‘번 수입 지표’의 도입을 통해 기업에게 계획외 생산과 계획외 유통을 허용했다. 사실상의 시장경제활동을 용인한 것이다. 동시

55) 그리고 7·1 조치 실시 후 2개월 만인 동년 9월에 고이즈미 김정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같은 시기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가 발표되었다. 아울러 7·1 조치 실시 후 4개월 만인 동년 11월에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 이들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에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도 허용한데 이어 국영상점의 수매상점으로의 전환을 허용, 국가상업망을 사실상의 시장으로 재편했다. 아울러 사실상의 개인서비스업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나아가 2003년에는 종합시장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업제품으로 확대했다.

7·1 조치, 종합시장 허용은 기존의 암시장의 합법화 이상의 의도, 의미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시장경제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및 계획경제 부문이 수취해 가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예산으로 흡수해 국가가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시장(민간부문)에서 거두어들인 돈을 공공부문의 유지, 국영기업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가 시장에 기생해 살아가는 형국”이다. 여기서는 7·1 조치 이후, 나아가 종합시장 허용 이후 개편 및 신설된 각종 국가납부금 및 사용료 제도, 즉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통한 재정 수입의 확대 노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새로운 제도적 환경으로서 추가해야 할 것이 상품화·화폐화의 진전, 시장경제활동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이다.

나. 시장 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 행위자의 행태

시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종합시장⁵⁶⁾이라는 소비재 시장에 상품공급자와 상품공급량이 증가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소들의 시장 참여가 크게 늘었다. 종래 농민 시장에는 개인만이 참여했으나 종합시장에서는 농민이나 일반 주민뿐 아니라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시장 활동에 참여,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⁵⁷⁾

56) 한국에서는 종합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지역시장이라 칭하고 있다.

57) 통일거리시장의 경우, 판매 매대의 약 5%는 공장, 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기관, 기업소는 아울러 국영상점의 시장화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사실 종합시장의 도입 이후 변화가 불가피한 부문이 국영상점일 것이다. 종전에도 상품 고갈로 국영상점은 매우 고전했는데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국영상점은 고사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방식은 의외의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국영상점들을 사실상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길이었다. 즉 국영상점의 (위탁)수매상점화이다. 이는 국가가 일부 국영상점들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분양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위탁)수매상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⁵⁸⁾

여기서 국영상점을 임대 형식으로 인수, 운영하는 주체는 무역회사를 비롯한 각종 기관, 기업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⁵⁹⁾

이에 따라 무역회사가 시장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무역회사는 과거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관련 기관·기업소, 주민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수입, 즉 일종의 자가소비를 위한 수입을 수행했고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은 음성적(불법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이제 무역회사들은 공식적으로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輸入),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직접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은 두 가지 경로로 국내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하나는 도매시장을 거쳐 종합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영상점에 직접 혹은 중간상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국영상점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중국이나 북한 국내에서 상품을 들여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고 종업원 등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윤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상점을

58) 북한의 내각결정 24호는 “무역성,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임시로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들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양 제1백화점과 같은 무역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업망들에 대해서는 무역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상점의 매대 또한 증설로 임대해 주어 수입상품을 팔게도 하고 위탁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도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수매상점 설치는 위에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 구역당, 구역 인민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 2002년 말 정도인가,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나오고 나서 몇 달 후 구역당에 지시문이 내려왔다. 국가에서 운영하던 식당들, 상점들이 지금 상품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 문 닫는 건물들을 개인들에게 임대해 줘서, 건물 값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구역당 간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 때부터 수매상점 같은 것이 많이 늘었다. 경제개혁조치 나오기 전에는 작게 운영되었는데 경제개혁하면서 크게 확장을 시켰다”(평양 출신 탈북자 F씨).

임대받지 못한다. 기관, 기업소만 임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은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상점을 임대받아 운영한다.⁶⁰⁾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상점뿐 아니라 당구장, 가라오케, 식당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자주 빚어졌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의 공간이 확대되었다. 합법적인 소비품 시장인 종합시장의 등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서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시장판매 생산을 더욱 자극하는 유인으로 작용했다.⁶¹⁾ 다만 초기 단계에 자금이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개인자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들도 부업생산(개인수공업)에 확대에 적극 나섰다. 개인수공업자 입장에서 종합시장의 등장은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를 의미한다. 조선신보(2003.9.27)도 개인수공업 생산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높여서 사회활동의 일선에서 물러선 사람 등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내수공업으로 빵, 당과류 등 식료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농민)시장에 판매하곤 했다. 그런데 7·1 조치 이후 평양시의 각 구역에 이들이 일하는 생산기지를 꾸리고 각 상점들에 생산물을 도매로 넘기게 했다. 상점에 진열된 이것들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그것보다 10원 정도 싸다”는 것이다.⁶²⁾

다. 시장 발전에 대한 강화조절 피드백

과거에는 본격적인 상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상인계층의 형성이

60) 일부 국영상점들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분양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위탁수매상점으로 전환한 사실, 그리고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통일부·통일연구원, 『북한경제 개혁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5)도 확인하고 있다. pp. 31~33 참조.

61) 함북 무산 출신 탈북자 G씨는 기업들이 콩을 통해 인조고기를 만들어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게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콩을 가지고 기름을 짜서 남는 것이 있다. 두박이라고 한다. 그걸 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고기를 만든다. 이걸 인조고기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것이 매우 인기다. 원래 이것은 편의봉사업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일반 공장, 기업소에서도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제품을 가지러 온다. 이제는 장마당에서 물건 파는데 제약이 없으니까 공장, 기업소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지만 하면 된다.”

62) “2003년 여름부터인가. 옷 공장에 다니던 기능공들이 대거 공장을 빠져나갔다. 임금도 제대로 안 주지, 물가는 오르지 하니가 공장에 붙어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이들은 집에서 놀면서 옷을 입가공하거나 나처럼 직접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아 그 돈으로 생활을 꾸렸다”(탈북자 H씨). 그리고 H씨의 경우, 공장에서 일했다면 월 1,500~2,000원 정도를 벌었지만 집에서 나와 개인수공업으로 옷을 직접 만들으로써 월 20,000~50,000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번 뒤, 즉 자본을 축적해 이른바 돈주(錢主)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돈주들은 대부분 개인상업이나 외화벌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안남도 평성시는 전국적으로 돈주들이 제일 많은 곳에 속한다.⁶³⁾ 평균 10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돈주가 약 20~30명가량 된다. 달러가 안전하기 때문에 달러를 선호한다. 외화벌이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이런 개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한다. 액수가 큰 경우 약 3~5% 정도의 이자를 준다. 황해도의 주요 도시에서는 약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를 소유하면 돈주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돈주들 중에는 국가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막대한 양의 공채를 사거나 현금을 하기도 한다. 공채를 800만원~900만원 어치 산 돈주도 있고 아무런 대가없이 많은 돈을 국가에 헌납하는 돈주도 있다. 국가로부터 감사장이나 표창을 받으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주들 사이에 기부금 경쟁이 불기도 한다.

큰 돈주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약 5~6명가량의 대리인(중간 상인)을 둔다. 이 때문에 돈주가 누구인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북한 당국에서는 돈주들과 상인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관망하다가 통제가 필요할 때 단속을 한다.

큰 돈주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중간 상인들은 시장 시세를 매일 알아보고 중국 상품 가격과 동향을 점검한다. 북한 시장에 없는 물건인데 팔릴 것 같은 물건을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가급적 더 싼값에 사온다. 이들은 또 각자 5~10명가량의 소매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어 물건을 소매상인들에게 넘겨주는 역할도 한다.

중간 상인들은 각각 무리를 지어 서비차를 빌려 평양, 평성, 원산, 남포, 청진, 나진선봉, 신의주 등 물류지역을 왕래한다. 이들은 소매상인에게 이윤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 물건을 팔고, 소매상인들은 여기에 다시 가격을

63) 이하 돈주와 중간상인에 대한 서술은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청간준비 3호(2004.11)에서의 탈북자 면담 결과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붙여 시장에 내다 판다.

강화피드백으로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이른바 4대 시장이 형성되고 이들 시장이 서로 연계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서로를 확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2001년 말 경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등장하여 공장, 기업소간 과부족되는 일부 원자재, 부속품들을 유무상통하도록 하며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대표적인 생산재 시장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업들이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시장에서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의 연계성이 확보되면서 각 시장의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북한에서 자본·금융 시장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이며 동시에 사적 금융, 사채(私債)이다. 여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시장이 있다. 하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융관계이고 또 하나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금융관계이다.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장사’로 불리는 상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주(錢主)’로 불리는 부자들이거나 전문사채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장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밑천이 필요하다. 일종의 자본금이다. 지역에 따라, 상행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수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다. 눈길을 끄는 사실은 상인들 사이에 신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은 상거래에 있어서 이른바 외상거래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금융관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그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에, 은행에 돈이 없고 개인에게 돈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 간의 금융거래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출이고 또 하나는

투자이다. 또한 돈을 빌리는 기업은 공장일 수도 있고, 상점일 수도 있고, 무역회사일 수도 있다. 자금은 투자자금도 있고 운영자금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자본·금융 시장은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면서 각 시장의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자본 금융 시장 참여 확대가 개인, 기업들의 소비재 및 생산재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소비재 및 생산재 시장 참여의 확대는 당연하다.

임노동관계도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노동자의 대책점에는 이른바 돈주가 존재한다. 상업부문에서 상점 주인과 상점 노동자, 수산업에서 선박 소유주와 노동자, 농업 부문에서는 불법적인 토지 소유자와 소작인 사이에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수공업에서도 이른바 가공주와 노동자 사이에 임노동관계가 등장했다. 이러한 임노동관계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가 발생하게 되면 돈주들의 시장 참여 확대, 이에 따라 소비재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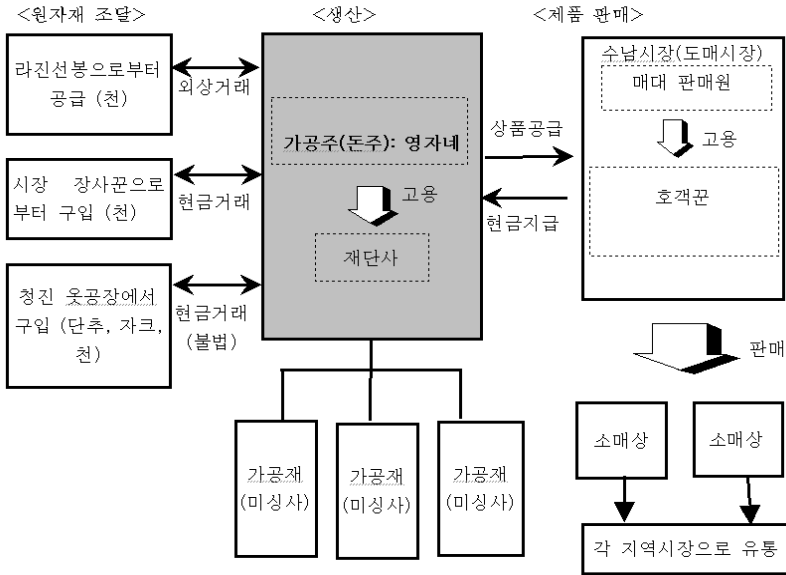
<그림 V-1>은 탈북자 H씨의 사례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임가공을 해서 옷을 만들고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버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직접 원재료(천)를 구입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이 혼자 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에 본인은 재료 구입 및 견본 생산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르는 사람(재단사) 1명과 가공하는 사람(미싱사) 3명을 ‘고용’했다는 사실이다. H씨와 재단사는 H씨의 집에서 일을 했고 미싱사들은 각자의 집에서 일을 했다. 최종 제품은 H씨의 집으로 다시 넘어왔고 이를 판매원이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았다. 그러한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졌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H씨이든 H씨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든 모두 공식적인 신분은 기관, 기업소 직원 혹은 노동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의류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에는 적만 걸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H씨가 일했던 함북 청진 수남시장의 경우, H씨처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했던 사람(이른바 가공주) 가운데 의류분야의 사람은 대략 20명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림 V-1> 영자네 옷가게 생산 및 유통과정



자료: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5).

한편 북한에서 시장에 대한 단속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암시장이 창궐하는 속에서 북한당국은 종종 시장에 대한 단속을 폈었다. 물론 시장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과 묵인의 반복이었다.

2003년 종합시장이 등장한 이후 단속이 다소 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대략 2007년경부터 단속이 본격화되었다. 물론 2005년 가을부터의 배급제 정상화 시도와 함께 단속이 재개되었지만 새터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단속의 범위, 규모, 기간 등의 면에서 종전과는 차원이 상이한 단속이 본격화된 것은 2007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단속⁶⁴은 다방면에 걸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선 장사(상행위) 연령에

64) 시장단속에 대한 정보는 주로 좋은 벚들, “오늘의 북한 소식,” 각호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정보가 충분하지

대한 제한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상행위 품목 및 판매액에 대한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상행위 장소에 대한 제한조치도 취해졌다. 상행위 자체에 대한 제한 뿐 아니라 상행위 관련 활동에 대한 제한도 가해졌다. 개인 투자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도 취해졌다. 각 기관이나 기업소 명의로 개인들이 식당, 목욕탕 등 서비스업, 버스, 어선 등에 대해 투자, 운영하던 사실상의 개인 기업 및 개인 투자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의 배경에는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07년부터의 시장 단속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시장이 비사회주의 서식 장으로 되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장사에 대한 8·26 방침이 나왔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단속의 배경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속·검열 주체들의 이해관계이다. 즉 단속과 검열을 하는 이른바 법 기관 사람들은 국가의 단속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단속·검열 주체들은 단속이 지속되면 뭘수록 이득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 기관 사람들만 좋은 일 났다”는 비아냥거림 조차 나오고 있다. 그만큼 단속 일선에 나서는 법 일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로부터 뇌물 받을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비사회주의적 요소 척결’ 등을 내세우며 북한 지도부에 대해 단속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속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돈주들에 대한 처벌, 불법행위를 빌미로 한 처벌은 주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이른바 생계형 시장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으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른바 부의 축적형 시장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언제든지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일반 주민들에게도 시장경제활동의 일시성, 잠재성, 과도기성을 각인시켜 준다. 시장경제활동이 당연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속 자체의 한계이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않기 때문에 시장단속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상행위는 근절되기 어렵다. ‘뒷 구석’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폐뚜기 장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단속원들에게 돈이나 담배, 술 등을 주고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 상인들 중에는 당국의 시장 판매 금지에 불만이 많지만 이런 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며 아무리 판매를 금지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 해에 한 두 번 하는 단속도 아니라며, 이젠 습관이 되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이다.

단속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반발에 부딪치기도 한다. 주민들은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백성들을 말려 죽이자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주는 배급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이것이 어디 우리를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쁜 놈들만 살판 치는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등의 불만을 털어놓는다.

아울러 작년 봄, 여름에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단속이 다소 주춤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수입이 시장 및 시장경제 활동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

한편 시장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올 초로 예정되었던 농민시장 환원조치의 연기이다. 지난해 11월 북한당국은 내각 상업성 지시문과 도 지시문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전국의 시장을 농민시장으로 개편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현재의 종합시장을 없애고 농민시장으로 환원시켜 앞으로 식량을 제외한 농산물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식량은 양정사업소에서, 공산품은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시행 시기가 6개월 연기되었다. 배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시장을 없애면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⁶⁵⁾

65) 평양의 한 간부는 “시장을 없애면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지방 관리들의 의견이 빚발쳤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현 시점에서 종합시장을 폐지하면 내란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간부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261호, 2009.1.13.

라. 새로운 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

시장의 발전에 따라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신념 체계(belief system)의 변화가 발생했다. 북한당국은 우선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활동을 일부 공식제도에 편입시켰다. 예컨대 상속법 제정(2002.3)을 통해 “국가가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해 준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동시에 상속재산 범위에 주택, 승용차, 가정용품, 화폐 등을 포함시키고 더욱이 개인부업경리에 의한 재산도 포함시킨 것은 특기할 만하다. 즉 직장뿐만 아니라 개인수공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시장 관련 상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어들여 재산을 불릴 수 있고 이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시장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형법 개정(2004.4)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개인재산을 강제로 뺏을 경우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던 것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절도, 공갈, 사기, 횡령, 파손 등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즉 국가 시장에서의 각종 거래에 관한 질서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즉 국가가 시장거래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일부 수행키로 했다.

다만 시장화에 대한 북한당국의 입장은 애매모호하다. 북한 지도부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몇몇 공식문헌을 통해 의견을 피력한 수준이다. 그런데 공식문헌에서도 북한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제한적, 유보적이다.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장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과 판매를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경제이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자유판매를 실현하는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

된 일부 생산물이 교류되는 물자교류시장과 개인소비품의 일부만이 판매되는 지역시장만이 있을 뿐이다 … 시장을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을 결합시키는 데서는 어니까지나 계획가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가격을 결합시켜나가야 한다.⁶⁶⁾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계획경제와 시장의 올바른 결합이다. 이 경우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인정, 활용한다는 입장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생산재 시장(물자교류시장)과 일부 소비재 시장(지역시장)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계획경제가 기본이고 시장은 보조적 수단이며,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 입장은 현실 세계의 모습과 큰 괴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⁶⁷⁾ 시장을 공식 제도의 영역에 편입시키기는 했으나 이는 부분적 편입에 불과하다. 게다가 2007년부터는 시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펴고 있다. 종전의, 시장의 부분적 제도화 방침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식 정책 및 이념과 사회 현실, 주민의식 사이의 괴리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결국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의 이행에는 불철저하게 되고, 이른바 형식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주민들은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반항하는 ‘일상생활형의 반항’, ‘민생형 일탈’이 증대하게 된다. 집단주의 원칙보다 개인주의적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 공식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구속력이 약화되고 기존 질서가 동요하면서 화폐물신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결국 신념체계의 대혼란은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시장의 발전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순기능을 살펴보자. 재정난의 완화 측면에서는 제한적 성과가 가능하다. 7·1조치 이후 등장한 각종 납부금, 사용료는 사실상의 세금이고 이것이 국가재정에 일정 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재정수입의

66) 정명남, “집단주의 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6년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06), p. 14.

67) 예를 들면 “지역시장 관리의 현 실태는 행정적성격의 한도가격설정이나 단순한 가격공시방법으로는 시장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006년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06), p. 37 참조.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화로 표시한 결산기준 재정수입은 2005년에 전년대비 16%, 2006년에 3.4%, 2007년에 7.3%, 2008년에 7.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⁸⁾ 다만 이는 명목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폭은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실질 경제성장률과도 비교하기가 어렵다. 즉 재정수입이 경제성장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는지 더 작은 폭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 면에서의 성과도 양면성을 갖는다. 2002년 7·1 조치 이후 큰 흐름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근절되고 있지 않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7·1 조치를 통해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를 없애주었으나 7·1 조치 이후에 시장에서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여름 현재 쌀값은 국정가격의 50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미달러 환율은 국정환율의 20배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다만 2005~2006년과 같이 물가와 환율이 다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증대 측면에서도 일정정도 성과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의 근로의욕이 향상되었다. 경제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도 제고되었다. 또한 암시장 행위의 합법화 및 유통망 확대로 상행위 중사자들이 증가하고, 중국 등지로부터의 상품 수입도 증가했다. 다만 경제 내부 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제도적 개혁만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에 한계가 있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역기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계획경제의 침식 가속화이다. 7·1 조치 이후 계획경제의 침식이 줄어들기는커녕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공장, 기업소의 최종 생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원자재의 유출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개인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장, 기업소 내에서 전력의 개인적 유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빈부격차의 확대,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 기존 사회질서의 동요 등 북한당국 입장에서 본, 특히 정치사회적 관점에

68) 북한 원화 표시 결산기준 재정수입은 2005년에 전년대비 16.1%, 2006년에 0.4%, 2007년에 6.1%, 2008년에 5.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수영·정영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2~13 참조.

서 본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 시장이 발달할수록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본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마. 시장 제도화의 후퇴와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혼란

시장화에 대해 북한당국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결국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치적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의 확대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묶어 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 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점, 따라서 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시장상인들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 또한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관리의 수준, 정도 문제로 귀착된다.

현재는 소비재 시장, 일부 생산재 시장 정도가 합법화되어 있다. 자본금융 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소비재 시장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단속과 묵인을 반복하고 있다. 단속의 대상도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단속 자체도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속은 기존에 시장을 합법화한 제도와 충돌의 여지가 있으나, 북한에서 명령이 제도를 뛰어넘은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상부로부터의 명령은 초법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 메커니즘이 구조화되기 어렵다.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렵다. 1998년 김정일 시대 공식 개막 이후, 그리고 7·1 조치 전후로는 선별 메커니즘이 부분적이거나 작동했으나 2007년부터는 혼란이 발생했다.

4. 평가와 전망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로 규정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합법적인 농민시장이 거대한 암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계획경제의 와해와 배급제의 붕괴 등을 배경으로 주민 개개인에게 생존의 책임이 부여된 현실에서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시장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보적인 ‘소비재 시장’이라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났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창발(emergence)인 것이다. 아울러 이 초보적인 소비재 시장은 비록 국가로부터 때때로 단속과 억압을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확장을 하면서 또 생산재 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을 잉태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었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인 것이다.

물론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장이 만들어내는 개인주의적 사고, 경제합리적 사고는 기존의 전체주의적 신념체계와 양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대해 기능적으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를 대신해 소비재 부족 현상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계획경제의 침식이다.

암시장의 창궐에 대해 북한당국이 취한 태도는 크게 보아 통제와 묵인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묵인에 가까웠다. 적어도 고난의 행군 종료까지 국가는 사실상의 속수무책이었다. 선별 메커니즘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작동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1998년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과 함께 북한은 흐트러진 체제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부분적이거나 시장을 공식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상당 정도 제대로 적응(adaptation)했다. 시장 참여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소생산자, 돈주, 중간상인, 소매상인 등 다양한 기능

적 분화, 전문화 과정을 통해 시장을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켰다. 소비재시장은 생산재 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을 탄생시켰고 각각의 시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화를 더욱 진전시켰다. 아울러 개별 주민뿐 아니라 기관, 공장, 기업소들도 개별 행위자로서 시장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내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산되어 새로운 상태로 이전해갔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진화(evolution)인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여전히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신념 체계(belief system)의 변화가 발생했으나 여전히 현실과의 거리감은 존재한다. 기능적으로는 재정수입 증대, 상품 공급 확대 등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계획경제의 침식, 인플레이션 등 역기능도 결코 만만치 않다. 1998년 김정일 시대 공식 개막 이후, 그리고 7·1조치 전후해서는 선별 메커니즘이 부분적이거나 작동했으나 시장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는 혼란이 발생했다. 공식적인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국가가 서슴지 않으니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의미가 퇴색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의 새로운 행태, 즉 각종 시장경제활동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각종 단속을 통해 억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부분적, 일시적일 뿐이다. 시장경제활동이 제도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것도 제한적이다.

시장화에 대해 북한당국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되기 일쑤다. 시장화를 제도하는 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들, 나아가 기관, 공장, 기업소의 행태와 제도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통일부·통일연구원. 『북한경제 개혁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폴라니, 박현수 역. 『인간의 경제 I』. 서울: 풀빛, 1983.
- 山口重克編, 『市場經濟: 歷史, 思想, 現在(增補版)』.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7.

2. 논문

- 리원경. “현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006년 제2호.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5.
- 정명남. “집단주의 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6년 제2호.
- 최수영·정영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통일연구원, 2009.

3. 기타

- 『조선신보』.
- 『오늘의 북한소식』. 좋은 벗들.

제 6 장

북한 기업의 변화와 행위자 분석

(이석기)



제6장

북한 기업의 변화와 행위자 분석

중앙집중적 계획화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대략 1980년대까지는 기업 및 기업내부자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힘을 가졌었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본격적으로 해체되어 가는 1990년대 이후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가 기업의 행위를 규정하는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기업 및 기업 내부자들은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가격에 의해 매개되는 거래’ 즉, 일종의 시장 거래가 이러한 행동 변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자원 조달 능력이 약화된 중앙 당국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강화·확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기업 부문의 변화를 기업과 계획기구, 기업과 기업 등 기업과 기업외부와의 관계 및 기업 내부자들 간의 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기업 부문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들을 공식적인 제도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상당기간 동안 국가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기보다는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과 기업 내부자가 변화를 선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들은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의 붕괴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새로운 행위들에 의해서 창출되고, 확산되었으며, 먼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이어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는 과정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로부터 시스템의 진화과정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복잡계 관점이 1990년대 이후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분석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개별 행위자 특히, 기업 및 기업 내부자가 변화된 환경에서 생산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과 기업관리제도라는 시스템의 진화

과정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1.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원형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

북한의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으로 계획화하며(세부화),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일원화) 계획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계획화 체계의 목적은 특정 소수의 중요한 품목에 대한 강조가 사소한 품목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중요한 품목의 안정된 생산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극복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사전적 조정 양식⁶⁹⁾인 계획화 시스템의 문제를 사전적 조정을 극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화 시스템에 의해 북한의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사전에 규정이 되며, 기업 내부자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사전에 규정된 생산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북한 경제의 조정양식이라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는 다시 두 측면 즉, 당 조직에 의한 지배인 등 경영자에 의한 감독과 균중노선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조직에 의한 통제는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의 도입이 지배인 유일지도체제의 관료주의, 독단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 감독기관만으로는 대리인으로서의 기업 경영자의 행위를

69) 조정 양식(mode of coordination)이란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조화를 이루어 바람직한 자원배분에 도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조정양식은 사후적 조정양식과 사전적 조정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개별적 행위들이 가격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시장 조정양식이 사후적 조정양식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기업 내 조정이나, 계획에 의한 조정이 사전적인 조정양식의 예들이다.

충분히 감독할 수 없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조직은 주인으로서의 중앙계획자가 기업 내부에 설치한 감독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집체적 관리’의 또 다른 측면, 즉 군중노선 역시 기업의 전 구성원을 하나의 감독기구처럼 활용한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군중노선이라는 것이 이러한 감독기능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동원체제의 의미를 더 가지지만, 분명 자발적 감시기구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군중노선은 지배인에 대한 통제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축에 의해 대리인으로서의 지배인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계획당국, 중앙당국의 위임을 받아 기업을 감독하는 중간관리기관, 그리고 기업내부의 감독기구인 당 조직과 집단으로서의 노동자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감독되는 기업지배구조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 조직에 모니터링 기능만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공장·기업소 당 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당비서는 정치사업을, 지배인은 행정경제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위원회’를 통하여 당비서는 사실상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배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인 당 조직이 형식적으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배인은 기업의 행정경제 활동의 책임자로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소유권 이론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결국 의사결정권한을 둘러싸고 지배인과 당비서는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적 모순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는 계획화 시스템과 관련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성, 관리국이 공장·기업소에 자재를 책임지고 공급하며, 공장·기업소는 직장들에, 직장은 생산현장에 자재를 현물로 책임지고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와

‘위로부터 아래로 자재를 공급해 주는 물자공급체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0년대 이후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원형이 되었다. 이후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계획경제의 모순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대응하여 경제 및 기업관리체계의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기 기업관리체계의 수정은 부분적인 분권화를 그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즉, 도인민위원회의 도입을 통한 지역별 분권화, 연합기업소 체계의 전면적 도입을 통한 부문별 관리의 분권화, 독립채산제의 강화를 통한 경리측면에서의 분권화, 그리고 8·3 인민소비품의 도입 등에 의한 소비재 생산의 분권화 등이 이 시기 기업관리체계의 부분적 수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1980년대 기업관리체계의 부분적인 변화는 전체적으로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⁷⁰⁾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가 급속하게 약화됨에 따라 이들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더 이상 북한기업의 재생산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와 물적 토대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증폭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에서 북한기업의 행동 양식 및 지배구조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행태 변화와 시장의 발생과 확산

가. 계획화 체계의 해체와 시장관계의 발생

1980년대까지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비록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북한 기업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자원을 축장하고, 계획당국과 협상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에 뇌물을 주는 등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가 요구하지 않는 행위들을 했지만 계획에 기반을 두어 기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요구에 전반적으로 순응했다고 할 수 있다.

70) 1980년대 기업관리체계의 부분적인 분권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그러나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 위기 이후 기업은 공식적인 제도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여전히 공식적인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계획이 요구하는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위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기업은 노동자들의 생존까지 스스로 책임지도록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북한의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업 행태의 변화는 계획화의 전 과정 즉 계획의 수립, 생산, 물자조달, 생산물의 처분, 계획의 평가 등에 있어서 기업과 계획기구, 기업과 감독기관, 기업과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이 과정은 결국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는 생존을 위한 기업의 행동양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 계획 수립과정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있어 계획 작성 체계는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있지만, 계획의 성격은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이론적으로 계획수립 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상급기관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방식의 계획수립 과정은 기업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계획 달성을 위한 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수립되고, 하달되는 것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 당국 역시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계획 작성 시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계획이 수정되며, 계획 작성 과정에 있어 기업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계획의 내용도 변화되었는데, 특히 현물지표에 비해 액상지표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사실 현물지표·액상지표 간의 갈등은 8·3 인민 소비품제도가 생긴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계속되었다. 현물 계획의 달성이 점차 불가능해

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기업들은 사전에 계획화되기는 하지만 생산총액 상으로 조절하기 쉬운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통하여 계획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후 8·3 기업의 생산에 있어 8·3 인민소비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자재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쉬울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었다. 계획 당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대략 1990년대 중반 이후 액상계획의 달성만으로도 계획의 달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계획 실행과정

(가) 생산

생산물 조합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이 1990년대에 크게 강화되었는데, 이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극심한 물자난 속에서 계획화된 제품 중 자재와 설비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행위를 계획당국이 묵인 내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계획달성에 유리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것은 계획경제의 모든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생산지표 내의 생산물 조합을 변경하여 액상계획을 달성한다는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거래를 위한 판매를 고려해서 수요자가 많고, 가격이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화학공장 출신 탈북자는 “지배인과 당비서 등이 토의해서 계획기간에 주로 생산할 제품을 결정한다. 이 때 공장의 주요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제품을 정하고, 생산을 하면 성공하는데, 지배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잘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면 그 공장은 실패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미 기업의 주요 구성원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계획에 따른 생산이나 액상계획의 달성 여부보다는 시장 수요와 가격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 내에서의 생산물 조합의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의 기업의 자율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생산물의 도입에는 8·3 인민소비품의 도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식 자재로 8·3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주된 생산품을 부분적으로 바꾸어서 8·3 제품으로 생산하

거나, 또는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8·3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조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8·3 인민 소비품의 생산은 매우 시장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제품이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생산이 가능한 거의 모든 공장·기업소가 이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물론, 생산에 대한 중앙당국의 통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당국의 통제 방식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즉, 생산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계획에 기초한 사전적 조정보다는 직접적인 명령에 의한 사후적 조정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는 주로 중앙의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사실상 사전, 사후적 조정이 포기되고 있다. 이렇게 중앙 당국에 의한 생산의 조정이 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산업공장 등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조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재를 가지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획화는 그 의미가 크게 상실되었다.

(나) 자재조달 및 생산물 처분

1990년대 이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동양식과 관계의 발생은 생산을 위한 자재조달과 생산물의 처분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된다.

자재조달 분야는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와 실질적인 기업 행태간의 괴리가 가장 큰 분야의 하나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하면 협동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는 상위기관이 하부기관에게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 초중반까지는 ‘계획’이 기업이 생산을 위한 자재를 조달하는 기본통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었다. 즉, 공급받는 기업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계획화된 만큼 물자가 공급되지 못했고, 그나마 공급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에 큰 차지를 빚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에 의해 생산을 위한 자재가 공급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계획 이외의 루트를 통하여 자재가 공급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계획에 의한 자재의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계획화에 의한 자재의 조달이 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되고,

생존을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자재조달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경제위기가 막 시작된 1990년대 초반에는 계획화 틀 내에서 자재를 조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에 따른 자재공급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였으며, 기업들은 가능한 한 이틀 내에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석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기업이 종업원들이 도토리를 따 와서 술을 빚어 이 술을 탄광의 지배인 등에게 뇌물을 주고 석탄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자재난이 더욱 악화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계획화된 공급선이나 아니냐는 거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계획화되어 있던 그렇지 않은 모든 자재는 계획에 표현되는 국정가격 이외의 웃돈이 붙거나,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물자를 제공하여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생산을 위한 자재가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서 조달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자를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하여 조달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물자에 대해서 가격이 설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공급받기로 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주고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더라도 특별한 관계나 영향력 등을 동원하던 것에서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지불하고 자재를 구입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A라는 기업에서 물자를 조달받았으면 물자는 거기서 나온다. 자재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계획화된 대로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 회사도 살아나가자니까 처음에는 웃돈을 받았다. 그래서 거래가 행표⁷¹⁾+웃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게 점점 확대되어 1994년도 이후부터는 실제 행표거래는 의미가 없어지고 웃돈 즉, 현찰이나 현물이 가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설탕 10톤을 공급한다고 하면 톤당 얼마라는 가격이 설정된다. 우리는 분명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설탕 생산하는 기업은 줄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고,

71) 행표란 기업 간의 무현금 거래를 위한 일종의 수표와 같은 것이다. 이 행표는 각 기업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자리(구좌)’에 기반을 두어 발행되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행표가 현금을 대신한다는 의미보다는 거래 확인증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실제 거래는 톤당 얼마다 하는 암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⁷²⁾

이렇게 기업들에 의한 물자의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0년대 기업 간의 거래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물자를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조달하고, 이를 통하여 생산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기업 간 물자조달은 북한 기업들이 1990년대의 환경에서 생존해 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물물교환은 비록 시장가격과 유사한 가격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런 면에서 전국적인 균형을 지향하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 비해서 오히려 퇴행적인 자원배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재조달과 생산물의 처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상이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에서는 기업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은 그 공급처가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즉, A기업의 생산물은 B기업의 투입물이 되며, 이 두 기업 간의 공급관계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이 두 기업 간의 공급관계는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생산을 위한자재의 조달과 생산물의 처분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계획당국이 개별적으로 명령하거나 특별하게 공급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이 임의로 생산물을 처분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기업은 계획화된 공급선뿐만 아니라 계획화되지 않은 기업, 그리고 비공식 부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생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업은 생산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재를 구입하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100을 만들었다 하면 한 30정도가 계획대로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30~40은 휘발유라든가 하는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소 등에 판매된다. 그리고 또 20~30은 종업원들의 생활비 지급을 위해서 장마

72) 자재상사 사장 출신 탈북자. 이하 탈북자의 인터뷰 내용 중 1990년대 상황은 2002년 필자가 행한 인터뷰 자료에 근거하며, 2002년 7·1 조치 이후 내용은 2007~2008년에 행한 인터뷰 자료에 근거함.

당 등에 판매된다. 결국 전체 생산물의 30% 정도가 공식적으로 국가에 납부되고, 나머지 70%정도는 암시장으로 나가는 셈이다.⁷³⁾”

위의 사례는 중소기업의 경우인데, 대규모 중앙공장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물에 대해 기업이 일정하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계획의 평가 및 기업에 대한 감독

계획 자체가 점차 형식화되어 가고, 중앙당국이 스스로 계획과 무관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하여 생산과 자재공급을 추구함에 따라 계획의 평가 역시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 대규모 중앙공업에 대한 평가는 연안계획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특정의 생산 지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형식적으로 되어 가는데, 액상계획만 수행하면 계획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많은 점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기는 하지만, 독립채산제가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액상계획을 달성하고,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당국뿐만 아니라 중간관리기구와 기업 간의 관계 역시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 중간관리기관은 산하 기업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통제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생산과 투자를 확대시키려는 유인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은 중간관리기관과 일정하게 협상하고, 타협하여 자신의 입지를 유지해 나간다.

1990년대 이후 중간관리기관을 비롯한 상급 기관의 기업에 대한 물자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됨에 따라 이에 따라 기업과 중간관리기관 간의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기업으로서의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줄 능력이 없는 중간관리기관과의 관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 중앙공업의 경우 중앙에 의해 직접 통제되기 때문에

73) 자재상사 사장출신 탈북자.

중관관리기관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관계 자체가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방공업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즉, 확산되고 있는 기업 간 거래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간접적 승인 행위를 통하여 기업의 행위에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지방행정기관 간에는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1) 내부자들 간의 담합과 의사결정권한 배분구조의 변화

대안의 사업체계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지배구조와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당비서와 지배인의 역할분담이다.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지배인은 기업을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기사장은 생산을 책임진다. 당비서는 기업 내의 조직사업을 담당한다. 조직사업이란 지배인을 비롯한 기업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통제·감독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기업소 당위원회’에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비서에게 기업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업경영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업 내 의사결정 권한을 둘러싸고 지배인과 당비서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990년대 들어 계획의 수행 자체가 극히 어려워지고, 심지어 생산의 지속 그 자체가 기업 관련자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계획의 수행, 혹은 생산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단순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당비서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계획의 수행, 나아가서는 생산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당비서가 지배인에 대한 통제·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비서와 지배인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인과 당비서가 일정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거의 모든 탈북자들은 ‘잘되는 공장은 지배인과 당비서가 융화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당비서와 지배인간의 융화라는 것은 결국 당비서가 일정하게 지배인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제도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물자와 식량을 보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배인은 생산을 위한 물자를 조달하고,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규정과 법규를 우회하거나 어겨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당비서의 역할이 지배인의 공식제도로부터의 일탈행위를 통제·감독하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기업의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당비서는 적극적으로 지배인의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방관하거나 하게 된다.

당비서가 지배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즉, 현실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는 않지만 생산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배인과 당비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당비서의 역할 중 지배인에 대한 통제·감독의 역할은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외부 검열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 당비서가 당 조직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 이를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생산의 지속 필요성에 따른 당비서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결국 부분적으로 지배인의 기업 내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특히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 그 자체가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즉, 기업이 생산물의 처분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게 되고, 생산물의 처분을 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재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의 임금 혹은 식량을 조달하게 됨에 따라 생산물 처분에 있어 통제권이 강한 지배인이 기업 당비서 등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0년대 기업 내부지배구조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기업 내부의 부분적인 분권화 경향이다. 당비서와 지배인 간의 의사결정 권한 배분상황이 미세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하부단위로 의사결정 권한이 부분적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자공급체계의 붕괴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인 통제

권을 확보하게 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산을 직접 담당하거나, 물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간부들의 권한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직장장 등 중간 간부들이 생산물의 처분, 자재의 조달, 생산물 조합의 결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확보하였다. 이는 사전에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현장에 가까운 간부들의 결정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⁷⁴⁾ 지방 산업공장의 책임기사 출신의 탈북자는 생산을 위한 자재조달을 위해 생산물의 처분권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권한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 종업원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⁷⁵⁾

생산, 자재의 처분 등 기업의 제반 경영활동이 계획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같은 이유로 기업 내 하부 단위에 의한 독자적 판단의 필요성도 부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의 자율성과 함께 기업 내 하부 단위의 자율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내부에서 생산이나 자재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간부들의 권한이 부분적으로 강화되고, 기업의 주요한 경영행위가 공식적인 제도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의사결정도 소수의 기업간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자재가 부족하여 생산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를 특정 직장장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배인과 당비서, 그리고 해당 직장장, 자재 관련 기업소 간부가 따로 비공식적으로 회동을 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이 회의에서 예를 들어 석탄을 얼마 내어 줄 테니 팔아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라는 결정이 내려지

74) “직장장에게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탄광의 건설 부문에서 30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직장일을 했는데,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직장에 떨어진 시멘트와 같은 자재를 농촌에 몰래 판매하고, 이를 가지고 생산을 위한 자재와 노동자들에게 배급할 식량을 구해야 한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정책대로 해서는 직장장이라는 의무를 한 달도 수행하지 못한다.” (안주탄광연합기업소 부직장장 출신 탈북자).

75) 종이공장 책임기사 출신 탈북자.

고, 이 결정에 따라 직장장이 석탄을 공급받아 자재를 구입하고, 생산을 한다.”⁷⁶⁾

이러한 비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은 권한이 부분적으로 확대된 소수에게 기업경영과 관련한 정보가 집중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정보의 집중과 불균형은 기업 간부들 간의 담합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2) 국가-기업-노동자 관계의 변화

계획화 체계가 약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앙당국이 규정하는 임금체계는 화폐임금이 그 의미를 상실하면서 실효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 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 1980년대 후반 경우에는 이미 화폐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물며 생산을 통한 기업의 유지 자체가 극도로 위협받게 된 1990년대에는 단순히 기업에 소속되어 노동한다는 것만으로는 화폐임금을 취득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에 의한 배급이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국가-기업-노동자간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식량 및 생필품 배급을 수단으로 한 국가의 노동자 통제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고, 이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기업이 지게 되었다. 기업이 어떻게든 생산하고, 돈을 벌어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이다.

“1995년경부터 기업소 노동자들의 생활은 기업소가 책임지라는 지시가 위로부터 분명하게 하달되었다. 이를 위해 기업소 생산물을 일정하게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⁷⁷⁾

아무리 노동자의 생계를 기업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기업-노동자 관계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부양하는 관계는 아니

76) 안주탄광연합기업소 부직장장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다. 이 외에도 많은 탈북자들이 지배인이나 당비서의 집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증언하고 있다.

77) 성진제강소 여맹지도원 출신 탈북자.

다. 생산의 지속이 최대의 목표였던 1990년대의 북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기업의 모든 종사자들을 동원하였으며,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생산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재조달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생산물을 암시장에 판매하여 기업의 화폐수입 확보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결과 노동자들은 기업으로부터 화폐 임금을 지불받거나 식량, 혹은 식량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업 생산물을 배분 받았다.

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과 노동자간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상호의존 관계가 발전하였다. 생산여건이 악화되어 공장에 출근해서 일할 거리가 많지 않게 되자 기업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은 액상 계획을 달성하고, 노동자들에 일정한 임금(화폐 임금이든 식량 혹은 생산물 임금이든)을 지불하기 위해서 화폐적 수입이 필요한데,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필요한 화폐수입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다.⁷⁸⁾ 노동자들은 기업에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그 반대급부로 출근하는 대신 장사를 하든지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일정금액을 회사에 지불하고 일 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탈북자도 있었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무단으로 기업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받게 될 법적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가끔 자재가 조달되어서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식량 등이 배급될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출근하여 노동하면 생산물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노동자도 생산이 이루어질 때는 수시로 출근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특정한 시기에 식량 등의 배급이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기업에 적을 둔 사람들에게만 배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적을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자체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기업 외부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해안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일이 성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78) 생산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부에서 금을 노동자 당 얼마씩 바치라는 지령이 내려오는데 노동자들이 금을 바칠 능력이 없다. 몇몇 사람이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장사하는 대가로 전체 노동자들이 바쳐야 할 금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 고 한다(천연스레트공장 사로 청 위원장 출신 탈북자).

경우도 있지만 기업 자체에서 조직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일종의 보험처럼 기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보험기능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노동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수취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의 계약과는 다르지만 기업과 노동자간에 일종의 초보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간의 이러한 관계는 주로 지방 산업공장에서 발생하며, 대규모 중앙공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식량을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생산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대규모 중앙공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대규모 중앙공장 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대규모 중앙공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훨씬 엄격하여 기업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이탈은 훨씬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당 조직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기업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당 조직에 의한 정치사업에는 참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산된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노동자들도 이러한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종업원 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장사나 외국에 있는 친지의 도움 등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노동자들은 기업 지배인 및 당비서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당 조직의 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⁷⁹⁾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및 당의 노동자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 공백을 기업과 노동자간의 초보적인 계약관계가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자유로운 계약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아직 본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법적인 수단에 의해 기업, 실제로는 국가 및 당에 종속된다.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것이 노동자에 대한 지배인의 통제력이 강화

79) 성진제강소 여맹 지도원 출신 탈북자.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인은 여전히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 등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지배인과 노동자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라기 보다는 생산의 지속과 생존을 위해 국가의 형식적 통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담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기업에 의한 시장관계의 자기조직화와 확산

(1) 자발적인 시장화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 경제의 조정양식인 계획화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즉,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라는 극단적인 사전적 조정 양식이 약화되고, 기업 간 거래라는 일종의 사후적 조정 양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양식은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나 당국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일탈행위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다. 사실 공식적인 제도로써 ‘일원화·세부화’ 계획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반면, 이 제도를 뒷받침할 물질 토대가 붕괴된 상황에서 계획당국이나 중간관리기관 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기업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여야 아니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였는데, 1990년대 북한 당국은 새로운 관계를 암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였다.

기업들은 공식적인 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재생산의 지속을 위해서 새로운 행동 양식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은 계획화 체계에서 벗어나 물물교환이나 현금거래를 통해서 물자를 조달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처분한다. 이 때 물자의 조달이나 생산된 제품의 처분이 어떠한 명령이나 혹은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 혹은 기업과 개인 간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매개하는 것은 ‘가격’이다. 따라서 ‘일원화·세부화’ 체계를 일종의 시장조정양식이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 즉 생산의 지속을 위하여

사실상의 시장거래를 통하여 물자를 ‘구매’하고,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가 1990년대 북한 기업 행동양식 변화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1990년대의 자발적인 시장화가 물물교환이라는 퇴행적 형태로 발현되기는 하였지만, 이 기업 간 거래는 1990년대의 극단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일부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생존을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업간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인 시장화라는 새로운 행태의 발생은 기업과 기업외부의 감독기관간의 관계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물자공급능력이 약화된 중간관리기관의 역할이 형식화되고, 동시에 공식적인 제도를 우회하기 위하여 기업과 중간관리 기관이 담합하기도 한다.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을 지속하는 기업은 생존을 위한 가치의 근원이 되며, 이 생존수단을 둘러싸고 기업과 기업외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감독기관 및 권력기관도 이 새로운 관계에 포섭되고 있다.

사실 기업의 일탈행위는 1990년대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계획화 체계에서 벗어난 행위는 항상 존재해 왔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 하에서 공식적인 기업관리제도가 행위적/기능적 정합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일탈행위들이 강화 피드백을 통하여 확산되고, 증폭됨에 따라 시장화라는 형태로 자기조직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식적인 기업관리제도가 기업들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일탈 행위가 사전에 계획화되지 않은 거래라는 일종의 시장관계를 창출해 내었고, 이러한 시장관계가 기업의 재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함에 따라 자기 조직화되고 확산되어 나간 것이다. 새로운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생존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사멸되었다. 계획화 체계를 우회한 기업간 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계획화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물자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며, 이는 다시 계획화되지 않은 관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업간 거래가 확산되어 나가는, 말하자면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화 과정은 기업과 계획기구, 중간관리기관, 감독기관 간

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이들 관리 및 감독기구들이 기업에 의한 시장화를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제도화라는 형태의 선별 과정이 이 시기에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일종의 사회적 선별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에 의한 자발적 시장화는 사회적으로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관리 및 감독기구와의 관계 변화는 기업경영의 제 측면에서 통제권이 중앙당국으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며, 기업에 대한 외부 감독기관의 감독·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즉 내부자 통제(inside control) 경향⁸⁰⁾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기업이 획득한 통제권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라기보다는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권의 측면이 강하고, 이런 점에서 내부자에 의한 국유자산의 침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90년대 기업에 의한 자발적 시장화는 공식적인 제도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시장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거래가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시장관계가 합법의 영역에 속하지 못하고, 당국이 현금거래를 강력하게 통제하였으며, 화폐적 거래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현금이 기업 내부에 축적되거나 유통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간, 혹은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현금거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기업간 거래, 특히 대규모 국유기업 간의 자발적인 거래의 대부분은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비록 물자간 상대가격이라는 일종의 가격이 거래를 매개하였지만, 현대적인 대규모 기업간의 물물교환이 효율성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특히 전국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규모 중앙기업간의 교환이 석탄-식량, 석탄-식량-기계 간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계획화 체계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던 전국적인 규모의 조정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물교환은 개별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며, 그런 점에서 1990년

80) 내부자 통제 개념은 Aoki, M., "Controlling Insider Control: Issu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 Economies," in Aoki, M. and H. Kim eds.,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al Economies*, 1995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대 북한경제의 재생산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교환이 매우 국지적인 규모에서의 조정만을 이룰 수 있을 뿐이며,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조정은 오히려 파괴한다는 점에서 계획화 체계에 비해서 퇴행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북한의 자발적인 시장화는 퇴행적 시장화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생존을 위한 내부자들의 담합과 새로운 관계의 발생

생존을 위하여 생산의 지속 그 자체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됨에 따라 생산을 직접 장악하고 있는 지배인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기업 내 부분적인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생산 활동에서 당비서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공장장 책임제하의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중앙당국의 정책변화보다는 생존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시장화에 의해서 촉발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 기업 특유의 현상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지배인이 기업경영에서 통일적 권한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 조직의 기업경영으로부터의 분리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향후 자발적 시장화가 진전되어 나감에 따라 지배인과 당비서의 역할분리는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체계의 붕괴는 이 체계에 착근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 확립된 거래관계, 거래 파트너에 대한 정보 등 체제특수적 자산의 가치를 크게 감소시킨다. 반면 자발적 시장화에 따른 새로운 거래관계의 형성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이러한 거래관계의 형성 자체가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생산과 물자조달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지배인은 새로운 거래관계의 형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을 거의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발적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생산과정의 장악력이라는 점에서 지배인과 당비서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의 정치·사회적 지위의 약화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국가 및 당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기업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역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현금수입을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는 기업에 화폐소득을 지불하고,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에게 종업원이라는 지위를 제공하는 초보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형식상 기업에 적을 두고 장사 등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당 조직이 이들을 정치사업 등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는 법적인 강제 이외에는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인 강제 역시 전라적인 부문이 아닌 지방산업공장 등에서는 그 유효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앞에서 이미 북한에서도 초보적인 내부자 통제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자 통제경향의 성격을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내부자들은 구소련·동구나 중국 기업의 내부자들과 달리 새롭게 획득한 통제력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생존, 즉 생산의 지속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제도가 기업의 재생산을 보장해 주지 못함에 따라 생산을 통한 생존을 위해 기업 내·외부자들 사이에 담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배인과 당비서간에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일종의 부분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공식적인 규제체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당비서의 기업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그 필요 영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당비서들이 지배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비공식적인 경영 활동을 소극적으로 묵인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배인과 경영자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분권화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기업간부들과 노동자 등 기업 내 전 구성원들도 광범위한 담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중간관리기관이나 감독기관간에도 담합관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담합의 목적은 기업생산의 지속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생산물의 배분에 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 기업소득이나 국유자산의 침식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담합은 공식적인 체제가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내부자에 의한 기업소득의 자의적인 재분배가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적극적인 이익의 추구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990년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부자 통제는 구소련·동구나 중국에서 발전한 ‘이익추구형’ 내부자 통제와는 구분되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라고 할 수 있다.⁸¹⁾

3. 국가에 의한 선별로서의 7·1 조치

가. 7·1 조치와 기업관리체계

기업관리, 특히 앞 장에서 검토한 계획화 과정에 있어서의 기업의 통제력 강화와 기업에 의한 자발적 시장화라는 관점에서 7·1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화 과정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계획화의 영역의 축소, ‘기업에 의한 계획’의 영역 확대, 계획 이행과정에서의 기업의 자율성 확대 등 계획화 전반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계획화의 영역은 국가에서 자재를 공급해 주는 주요 생산영역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북한의 기업관리체계가 크게 중요하고 있어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화 시스템 전반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물자의 공급을 책임지는 일부 생산영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계획화의 주도권이 기업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계획화 체계가 해체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 계획화의 원칙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규정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기업의 비공식적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에는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에 의해서 일원화·세부화·계획화 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81) 북한 내부자 통제 성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둘째, 시장 거래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시장과 관련하여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임금 및 가격체계의 부분적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화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공장·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시장에서 공산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이 사실상 허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83 제품이든 혹은 생산재이든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지만, 기업소 차원에서 이들 제품을 종합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의 영역에 속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업 간 거래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1990년대의 기업 간 물자거래는 합법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계획당국의 묵인 하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 간 물자교류의 제도적 제한성 때문에 물자거래는 물물교환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승인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애초에 불법이었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진전이다. 그리고 공식적 체계와 비공식적 행동양식간의 괴리가 심한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승인과정이라는 것이 기업 간의 거래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기업 간 거래에 있어 현금거래가 적어도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는 기업 간 거래가 묵인되는 상황에서도 현금거래는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되었다. 그 결과 기업 간 거래는 물물교환이라는 퇴행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 간 거래의 형태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1) 국가에 의한 시장화의 사후적 승인

공식적인 제도가 재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 간 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관계들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갔다. 그에 따라 기업 간에도 일종의 시장과 유사한 관계가 구축되었으며, 기업과 기업 외부, 그리고 기업 내부자들 간의 관계 역시 변화되어 나갔다. 그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기업운영 양식 간의 괴리는 점차 확대

되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관계는 상당한 순기능을 하였으며, 당국 역시 이러한 순기능을 인식하고,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에 사회적 선별 과정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기업에 의해 촉발된 자발적인 시장화가 북한 경제의 생존에 기여하기는 하였지만, 당국으로서는 공식적인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계속 방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가 북한 경제의 재생산 과정을 규정하는 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한편, 이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계획규율의 강화’를 통하여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의 현실적 규정력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체제에 긴장을 주지 않는 부분부터 변화된 현실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현실과 공식적 제도와의 갈등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선별과정에서 주어진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경까지 ‘계획규율의 강화’를 통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장마당에 대한 주기적인 규제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계획의 합리화와 계획규율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계획규율의 강화’를 통하여 모순을 해결하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를 위한 물적 토대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방향의 선별 시도가 약화되고 있는 제도의 기능적, 행위적 정합성을 결코 강화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경부터 북한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획규율 강화 전략으로부터 계획화 체계의 현실화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2002년 7·1 조치는 이러한 전략변화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7·1 조치의 입안과 이행은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에 대한 또 다른 국가 차원의 선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1 조치 이전 기업 실무자를 비롯하여 각 층위의 관련자들의 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선별된 정책들이 7·1 조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은

이 조치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선별과정, 혹은 사후적인 승인과정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7·1 조치를 통하여, 기업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창출되고, 확산되었으며, 사회적 승인을 받았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제도의 외곽에 머물렀던 시장관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제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선별과정으로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어느 정도 행위적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대체적으로 이 조치가 기대하고 있는 방향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전체 경제운영 체계의 변화가 아닌, 매우 부분적인 조치이며,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모순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가진 기능적 정합성의 문제를 크게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능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의 붕괴라는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인 시장화, 그리고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한 제도화라는 경로를 지나면서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원형으로부터 시장적 요소가 도입된 새로운 형태로의 진화 과정의 일단을 완료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신념체계로서의 자력갱생의 확산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에 미친 영향은 일부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7·1 조치는 배급제를 크게 수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다. 7·1 조치가 배급제를 전면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배급제가 거의 작동이 멈춘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시장 가격에 기초한 가격의 조정, ‘변수입’ 제도의 도입 등 시장 요소의 도입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7·1 조치는 사회주의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종업원들을 책임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자재를 조달하여 생

산하고,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여 식량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 심지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되게 된다.

소위 ‘자력갱생’은 이미 1990년대에 북한 경제주체들에게 강요된 현실이었다. 이렇게 강요된 자력갱생은 북한 기업과 기업내부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활용하도록 추동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7·1 조치는 북한 당국이 암묵적으로 요구한 자력갱생을 공식적인 신념체계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력갱생은 사회주의와 함께 사회의 주요 구성원리가 된 것이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신념체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장을 이용하든, 구조조정을 하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의 종사자들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기업들은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연성예산제약’이 아닌 ‘경성예산제약’하에 있는 기업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나. 7·1 조치 이후: 새로운 일탈행위와 자기조직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1990년대 기업에 의해서 촉발된 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자발적 시장화를 부분적으로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공식적인 제도와 현실적인 경제행위 간의 간격을 줄이고, 새로운 관계가 주는 잠재적 이익을 흡수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7·1 조치가 1990년대 아래로부터 발생한 변화들을 모두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일원화·세부화’ 계획 체계와 대안의 사업체계는 여전히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 내에서 기업간 거래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거나, 자재의 조달 및 생산물의 처분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불법 혹은 반 합법의 영역에 속하였던 행위들이 합법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공장 간부들에 의한 자체적인 물자확보 노력이 1990년

대에는 ‘계획규율’을 어기는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 생산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행위가 된 것이다. 생산된 제품의 처분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간 거래를 통한 처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시할 수 없는데, 현금거래의 확립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90년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간 물자거래에서 현금거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 물물교환이라는 퇴행적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 도입되고, 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임의 처분권이 부분적으로나마 용인됨에 따라 기업간 물자거래에 있어서 물물교환이라는 제약이 제거되었다.⁸²⁾

뿐만 아니다.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이전에 불법·비합법의 영역에 머물렀던 행위들이 합법적인 행위로 승인함으로써 제도와 기업 행위간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제공한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기업 간 거래가 그러한 영역에 속한다. 7·1 조치는 기업 간 거래를 위하여 일종의 도매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기업들은 물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에서의 거래보다 시장을 통하여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고, 판매한 대금으로 필요한 자재들을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후자의 행위는 여전히 비공식적 행위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7·1 조치가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라는 공식적인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합법·비합법을 포함한 기업 간 거래 시장 자체가 보다 확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7·1 조치는 이 조치를 도입한 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1990년대 기업에 의해서 촉발된 새로운 관계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재만 조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시장에서의 수요만 있으면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한다.⁸³⁾ 공식적인

82) “자재는 현금을 주고 사온다. 이전에는 행표만으로 거래하게 했는데, 이제는 아무렇게나 필요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설비조립연합기업소 출신 탈북자).

제도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탈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새로운 신념체계로서의 자력갱생의 전면화는 시장을 활용하는 기업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일탈행위들이 확산되고, 자기조직화하는 것을 촉진한다.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시장관계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력갱생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시장관계도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신념체계가 요구하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전면화는 또한 7·1 조치는 기업 내부자 간의 권한배분 구조의 변화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7·1 조치가 지배인과 당비서, 지배인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 등에 관한 명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의 변화를 사회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지배인 등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내부자들의 상대적인 권한강화 경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7·1 조치 이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은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 강화는 제도로써 주어졌다기보다는 자력갱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가 결과적으로 승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지배인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라인에 대한 노동자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통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특정 정책 등을 위하여 기업에 신규 노동력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종종 기업의 의사에 반한 신규 노동력 배치를 무산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력을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게 된 기업들로서는 필요한 노동력만을 보유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실업’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노동력의 배분은 기업이 아니라 당조직 및 노동자관리구 등 행정조직의 권한이다. 따라서 신규

83) “자재를 조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어디에서 물자를 조달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8·3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된다.” (남포항 재정경리부 출신 탈북자).

노동력의 배분을 둘러싸고 기업과 당조직 및 행정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은 적어도 원치 않은 신규 노동자를 거부할 실질적인 권한은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⁸⁴⁾⁸⁵⁾

마지막으로, 7·1 조치 이후 확산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포착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기관, 기업과 기업 등간에 새로운 계약관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확산되고 있다.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특정의 기업이나 기관에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스스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있지만, 그 권한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권한의 일부를 양도하기도 하며, 일정한 자금력을 가진 개인이 기업이나 기관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기업이나 기관 소속이라는 자격을 획득하여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개인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어 이러한 관계가 기업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아직 없지만, 제한적이지만 생산수단을 가지고 기업이나 기관과 계약관계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그 예의 하나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평양 등지에서 신의주로의 여객의 수송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신의주로 가고자 하는 개인들은 상당한 지불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국가기관이 충분한 수송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이 형성된다.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업소나 기관이 버스를 살 수 있는 개인에게 버스 사업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버스 사업을 하도록 하며, 이 사업가는 자신이 구입한 버스를 가지고 일종의 여객 수송사업을 하는 것이다.⁸⁶⁾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발전하여, 평성이나 신의주 등에는 비공식적인 터미널이 형성될 정도라고 한다.⁸⁷⁾

84) 기업의 불필요한 신규 노동력 배치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고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최근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성의 연령을 크게 높이고 그 결과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여성 노동자들을 기업에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기업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5호 참조.

85) “원치 않는 노동자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며,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 위에서도 어쩔 수 없다.” (설비조립연합기업소 출신 탈북자).

86) 기관·기업소와 개인 간의 계약 관계는 계약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소되며, 이 경우 버스의 처분권은 개인에게 주어진다. 버스를 소유한 개인은 계약 조건이 맞는 다른 기관·기업소와 계약을 맺어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 (설비조립연합기업소 출신 탈북자).

87) 평성-신의주간의 운임은 15,000원, 평성-순천간 운임은 3,000원 정도라고 한다.(친척 방문차 중국에 온 북한 주민).

최근 평양 등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매대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계약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회사를 창설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앞서 버스 운송사업의 예를 다시 들면,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기존의 기관, 기업소와 계약을 맺는 대신 지방 인민위원회 등과 계약을 맺어 버스 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체를 신설하고, 그 사업체의 사장이 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명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은 지방인민위원회의 소유가 되지만, 자산 처분권과 이익 수취권 등 실질적인 소유권은 버스를 제공한 개인이 가지게 된다.

비공식적인 계약관계는 기업과 개인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대외무역권의 거래가 대표적인 것인데,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광물, 수산물 등 1차산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대외 무역권은 없지만 중국 측과 직접 거래선을 가진 기업이 대외 무역권을 가진 기업소로부터 특정 품목의 무역권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여서 무역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관계는 기업이 재생산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하여 시장관계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윤이 목적이며,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이다. 즉, 새로운 일탈 행위이며, 공식적인 제도와 갈등의 소지가 훨씬 큰 일탈행위이다. 자력갱생이라는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해서 강화되고, 무역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관계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자기조직화 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 및 공식적인 신념체계와의 갈등 요소가 훨씬 크다. 최근 북한 당국의 대응은 새로운 계약관계의 이러한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4. 평가와 전망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기업은 공식적인 제도가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생산의 지속을 위하여 기업간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는 자재와 생산물에 대한 거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화’라고 부를 수 있다.

자발적 시장화는 공식적인 제도의 물적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기업내부

자뿐만 아니라 중간관리기관 및 감독기관 등 기업 외부자들에게도 생존의 수단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도와의 충돌 상황에서도 자기조직화가 진행되었다.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중간관리기관 및 감독기구들도 사실상 승인함에 따라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는 일종의 사회적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확산되어 나갔다. 그 결과 조정양식으로서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및 기업지배구조로서의 대안의 사업체제는 그 규정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제도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자발적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종의 시장조정이 계획화 체계의 공백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이중적 조정양식이 1990년대 북한경제의 주된 조정양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제의 복원을 위한 물적 토대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식적 제도로서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및 대안의 사업체제와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고, 확산되는 시장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 성과를 흡수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관계를 제도로 흡수하는 일종의 선별기제와 같은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치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와 기업 행동 양식 간의 간극이 부분적으로 축소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이 조치에 의해서 확보되고, 정당화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욱 확산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7·1 조치가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을 새로운 신념체제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계약관계를 포함한 시장의 활용은 쉽게 정당화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 및 이념체계와 생성 및 확산되고 있는 시장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기업행동 양식 및 일종의 신념체제가 되고 있는 자력갱생 간의 갈등이 완화되기 보다는 증폭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진화과정 즉, 급속한 체제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별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줄이거나, 혹은 새로운 행동양식 및 신념체제가 확산되는 것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2006년경부터 시도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는 북한 당국이 일단 후자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 사재기와 시세 조종 등 시장을 이용한 축재행위가 강력하게 비판되고, 통제되었다. 종합 시장 자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일반 주민의 상업적 활동 등도 제약이 가해졌다. 북한 당국의 통제가 주로 시장 유통의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은 7·1 조치 이후의 일탈행위가 단순한 상업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축적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적 행위의 확산은 배급제라는 공식적인 제도가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이다. 공식적인 식량 배급 체계를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량의 거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자력갱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이 아닌 결과에 대한 통제는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도 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와 달리 기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명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기업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대안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50일 전투와 같은 대중동원 방식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동원 정책은 노동력과 자원의 집중 투입을 통하여 단기간에 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 운영에 대한 상부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흐름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150일 전투와 같은 방식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1990년대 이후의 시장화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선별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이러한 선별 시도는 사회적 저항과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배급체계를 복구하는 것 역시 현재의 식량사정을 감안한다면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강요된 자력갱생이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는 관계가 생성되면, 강력한 제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한 다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확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확산되는 시장은 다시 이 시장이 창출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경제의 물적 토대가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한당국의 시도는 공식적인 제도와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행위 간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7:1 조치와 같은 선별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공식적인 제도로 승인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결국,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기존의 경제관리체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선별 및 제도화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일탈 행위에 의해서 자기조직화하는 시장화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체제내로 흡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탈 행위의 발생 원인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성과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관리체제를 포함한 북한 경제 시스템의 점진적인 진화, 혹은 진화 방향은 개별 행위자의 일탈 행위가 증가하고 시장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제도화해 나가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의 성과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이상직·최신림·이석기.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 서울: 산업연구원, 1995.
- 조동호.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최신림·이석기. 『북한의 산업관리체제와 기업관리제도』. 서울: 산업연구원, 1998.
- Aoki, M. and H. Kim, eds.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al Economies*. World Bank, 1995.
- Lee, Keun. *Chinese Firms and the State in Transition and Agency Problems in the Reform China*. M. E. Shape, Inc., 1991.

2. 논문

- 강응철.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 제도제일 주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002년 제4호. 서울: 한국경제학회, 2002.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의 경제개혁』. (2003년 제2회 북한전문가 워크숍 보고자료, 2003).
-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영흥. “계획화의 4대 요소를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는 것은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3년 제1호, 2003.

- 김은경. “북한의 경제관리에 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학위논문, 1993.
- 민족통일연구원. 『탈북자 면담자료』. (내부자료, 1996).
- 박영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의 영도와 혁명적 근증노선을 결합한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경제연구』. 1990년 제2호. 서울: 한국경제학회, 1990.
- 박영일.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우리식의 우월한 계획화체계이며 방법.” 『근로자』. 1990년 9월호.
- 박형중. “<노임 및 물가인상> 및 <경제관리의 개선강화> 조치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 연구』. 제14권 2호, 2002.
- _____. “<부분>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의 구분-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5권 2호, 2002.
- 신지호.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평가와 전망.” 『2002년,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분석과 평가』.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2.
- _____. “7·1 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7호, 2003.
- 양문수. “중국과 북한의 계획화 비교.” 『경제학연구』. 제49집, 2001b.
- _____.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양문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변화.” (남북경제협력포럼 발족기념 세미나 자료, 2003).
-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
- 윤덕룡·이형근. “북한의 물가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2권 24호, 2002.
- 이근. “중국식 사회주의 기업모델의 발전.” 이근 편. 『발전, 개혁, 통일의 제모델』. 서울: 21세기북스, 1994.
- 이근·한동훈. “중국 국유기업의 이중적 담합과 내부자 통제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2집. 현대중국학회, 1996.
-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성봉.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연구- 당, 국가, 기업소의 역할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번 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2년 제4호, 2002.
- 장인백. “생산수단 류통에서의 경제적 공간리용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2000년 제1호, 2002.
- 조명철. “추가적인 노동보수형태를 잘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를 높이기 위한 중요 담보.” 『경제연구』. 1995년 제1호, 1995.
- 한인호. “기업관리에서 원가공간의 합리적 이용.” 『근로자』. 1984년 7월호, 1984.
- Akamatsu, N. “Enterprise Governance and Investment Funds in Russian Privatization.” in Aoki, M. and H. Kim, eds.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al Economies*. World Bank, 1995.
- Aoki, M. “Controlling Insider Control : Issu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 Economies.” in Aoki, M. and H. Kim, eds.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al Economies*. World Bank, 1995.
- Berglof, Erik.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 Economies : The Theory and Its Policy Implication.” in Aoki, M. and H. Kim, eds. *Corporate Governance in Transitional Economies*. World Bank, 1995.
- Kornai, Janos.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4. No. 4 (December 1986).
- Lee, Keun and Hong-Tack Chun. “Secretes for Survival and the Role of The Non-State Sector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sian Perspectives*. Vol. 25, No. 2 (2001).
- Lee, Keun. “Between Collapse and Survival in North Korea: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Dilemma.” *MOCT-MOST: Economic Policy in Transitional Economies*. Vol. 7, No. 4 (1997).

제 7 장

맺음말



제7장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접근방법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존재하는가를 탐색하였고, 그 결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일반이론이라 할 수 있는 복잡계적인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복잡계적인 접근방법이 과연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복잡계적 방법이 동원될 경우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검토하였다. 우리가 이처럼 조심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복잡계적 접근방법을 굳이 검토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시장화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이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인 시장과 이행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정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외부세계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모두를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현안임에 틀림 없다. 북한경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주제에 매달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화에 대한 우리의 연구결과는 참담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북한의 시장화가 과연 북한경제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가’와 관련하여 서로 편을 갈라 양쪽을 노려보고 지내온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열정의 부족이나 기교의 부재와 같은 연구자들의 무능력에서 유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연구자가 이 주제에 매달렸으면서도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참담하다는 사실이 결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러한 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식의 갭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20년 전에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20년 전에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의 또 다른 20년 전에 이미 그 속에는 시장이 존재했고 또한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가 모두 무너지고, 또한 북한경제마저 무너진 이후 10년 동안 시장이 꽃을 피웠고, 이것이 다시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된 것은 그로부터도 10년이 지난 오늘의 일이다.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연구자의 인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날 북한의 시장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역시 이처럼 쉽고 필연적인 길을 답습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을 인식하기 위해 20년 전에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의 또 다른 20년 전에 나타났던 시장에 대한 기억을 투사했던 것이다.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우지만, 사람의 상상력은 역사의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먼 옛날 사회주의의 기억 속에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시장을 끄집어내어 오늘날의 북한에 대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란 생동하는 풍부한 역사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북한의 현실을 우리의 구닥다리 인식으로는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 바로 이러한 인식의 갭에서 기인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갭을 극복하지 않는 한 북한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우리의 성과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려한다. 우리가 이 글에서 듣기에도 생소한 복잡계적 접근방법을 검토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글에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복잡계적 접근방법이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방법 보다 더욱 우월하고 현실 적합한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이를 통해 북한시장화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우 전문적인 다섯 명의 연구자들이 작성한 다섯 편의 개별 논문을 하나의 연속된 장으로 묶어 이들을 모두 읽고나면, 마치 한 사람이 북한시장화 연구에 있어 패러다임 시프트의 필요성을 수미일관하게 논증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시도하였다. 이 글의 2장에서 기존 북한시장화 연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복잡계적 접근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토론하고, 이를 받아 3장에서는 과연

복잡계적 방법이 복한 시장화 연구를 위해 ‘맞춤 분석틀’을 제공할 있는가를 검토하며, 4장에서는 다시 이러한 맞춤 분석틀을 토대로 복한의 시장화 과정 전반을 재해석하며, 5장과 6장에서는 이러한 시장화 과정의 세부 사항인 기업과 개별 시장행위자의 행태분석을 시도한 것이 모두 이러한 논증의 느낌을 주기 위한 배치였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시도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앞서의 다섯 편 논문들을 또 다시 특정의 개인이 수미일관한 방식으로 재편집하여 제시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도는 각각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가 쏟아 부은 노력에 반하는 일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이들의 내용 모두를 읽어 낸 독자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쓴이들은 이 글의 내용에 대해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역시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단어의 생경함이나 내용의 생소함에 대해 다시금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경함과 생소함을 만들어 냈던 글 쓸 당시 우리들의 사고를 여전히 떠올릴 수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자극을 받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모든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은 생경하고 생소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생경함과 생소함이 가져오는 기분 좋은 자극이 있기에 누구나 한뼘쯤 새롭고 모험적인 시도에 나설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 글쓴이들은 이 글에서 비춰지는 생경함과 생소함이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자극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 글의 처음부터 끝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벌써 알아차리겠지만, 이 글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글의 2장에서 우리는 복잡계적인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기존의 복한 시장화 연구의 성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생산해낼 수 있음을 보이는 동시에,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도전하지 못했던 시장과 이행의 관계 등과 같은 문제들에서 전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가 시도한 부분은 전자뿐이다. 복잡계적 접근방법을 도입할 경우 복한 시장화 연구에서 어떤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는 아예 논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은 이 글의 후속 편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다만, 첨언한다면, 복잡계적 접근방법은 매우 유연하고 열린 방법론 체계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등장 했던 수많은 이행경제학(economics of transition)의 모델과 테크닉 같은 유산들뿐 아니라, 현대 경제학이 구축해 놓은 방대하고도 엄밀한 수리 계량적 분석기법 역시 모두 복잡계적 패러다임 속에서 숨겨진 공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도전하지 않았던 앞의 후자 부분을 보이는 일 역시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생경하지만 아름답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창욱·윤영수·채승병. 『이머전트 코퍼레이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로버트 액셀로드.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틱포택 전략』. 이경식 옮김. 서울: 시스템마, 2009.
- 미첼 월드롭. 『카오스에서 인공생명으로』. 김기식·박형규 옮김.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95.
- 민병원·김창욱 편저. 『복잡계 워크샵: 복잡계이론의 사회과학적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삼성경제연구소 편. 『복잡성과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스튜어트 카우프만. 『혼돈의 가장자리: 자기조직화와 복잡성의 법칙을 찾아서』. 국형태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 스티븐 존슨. 『이머전스』. 김한영 옮김. 서울: 김영사, 2004.
-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강병남 외 옮김. 서울: 동아시아, 2002.
- 에리히 얀치. 『자기조직하는 우주: 새로운 진화 패러다임의 과학적 근거와 인간적 함축』. 홍동선 옮김. 서울: 범양사출판부, 1989.
- 에릭 바인하커. 『부의 기원』. 안현실·정성철 옮김. 서울: 랜덤하우스, 2007.
-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질서 읽기』.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일리아 프리고진·이사벨 스텐저스. 『혼돈 속의 질서』. 유기풍 옮김. 서울: 민음사, 1989.
- 장은성. 『복잡성의 과학』. 서울: 전파과학사, 1999.
- 제임스 글리크. 『카오스: 현대과학의 대혁명』. 박배식·성하운 옮김. 서울: 동문사, 1993.
- 존 카스티. 『복잡성 과학이란 무엇인가』. 김동광·손영란 옮김. 까치글방, 1997.
- 토머스 셸링.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이한중 옮김. 서울: 21세기북스, 2006.

- 폴 크루그먼. 『자기 조직의 경제』. 박정태 옮김. 서울: 부키, 2002.
- Anderson, P. W., Arrow, K. J. and Pines, D., eds. *The Economy as an Evolving Complex System*. CA: Addison-Wesley, 1988.
- Arthur, W. B., Durlauf, S. N. and Lane, D. A., eds. *The Economy as an Evolving Complex System II*. MA: Addison-Wesley, 1997.
- Axelrod, R. *The Complexity of Cooperation: Agent-Based Models of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Badii, R. and Politi, A. *Complexity: Hierarchical Structures and Scaling in Phys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Benhabib, J. *Cycles and Chaos in Economic Equilibriu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Brock, W. Hsieh, D. and LeBaron, B. *Nonlinear Dynamics, Chaos, and Instability: Statistical Theory and Economic Evidence*. Cambridge, MA: MIT Press, 1991.
- Butz, Michael R. *Chaos and Complexity: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Washington DC: Taylor and Francis, 1997.
- Byrne, David. *Complexity Theory and Social Science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98.
- Chia, Robert. *Organizational Analysis as Deconstructive Practice*. Berlin: de Gruyter, 1998.
- Dopfer, K. and Potts, J.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Evolution*. Oxford. UK: Routledge, 2008.
- Forrester, J. *Industry Dynamics*. Cambridge: Pegasus Communications, 1961.
- Granger, C. W. J. and Terasvirta, T. *Modeling Nonlinear Economic Relationship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Gribbin, John. *Deep Simplicity: Chaos, Complexity and the Emergence of Life*. London: Allen Lane, 2004.
- Gunderson, L. H. and Holling, C. S., eds. *Panarchy: Understanding*

- Transformations in Human and Natural Systems*.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02
- Haines, S. G. *Systems Thinking and Learning*. MA: HRD Press, 2000.
- Jervis, Robert.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Kantz, K. and Schreiber, T. *Nonlinear Time Series Analysi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Kauffman, S. A. *The Origins of Order: Self-Organization and Selection in 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Kelly, S. and Allison, Mary A. *The Complexity Advantage: How the Science of Complexity Can Help Your Business Achieve Peak Performance*. New York: McGraw-Hill, 1998.
- Lorenz, H. W. *Nonlinear Dynamical Economics and Chaotic Motion*. Berlin: Springer-Verlag, 1993.
- _____. *The Essence of Chaos*.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5.
- Magnusson, L., ed. *Evolutionary and Neo-Schumpeterian Approaches to Economics*. Massachuset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 Mainzer, Klaus. *Thinking in Complexity: The Complex Dynamics of Matter, Mind, and Mankind*. Berlin: Springer-Verlag, 1994.
- Mandelbrot, B. B. *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1982.
- Mantegna, R. N. and Stanley, H. E. *An Introduction to Econophysics: Complexity in Fi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May, Robert M. *Stability and Complexity in Model Ecosystem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Morowitz, H. J. and Singer, J. L., eds. *The Mind, the Brain,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Reading, MA: Addison-Wesley, 1995.
- Nelson, R. R. and Winter, S. G.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Sanders, T. Irene. *Strategic Thinking and the New Science: Planning in the Midst of Chaos, Complexity and Change*. New York: The Free Press, 1998.
- Scott, W. Richard. *Organizations: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2.
- Slaughter, Anne-Marie.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Sprott, J. C. *Chaos and Time-Series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Sterman, J. D.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MA: Irwin/McGraw-Hill, 2000.
- Watts, D. *Small World: The Dynamics of Networks between Order and Randomnes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2. 논문

- Achorn, E. "Integrating Agent-Based Models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ARE 2004 Papers, 2004.
- Allen, P. M. "Introduction: Knowledge and Complexity." *Futures*. Vol. 37, 2005.
- Anderson, Philip. "Complexity Theory and Organization Science." *Organizational Science*. Vol. 10, No. 3 (May-June 1999).
- Arthur, W. B.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Economic Journal*. Vol. 99, 1989.
- _____. "Positive Feedbacks in the Economy." *Science American*. No. 2, 1990.
- _____. "Complexity and the Economy." *Science*. Vol. 284, No. 5411, 1999.
- Ashby, W. R. "Principles of the Self-Organizing System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Vol. 37, 1947.

- Barnett, W., Medio, A. and Serletis, A. "Nonlinear and Complex Dynamics in Economics," *Mimeograph*, 1997.
- Baumol, W. and Benhabib, J. "Chaos: Significance, Mechanism, and Economic Applications."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1, 1989.
- Bialek, W., Nemenman, I. and Naftali, T. "Predictability, Complexity and Learning." *Neutral Computation*. Vol. 13, 2001.
- Brock, W. "Complexity-based Methods in Cycles and Growth," *Working Paper*, 1999.
- Bullard, J. and Butler, A. "Nonlinearity and Chaos in Economic Models: Implications for Policy Decisions." *Economic Journal*. Vol. 103, No. 419, 1992.
- Carlisle, Ysanne and McMillan, Elizabeth. "Innovation in Organizations from a Complex Adaptive Systems Perspective." *E: CO (Emergence: Complexity and Organization)*. Vol. 8, No. 1, 2006.
- Dosi, G., et al.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Differentiation: a Multi-Country Evolutionary Model."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3, No. 1, 1994.
- Dyson, F. J. "Statistical Theory of the Energy Levels of Complex Systems." *Journal of Mathematical Physics*. Vol. 3, 1962.
- Goldberger, A. L. et al. "Fractal Dynamics in Physiology: Alterations with Disease and Ag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99, 2002.
- Grassberger, P. "Toward a Quantitative Theory of Self-Generated Complex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etical Physics*. Vol. 25, No. 9, 1986.
- Hoffman, Chris. "Toward an Agent Based Model of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Summer REU Project, University of Notre Dame, 2002.
- Huberman, B. A. and Hogg, T. "Complexity and Adaptation." *Physica D*. Vol. 22, 1986.

- Kauffman, S. A. and Macready, W. “Technological Evolution and Adaptive Organizations.” *Complexity*. Vol. 1, No. 2, 1995.
- Krugman, P. “What Economists Can Learn from Evolutionary Terrorists.” Talk given to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Political Economy, 1996.
- New England Complex Systems Institute. “Visualizing Complex Systems Science: Characteristics of Complex Systems.” NECSI Research Project, 2005.
- Nowak, M. and May, R. M. “Evolutionary Games and Spatial Chaos.” *Nature*. Vol. 359, 1992.
- Polley, D. “Chaos as Metaphor and Science: Applications and Risks.” Paper presented at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1993.
- Rotmans, Jan. “Societal Innovation: Between Dream and Reality lies Complexity.” ERIM Inaugural Lectures Research in Management Serie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2005.
- Shalizi, C. R. “Methods and Techniques of complex Systems Science: An Overview.” *Topics in Biomedical Engineering International Book Series*, 2006.
- Simon, H. A. “The Architecture of Complexit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06, 1962.
- Stanley, H. E., et al. “Self-Organized Complexity in Economics and Fina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99, 2002.
- Thayer, Bradley A. “Bringing in Darwin: Evolutionary Theory, Realism,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2000.
- Watts, D. J. and Strogatz, S. H. “Collective Dynamics of Small-World Networks.” *Nature*. Vol. 393, 1998.
- Weaver, Warren. “Science and Complexity.” *American Scientist*. Vol. 36, 1948.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초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저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저	20,000원
2009-16	200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 '비핵·개방·3000 구상'을 위한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7,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01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공저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저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저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저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만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